

정책보고서 2006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강신욱 여유진

김진욱 김태완

최현수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6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강신욱 여유진

김진욱 김태완

최현수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수탁한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연구의 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제 1 장 서 론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8
제 2 장 빈곤 및 불평등 지수의 특징과 적용	14
제1절 빈곤 및 불평등 지수의 특징	1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6
제 3 장 빈곤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25
제1절 빈곤지수	25
제2절 분석방법	28
제3절 분석결과	29
제 4 장 불평등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76
제1절 지니계수	76
제2절 앳킨슨(Atkinson) 지수	86
제3절 타일(Theil) 지수	93
제4절 분위수 배율	97
제5절 분위별 점유율	109
제 5 장 양극화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120

제1절 울프슨(Wolfson)의 양극화 지수	120
제2절 에스테반-레이(Esteban-Ray)의 양극화 지수	122
제 6 장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수의 분해	138
제1절 쉐분해	138
제2절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152
제3절 엔트로피 분해	155
제 7 장 OECD 국가의 빈곤 및 불평등 지표 변화 추이	162
제1절 지표	162
제2절 주요 OECD 국가의 빈곤동향	163
제3절 Sen지수 분해	174
제4절 OECD 국가의 불평등 동향	178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85
참 고 문 헌	188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복지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의 확대와 방향전환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부분적으로 개선 각종 경제·사회지표들이 경기침체의 지속과 함께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작용하고 있지만, 멀리는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각종 사회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가 파급효과(trickle down effect)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정 부문 위주의 성장이 자동적으로 빈곤이나 실업,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근거한 정책방향의 재정립이 논의되려면 우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현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정책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는 핵심적 변수이다. 빈곤과 불평등의 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복지정책의 대상과 복지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빈곤율 변화 추이나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지표만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모든 측면을 파악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빈곤율이나 지니계수 같은 개별 지표만의 한계라기보다는 2차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소득 또는 부의 분포를 1차원적인 단일 수치로서 나타내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지표를 이용하여 전체 소득분포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보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실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과

계측이 뒷받침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지표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분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다양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표가 현실의 상이한 측면을 묘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각 지표는 기술적으로 표현되고 계측되지만, 그 이면에는 각각의 규범적, 혹은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표의 변화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를 1로, 한 사회의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상태를 0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의 효과를 지니계수의 변화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정책이 소득의 균등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일한 영역의 정책이더라도 세부 정책의 목표는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의 균등화를 1차적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빈곤층의 생활보호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정책적 효과는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변수는 빈곤율이나 소득격차비율일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빈곤효과는 빈곤율 변화에 의해, 빈곤층 소득보장효과는 소득격차비율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규범적 이유로 인해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표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 이르는 10년간의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은 1997년 경제위기의 시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새롭게 시행되었거나 확대 시행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시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전후한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추론하기에도 적절한 시기일 것이다. 비교적 장기간의 시기에 걸쳐 비교적 다양한 빈곤 및 불평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한 도시가계조사자료(1996~2002)와 가계조사자료(2003~2005)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 1인 가구, 농어촌가구, 근로자의 가구에 대한 소득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가계조사자료의 경우 근로자의 가구의 소득은 포함되어 있으나 1인가구, 농어가가구에 대한 소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구성에서 1인가구와 농어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가 빈곤층 등 저소득층의 실태를 정확히 표현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장기간의 추이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는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유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3~2005년의 자료의 경우 2002년 이전까지의 자료와는 달리 도시근로자 이외 가구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03년 이후 시기의 경우,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여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도시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지표추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2. 분석대상 변수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는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이다. 각 소득범주의 구분은 OECD의 기준을 준용하되, 동일한 소득범주에 대해 통계청 자료에서 이미 사용되는 명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랐다. OECD의 소득분류에 따르면,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체의 이전소득은 제외된 소득을 1차소득(primary income)이라고 지칭한다. 이 1차 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것이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다. 여기서 사적 이전소득은, OECD의 분류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개인간의 이전소득으로 예를 들면 부양금, 양육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이 1차 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값이 OECD 소득분류상의 총소득

(gross income), 우리나라 통계청의 분류에 따를 경우 경상소득이다. 그리고 경상소득에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를 제외한 크기가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OECD에서 빈곤 및 불평등 측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득 개념은 총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이라는 점이다. 즉, 국내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계산할 때 주로 이용하는 소득자료는 OECD의 총소득에 해당하는 경상소득이지만, OECD의 경우 총소득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제한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이라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OECD, LIS의 소득분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1-1> 통계청과 OECD 소득구분 비교

통계청			OECD					LIS
소득	비 경상 소득	경조소득 폐품매각 대금 기 타						
	경상 소득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1차소득 (Primary Income) ¹⁾	시장 소득 (Market Income)	총소득 (Gross Income)	가처분 소득 (Disposal Income)	가처분 소득 (Disposal Income)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 적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private cash ²⁾				소득세 + 사회보장 부담금	소득세 + 사회보장 부담금
			공 적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other cash benefit					

주: 1) LIS 자료에는 요소소득(Factor income)이라 명명함.

2) 정기적인 사적 이전소득, 즉, 부양금, 양육비, 기타 정기적으로 현금소득 등

자료: 여유진 외(2005)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지수의 변화를 비교할 경우 공적이전지출이 빈곤과 불평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지수의 변화를 비교할 경우에는 사회보험지출과 직접세가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

는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단, 기타 소득구성 범주가 미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절대빈곤율과 지니계수의 경우 몇 가지 소득범주를 추가하였다. 이때 추가된 소득범주는 1차소득과, 경상소득 -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지출, 경상소득 - 직접세 등의 세 가지이다.

3. 분석 단위

본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빈곤율의 경우에 한해 가구빈곤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표변화를 보여주는 각 <표>에서 제시된 도시근로자가구, 전체가구 등의 표현은 분석대상의 가구유형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지 가구단위의 분석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단위의 분석을 위해 원 데이터에서 제시된 가구별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이를 개인별 가중치로 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단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96~2005년까지 연 단위로 분석하였으나, 몇몇 지표의 분해결과를 분석하는 경우 바로 다음해와의 비교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교 시점을 1996, 1999, 2002,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4. 가구균등화지수

동일한 가구소득이 상이한 가구원수에 대해 갖는 실질적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흔히 가구균등화지수(equivalence index)를 사용한다. 가구균등화지수의 적용방식은 가구원수의 차이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가구원을 구성하는 성인과 아동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방법에 따라 가구단위로 파악된 소득이나 소비를 가구원수의 제곱근(\sqrt{n})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OECD와 LIS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고, 국내의 선행연구(정진호 외 2001, 박찬용 외 2002, 여유진 외 2005)들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경준·김대일(2003), 여유진 외(2005) 등을 참조할 것.

5. 연구의 내용

이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각 지표들이 갖추어야 할 성격을 설명하는 기본적 공리(axiom)에 대해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표들이 이 공리에 비추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각 지표들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 설명은 해당 지표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미룰 것이다). 2절 빈곤과 불평등의 추이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지표들을 이용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 또는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빈곤관련 지표들의 변화추이가 분석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곤율인데, 빈곤율의 추계는 빈곤선의 설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추계할 것인데, 절대빈곤율 추정 시 경우에도 연도별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2000년의 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타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것이다. 상대빈곤선은 각 소득범주별로 중위값의 40, 50, 60%선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산출된 빈곤선에 대해 빈곤격차비율과 소득격차비율을 산출할 것이다. 단 센지수(Sen index)를 구하는 경우는 상대빈곤선만을 이용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타일지수 등의 변화추이를 본다. 또한 전체 소득 및 소비의 분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수 배율과 분위별 점유율, 그리고 분위별 점유율의 비율을 의미하는 분위배율 등을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이른바 ‘양극화지수’로 최근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울프슨지수와 에스테반-레이지수, 개선된 에스테반-레이지수의 변화추이를 볼 것이다. 이들 지수의 변화를 별도로 고찰하는 이유는 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and Ray, 1994)가 주장하듯이 극화(polarization)라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불평등이라고 표현되는 현상과 개념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관측되는지를 보기 위해 지니계수와의 비교도 제시하였다.

6장은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된 지수의 분해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가구특성별 센 지수의 분해, 소득원천별 지니계수의 분해, 가구특성별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분해의 결과

를 제시할 것이다.

7장은 주요 OECD국가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장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지표가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며, 7장에서 분석되는 시기 또한 본 연구의 대상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8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제2장 빈곤 및 불평등 지수의 특징과 적용

제 1절 빈곤 및 불평등 지수의 특징

빈곤과 불평등을 계측하는 다양한 지수가 사용되는 이유는 각 지수가 빈곤 또는 불평등의 상이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빈곤 및 불평등 지수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성질로 여겨지는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바람직한 특성들은 공리(axiom)라는 형태로 제시된다. 이 공리는 일종의 규범적 가치와도 연관되는데, 각 공리로 표현되는 내용을 지수에 반영한다는 것은 공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지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공리들, 혹은 그 공리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모든 연구자들에 의해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고 쉽게 동의를 받기 힘든 것도 있으며, 매우 강한 조건이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표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빈곤지수가 지녀야 할 특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공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센(Sen, 1976)이 빈곤지수가 만족시켜야 할 두가지 공리를 제시하였는데, 단조성의 공리, 이전의 공리가 그것이다.²⁾ 단조성의 공리(monotonicity axiom)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빈곤지수의 값은 증가해야 한다는 공리이다. 빈곤층의 상태가 열악해질수록 빈곤지수의 값은 커져야 된다는 의미인데, 전체 인구에 대한 빈곤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율의 경우 이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전의 공리(transfer axiom)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빈곤선 이하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빈곤지수의 값이 커져

2) 이준구(1992) 참조.

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빈곤층이더라도 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더 줄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빈곤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율이나 뒤에 보게 될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 소득격차비율(income gap ratio)은 이전의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센 지수(Sen index)는 이 두가지 공리를 충족시킨다.

한편 카크와니(Kakwani, 1980)는 센이 제시한 두가지 공리 이외에 이전 민감성의 공리(transfer-sensitivity axiom)이란 한 가지 공리를 추가하였다. 이 공리는 이는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으로 같은 크기의 소득이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보다 적은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빈곤지수의 값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령 빈곤층 내부에서 소득분포가 변화했다고 가정하면, 10번째로 빈곤한 사람으로부터 11번째로 빈곤한 사람에게 소득이 1만큼 이전한 경우에 비해 가장 빈곤한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으로 빈곤한 사람으로 소득이 1만큼 이전한 경우 빈곤지수는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의 이전이 얼마 일어났는가를 넘어 어느 위치에서 일어났는지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빈곤율이나 빈곤격차비율, 센 지수는 이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뒤에 보게 될 제곱빈곤격차비율은 이 공리를 만족시킨다.³⁾

이와 유사한 공리체계가 불평등지수에서도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구-달튼의 공리(Pogou-Dalton axiom)로서,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소득의 이전이 일어나면 불평등지수는 작아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불평등 지수들이 이 공리를 만족하지만, ER지수나 EGR지수의 경우 이 공리를 위배한다. 두 번째는 비례적 소득변화로부터의 독립(income scale independence) 공리로서, 만일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불평등지수의 값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공리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소득을 원화로 측정했을 경우의 지니계수와 달러로 측정했을 경우의 지니계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불평등지수는 이 공리를 만족시킨다.

세 번째는 인구규모로부터의 독립 원리(principle of population)이다. 이는 만일 일정한 불평등도를 가진 한 사회가 동일한 분포상태를 가진 같은 크기의 사회와 통합되어 인구가

3) 이 외에도 다양한 공리들이 존재하지만 지표의 규범적 내용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공리들을 소개한 만큼 다른 공리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Cowell ed.(2003)을 참조.

두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평등지수가 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이후에 소개될 불평등지수 가운데 타일지수가 인구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타일지수 자체는 이 공리를 만족시키지만, 타일의 엔트로피 지수를 응용한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의 경우 이 공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네 번째는 분해가능성(decomposability) 공리로서 전체 사회의 불평등과 그 구성요소 사이의 불평등에 일관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리가 충족될 경우 전체 불평등지수는 집단 내부의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이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가 이 공리를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지수이며, 본 연구의 6장에서 실제로 엔트로피 분해를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은 앞서 언급한 피구-달튼의 공리의 보다 엄격한 형태로, 이전의 강 공리(strong principle of transfer)라 지칭된다. 피구달튼의 공리는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이 이전되었을 경우 빈곤지수가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때 얼마의 소득격차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이전이 이루어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격차가 큰 사람 사이에 소득이전이 이루어질수록 불평등지수는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 이전의 강공리이다. 그런데 이 공리는 소득격차, 즉 이전이 이루어지는 두 사람간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만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⁴⁾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들이 빈곤과 불평등 지수에 요구되며, 각 지수가 모든 공리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여러 지표추이를 동시에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어떤 지수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물론 지수의 값과 그 변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1. 빈곤 및 불평등의 추이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⁵⁾

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owell(1995) 참조.

5) 이 소절은 여유진 외(2005)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빈곤 및 불평등의 동향과 결정요인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들로 금재호·김승택(2001), 박찬용 외(2002), 정진호 외(2002), 유경준·김대일(2003), 성명재·김종면(2004), 여유진의(2005)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에 바탕을 두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우선 분석하는 지표의 수를 확대하였다. 빈곤율과 지니계수, 분위별 분배율 등은 기존의 연구에서 계측이 시도된 바 있으나 여타 지수, 즉 센지수나 옛킨슨지수, 타일지수, 울프슨지수, ER지수등을 이용하여 모두 제시한 연구는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지수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⁶⁾

둘째,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의 빈곤과 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는 1인가구가 포함된 데이터의 사용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1인가구가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1996년과 2000년의 통계청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이미 매년 제공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연도의 자료는 추정을 통해 얻는 수밖에 없다. 기존 연구들 중 박찬용 외(2002)와 성명재·김종면(2004)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소비함수를 추정하여 1인가구와 자영자 등의 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근로자와 비근로자 가구의 소비함수가 동일하다는 강한 가정을 하고 있다. 더구나 도시가계조사는 월별자료의 합산자료라는 점에서 연간소득을 사용하는 외국 자료와의 비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정진호 외(2002)에서는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1991년과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하고, 국내 빈곤과 소득분배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의 ‘시의성’과 ‘대표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용 데이터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6) 나성린·현진권(1993)의 경우 빈곤격차비율과 소득격차비율 및 센 지수를 추정하였고, 성명재(2001)의 경우 변이계수, 평균대수표준편차, 옛킨슨지수 등을 추정한 바 있다. . 여유진(2005)의 경우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지수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양극화 관련 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

금재호·김승택(2001)은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3차(2000)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원인의 정태적·동태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 분석대상 가구 수가 3,821가구에 불과해 여전히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유진 외(2005)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1인가구는 물론 농어가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로써 상대적으로 자료가 제한된 계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생산기관이 다른 두 종류의 데이터를 비교한다는 문제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세제,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분해(decomposition) 방법을 활용하였다. 물론 기존의 일부 연구, 대표적으로 정진호 외(2002), 성명재·김종면(2004) 등의 연구에서 불평등분해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과 외국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쉐분해·지니분해·엔트로피 분해 등의 다양한 요인분해를 시도하고 있다. 각각의 분해방법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성별·연령별·소득원천별 분해가 가능하며, 각 분해방법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도 상이하다. 이와 같이, 좀 더 다양한 분해방법을 시도하여 분석함으로써, 빈곤 불평등의 요인과 원인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2. 빈곤·불평등지수를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빈곤과 불평등 관련 지수는 재정지출이나 조세,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자주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은 상이한 소득범주별로 빈곤율과 지니계수를 구하고, 그 차이를 소득범주 구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공적이전, 사적이전, 사회보험과 직접세 등)의 효과로 파악하는 것이다.

나성린·현진권(1993)은 조세-부조 모형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도시가계자료와 농가통계자료를 모집단화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그 결과 사회부조에 따라 빈곤율은 0.48%p, 쉐지수는 0.0078, 소득격차비율은 0.0246 개선되는 효과

가 있었다. 또한 소득세가 도시가계의 지니계수를 6.3%, 농촌가계의 경우 1.7%, 전체 가계의 경우 5.2%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표 2-2-1> 소득세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나성린 · 현진권(1993))

(단위: %)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가계
지니계수	0.2907	0.3241	0.2974
변화율	-6.3	-1.7	-5.2
Atkinson 지수			
$\epsilon = 0.5$	0.0725	0.0851	0.0749
변화율	-11.2	-3.3	-9.5
$\epsilon = 0.9$	0.1269	0.1472	0.1307
변화율	-10.4	-3.0	-8.8
B-S 지수			
누진도	0.9158	0.7328	0.8509
비례도	0.0173	0.0810	0.0182
역진도	0.0669	0.1862	0.1308
수평적 형평도	0.1336	0.1523	0.0878

출처: 나성린 · 현진권(1993)

<표 2-2-2> 사회부조의 빈곤감소효과(나성린 · 현진권(1993))

빈곤지수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가계	
	부조건	부조후	부조건	부조후	부조건	부조후
빈곤율(%)	8.65	8.65	2.79	2.31	7.64	7.56
빈곤갭(10억원/년)	1,027	923	54.7	30.2	1,081	953
평균빈곤갭(천원/년)	1,452	1,305	1,151	766	1,433	1,277
소득갭	0.2305	0.2072	0.2023	0.1443	0.2289	0.2043
Sen 지수	0.0348	0.0319	0.0092	0.0064	0.0305	0.0277
빈곤층 지니계수	0.2229	0.2040	0.1577	0.1531	0.2200	0.2042

출처: 나성린 · 현진권(1993)

성명재 · 이명현(2001)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조세 및 이전소득이 가구 및 개인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환위기 이전 시기에는 이전소득에

따른 가구별 소득의 지니계수 감소효과가 0.2~0.1%였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0.8~1.1%로 감소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2-2-3> 이전소득과 조세의 지니계수 감소효과(성명재 · 이명현(2001))

(단위: %)

	세전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이전소득후)	소득세후	소비세후
1995	0.23776	0.23743 [-0.1]	0.22856 (-3.7)	0.23753 (+0.0)
1996	0.24375	0.24342 [-0.1]	0.23488 (-3.5)	0.24346 (+0.0)
1997	0.27705	0.27637 [-0.2]	0.26751 (-3.2)	0.27818 (+0.7)
1998	0.31110	0.30875 [-0.8]	0.30004 (-2.8)	0.31293 (+1.4)
1999	0.26813	0.26609 [-0.8]	0.25735 (-3.3)	0.26662 (+0.2)
2000	0.27957	0.27658 [-1.1]	0.26749 (-3.3)	0.27828 (+0.6)
	소득세 · 소비세후	소득 · 소비세 · 기여금후	직접세후	직접세 · 기여금후
1995	0.22828 (-3.9)	0.22750 (-4.2)	0.22712 (-4.3)	0.22634 (-4.7) [-4.8]
1996	0.23452 (-3.7)	0.23367 (-4.0)	0.23335 (-4.1)	0.23266 (-4.4) [-4.5]
1997	0.26891 (-2.7)	0.26883 (-2.7)	0.26870 (-3.1)	0.26769 (-3.8) [-3.4]
1998	0.30382 (-1.6)	0.30415 (-1.5)	0.29978 (-2.9)	0.29999 (-3.3) [-3.6]
1999	0.25734 (-3.3)	0.25628 (-3.7)	0.25617 (-3.7)	0.25512 (-4.3) [-4.9]
2000	0.26867 (-2.9)	0.26843 (-2.9)	0.26680 (-3.5)	0.26651 (-3.6) [-4.7]

주: 1.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의 합입

2. [] 안은 세전소득, () 안은 총소득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의 변화율임.

3. 2000년의 경우 세후 지니계수는 잠정추정치임.

자료: 성명재 · 이명현(2001)

박찬용 · 강석훈 · 김태완(2002)는 1996년과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전소득, 사회보장부담금, 직접세에 의한 지니계수의 감소효과와 공 ·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전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 축소효과는 2000년의 경우 0.042, 공적이전소득은 0.014, 직접세는 0.003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에 의한 절대빈곤 감소효과는 1.47%p, 사회보험지출 및 직접세의 절대빈곤 감소효과는 오히려 -0.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이전소득과 조세, 사회보장지출의 GINI계수 감소효과(박찬용 외 (2002))

분류		연도	전가구	근로자 가구	비근로자 가구	2인이상 가구	1인가구
1	사적이전소득	1996	0.033	0.010	0.068	0.026	0.081
		2000	0.042	0.008	0.081	0.029	0.120
2	공적이전소득	1996	0.005	0.001	0.012	0.005	0.009
		2000	0.014	0.003	0.026	0.012	0.030
3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 부담금, 직접세	1996	0.003	0.004	0.004	0.002	0.007
		2000	0.016	0.010	0.022	0.014	0.031
4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I)	1996	-	-	-	-	-
		2000	0.018	0.010	0.026	0.015	0.033
5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II)	1996	0.55	0.024	0.099	0.049	0.099
		2000	0.080	0.030	0.138	0.067	0.163
6	직접세	1996	-0.001	0.003	-0.007	-0.001	-0.002
		2000	0.003	0.006	-0.001	0.004	0.000
7	소득세(I)	1996	-	-	-	-	-
		2000	0.005	0.006	0.003	0.006	0.003
8	소득세(II)	1996	0.017	0.014	0.016	0.018	0.007
		2000	0.025	0.018	0.030	0.027	0.009
9	총이전소득	1996	0.038	0.011	0.079	0.031	0.088
		2000	0.055	0.011	0.106	0.041	0.148
10	총이전소득, 사회보장부담금, 직접세	1996	0.038	0.013	0.075	0.030	0.090
		2000	0.059	0.018	0.106	0.044	0.156
11	총이전소득,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I)	1996	-	-	-	-	-
		2000	0.060	0.018	0.108	0.045	0.156
12	총이전소득, 사회보장 부담금, 소득세(II)	1996	0.055	0.024	0.099	0.049	0.099
		2000	0.080	0.030	0.138	0.067	0.163

자료: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계측한 Gini 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임

출처: 박찬용 외 (2002)

<표 2-2-5>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절대 빈곤율 감소효과(박찬용 외 (2003))

(단위: %, % 포인트)

분류	연도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2인이상 가구	1인가구
시장소득 빈곤율(A)	1996	3.16	1.82	5.38	2.87	10.03
	2000	9.41	4.55	15.94	8.64	24.53
초소득 빈곤율(B)	1996	2.70	1.72	4.34	2.44	9.06
	2000	7.94	3.93	13.31	7.21	22.08
A - B	1996	0.46	0.10	1.04	0.43	0.97
	2000	1.47	0.62	2.63	1.43	2.45
가처분소득 빈곤율(C)	1996	3.16	2.06	4.99	2.88	10.00
	2000	9.42	5.14	15.16	8.73	22.88
A - C	1996	0.00	-0.24	0.39	-0.01	0.03
	2000	-0.01	-0.059	0.78	-0.09	1.65
가처분소득(II) 빈곤율(D)	1996	2.98	1.98	4.65	2.73	9.29
	2000	9.02	4.63	14.89	8.31	22.76
A - D	1996	0.18	-0.16	0.73	0.14	0.74
	2000	0.39	-0.08	1.05	0.33	1.77

자료: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결과임
출처: 박찬용 외 (2003)

한편 이상의 연구는 모두 200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의 빈곤율 변화에 미친 정책효과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의 시기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분석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2004)와 박기백·김진·전병목(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04)는 도시기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보조금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공적부조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이전인 1999년 3.47%에서 2003년 8.24%로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감소효과가 10%에도 못미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2-2-6>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국회에산정책처(2004))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이전 후	18.21	28.18	33.65	36.92	35.08	34.52
공적보조금	2.29	4.44	9.02	12.99	13.29	11.36
연금	0.83	1.42	1.35	3.93	3.92	2.41
기타사회보장	1.66	3.47	7.67	8.72	9.80	8.24
생활비보조	15.40	23.20	24.09	25.64	24.62	22.16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4)

박기백·김진·전병목(2004)의 경우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와 농가경제통계 자료를 통합하여 전가구의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의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감소효과는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이전인 2000년의 경우 0.64%에서 실시 이후인 2003년의 경우 1.96%로 나타나 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7> 재지출의 지니계수 감소효과(박기백 외(2004))

구분	시장소득	이전소득효과	세금 효과	총효과
	A - B	A	A - B - F	A - F
1993	0.26608	0.26606 (-0.01)	0.26178 (-1.62)	0.26174 (-1.63)
1994	0.2744	0.27434 (-0.02)	0.27606 (-1.38)	0.27053 (-1.41)
1995	0.26049	0.26014 (-0.13)	0.25435 (-2.36)	0.25397 (-2.50)
1996	0.27384	0.27398 (-0.05)	0.26849 (-1.95)	0.26863 (-1.90)
1997	0.27527	0.27534 (-0.03)	0.27012 (-1.87)	0.27019 (-1.85)
1998	0.28052	0.28019 (-0.12)	0.27449 (-2.15)	0.27412 (-2.28)
1999	0.26854	0.26732 (-0.45)	0.26262 (-2.20)	0.26131 (-2.69)
2000	0.28295	0.28114 (-0.64)	0.27728 (-2.00)	0.27541 (-2.66)
2001	0.27227	0.26939 (-1.06)	0.26615 (-2.25)	0.26324 (-3.32)
2002	0.27085	0.26752 (-1.23)	0.26503 (-2.15)	0.26169 (-3.38)
2003	0.28563	0.28004 (-1.96)	0.27961 (-2.11)	0.27403 (-4.06)

주: 1. 총소득 = A, 공공부문 이전소득 = B, 조세 = F.
 2. 괄호안은 재정지출로 인한 소득의 시장소득 대비 지니계수의 변화 비율(%)
 3. 농가는 1999년 이전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
 출처: 박기백·김진·전병목(2004)

이상의 연구는 서로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분석대상 집단에 놓여준 가구를 포함시키는지 여부, 분석의 대상 시기, 빈곤율의 적용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시기에 2005년까지를 포함시켰고 다양한 빈곤선을 제시하였다. 비록 모든 빈곤선에 대해 조세와 이전지출의 빈곤감소효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빈곤선은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는 다양한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3장 빈곤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제1절 빈곤지수

본 장에서는 빈곤지수들을 통한 분석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빈곤규모, 빈곤의 정도(혹은 심도) 등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빈곤을 측정하는 지수로는 라운트리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된 바가 있다. 특히 센의 경우 1976년 논문에서 빈곤지수들이 지녀야 할 공리⁷⁾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만족시키는 센지수를 고안 하였다. 이후 공리 등을 이용한 다양한 빈곤지수들이 발표되었으나, 본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분석되고 있는 빈곤율, 소득격차비율, FGT계열의 빈곤지수(빈곤격차비율, 제곱빈곤격차비율) 및 센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빈곤율(Head count ratio) 및 소득격차비율

빈곤율은 라운트리어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지수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매우 높은 지수라 할 수 있다.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인구(혹은 가구)수를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H = \frac{q}{n}$$

7) 센은 1976년 논문에서는 단조성공리(Monotonicity axiom), 이전공리(Transfer axiom)를 설명함. 이후 핵심공리(Focus axiom)를 추가함. 여기서 핵심공리는 빈곤지수가 빈곤층의 수나 빈곤층이외 계층의 소득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며, 단조성공리는 빈곤층의 소득변화가 빈곤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이전공리는 빈곤지수가 소득재분배에 관한 빈곤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민감도를 반영한 것임(Sen, 1976; 김진욱, 1998)

여기서 H 는 빈곤율(Head count ratio) q 는 빈곤선 이하 인구(혹은 가구)수를 의미하며 n 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율은 빈곤선이하의 전체적인 규모를 밝힐수는 있지만, 빈곤층들이 빈곤으로 느끼는 정도 혹은 심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빈곤층의 소득이 감소하여 과거에 비해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빈곤율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빈곤율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가 소득갭의 개념이다.

소득격차비율(Income Gap Ratio)은 소득갭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1960년대 미국의 사회복지장위원회에서 개발된 지수이다. 여기서 소득갭은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인구(혹은 가구)들이 지닌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빈곤율의 경우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혹은 가구)들의 숫자는 파악할 수 있으나 빈곤층이 느끼는 빈곤에 대한 심도 혹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소득갭은 빈곤율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GR = \frac{\sum_{i=1}^q (\pi - y_i)}{q\pi}$$

IGR 은 소득격차비율을 의미하며, π 는 빈곤선, q 은 빈곤선 이하 인구(혹은 가구)를, y_i 는 i 의 소득(혹은 지출)을 지닌 인구(혹은 가구)를 의미한다.

2. FGT계열의 빈곤지수

센이 논문에서 빈곤지수들이 지녀야 할 공리들을 제시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센이 제시한 공리이외에 빈곤지수들이 지녀야 할 공리들이 추가되었다. 이중 포스터, 그리어, 토어벡(Foster, Greer & Thorbecke)은 빈곤지수가 지녀야 할 공리중 가법분해(Additive Decomposability)가 가능한 새로운 빈곤지수를 제안하였으며, 이들이 제안한 지수를 세 학자의 머릿자를 따서 FGT지수라고 명하고 있다. FGT지수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FGT_{\alpha} = \frac{1}{n} \sum_{i=1}^q \left[\frac{z - y_i}{z} \right]^{\alpha}$$

FGT α 는 파라미터 α 인 FGT지수, n 은 전체 인구(또는 가구)수, q 는 빈곤선 이하의 개인(또는 가구)수, z 는 빈곤선,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 i 의 소득, α 는 빈곤혐오감(poverty-aversion)을 나타내는 파라미터($\alpha \geq 0$)이다. FGT지수는 기존 빈곤지수와 달리 α 라는 값을 지니고 있으며, α 값이 클수록 빈곤에 더 민감해짐을 의미한다.

여기서 $\alpha=0$ 인 경우는 빈곤율을 $\alpha=1$ 인 경우에는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PGR)을 의미한다.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율과 소득격차비율의 곱으로 표시되며, 전체 인구(혹은 가구)들이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빈곤층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담해야 할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GR = \frac{\sum_{i=1}^q (\pi - y_i)}{n\pi}$$

$\alpha=2$ 인 경우에는 제곱빈곤격차비율을 의미하며, 빈곤층 이하에 있는 인구(혹은 가구)들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지수는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SPGR = \frac{\sum_{i=1}^q (\pi - y_i)^2}{n\pi^2}$$

SPGR은 제곱빈곤격차비율, π 는 빈곤선, n 은 전체표본수, y_i 는 i 의 소득(혹은 지출)을 의미한다.

3. 센지수

센지수는 센이 기존 빈곤지수(빈곤율, 소득격차비율)가 주요 공리에 위배되는 단점을 지적하며 새로이 제안한 지수이다. 센의 지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P = H[I + (1 - I) \times G_p]$$

위 식에서 H 는 빈곤율(headcount ratio), I 는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 혹은 빈곤갭 비율)을 의미하며, G_p 는 저소득층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저소득층의 지니계수이다.

센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빈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센지수는 세 가지 변수 즉 H , I , G_p 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며, 즉, 세 가지 변수중 하나의 변수 혹은 그 이상의 변수가 증가하게 되면 센지수도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절 분석방법

분석을 위한 빈곤선 설정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두가지 개념하에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절대적 빈곤을 측정함에 있어 두가지 빈곤선을 이용하였다. 하나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2000년~2005년은 정부가 발표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였으며,⁸⁾ 1996년~1999년은 1994년과 1999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균등상승률을 적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또 하나는 정부가 특정연도의 삶의 질을 유지해준다는 가정하에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연도별 빈곤선을 새로이 설정하여 빈곤선으로 사용하였다.

두번째는 상대적 빈곤율을 추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하여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균등화방법은 OECD, LIS 등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W_i = \frac{y_i}{\epsilon^q}$).

동 빈곤지수를 추정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가능하면 이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다. 즉, 빈곤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빈곤율에 소득격차비율을 곱하면 빈곤격차비율이 산출되게 된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의 경우 가구원수별로 적용되는 빈곤선의 차이로 인해 실제 이론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빈곤율의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빈곤선을 적용한 반면에 소득격차비율과 빈곤격차비율의 경우에는 소득과 빈곤선을 모두 2인 가구소득 및 빈곤선으로 치환하여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살펴보면, 추정기준은 인구(=개인)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추가

8) 동 자료는 보건복지부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 년도 참조

적으로 가구를 고려하였다. 단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율만을 산출하였다. 또한 추정에 사용된 소득 및 지출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가처분소득 분석의 경우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추정함에 있어, 음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의 의미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가처분소득의 음수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불평등지수에서 로그값을 취하는 지수(엔트로피 지수 등)들의 경우 소득이 음이거나, "0"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음수값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1"원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제3절 분석결과

1. 절대적 빈곤

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적용 분석

먼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와 동일비율을 이용하여 설정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수준을 분석한 경우,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경우 소비지출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기간인 1998년에는 22.61%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두가 경제위기 기간에 가장 높게 나타나다 2000년 이후 감소하지만 2003년 이후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이전의 빈곤율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2003년에서 2005년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빈곤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3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의 경우 빈곤율이 5.26%인 반면에 전가구의 빈곤율은 9.96%로 도시근로자 빈곤율에 비해 4.7%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1〉 빈곤선⁹⁾

(단위: 원)

구분	1	2	3	4	5	6	7	4인가구 기준 증가율 2000년=100, %	
1994	205,914	355,188	544,439	665,107	763,817	841,450	898,550		
1996	243,950	414,004	607,680	751,093	859,125	955,579	1,052,032	80.9	6.3
1997	265,527	446,970	642,005	798,169	911,151	1,018,323	1,125,495	86.0	6.3
1998	289,012	482,560	678,268	848,195	966,326	1,085,187	1,204,047	91.4	6.3
1999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1,288,039	97.1	6.3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1,326,680	100.0	3.0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1,366,480	103.0	3.0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1,414,307	106.6	3.5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1,456,738	109.8	3.0
2004	368,226	609,842	838,796	1,055,090	1,199,637	1,353,680	1,507,723	113.6	3.5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1,652,682	122.4	7.7

〈표 3-3-2〉 절대적 빈곤율(1): 도시근로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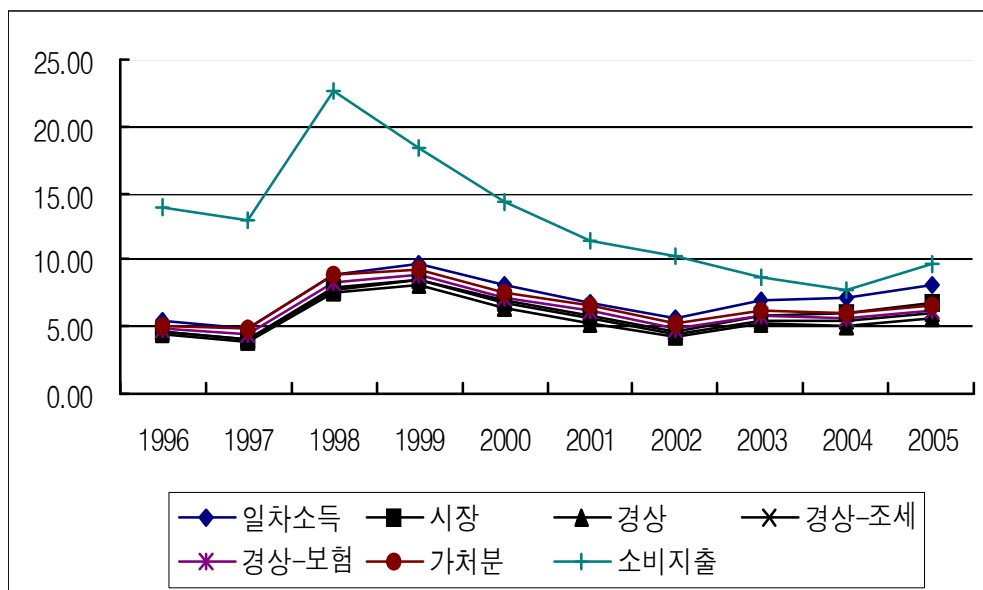
(단위 : %)

	일차소득	시장	경상	경상소득- 조세	경상소득- 사회보험료	가처분	소비지출
1996	5.44	4.59	4.50	4.67	4.75	4.95	14.05
1997	4.83	4.05	3.90	4.14	4.53	4.79	13.06
1998	8.88	7.79	7.62	8.03	8.40	8.90	22.61
1999	9.76	8.55	8.19	8.54	8.92	9.35	18.49
2000	8.17	6.90	6.42	6.80	7.12	7.61	14.32
2001	6.82	5.82	5.25	5.60	6.11	6.50	11.45
2002	5.65	4.70	4.17	4.43	4.93	5.21	10.33
2003	6.94	5.90	5.26	5.46	5.86	6.13	8.71
2004	7.23	5.91	5.10	5.39	5.70	6.05	7.72
2005	8.14	6.78	5.70	5.93	6.24	6.54	9.61

9) 7인 가구 이상의 빈곤선은 6인과 7인사이의 빈곤선 차이만큼을 8인에 더해서 구함.

〈그림 3-3-1〉 절대적 빈곤율(1):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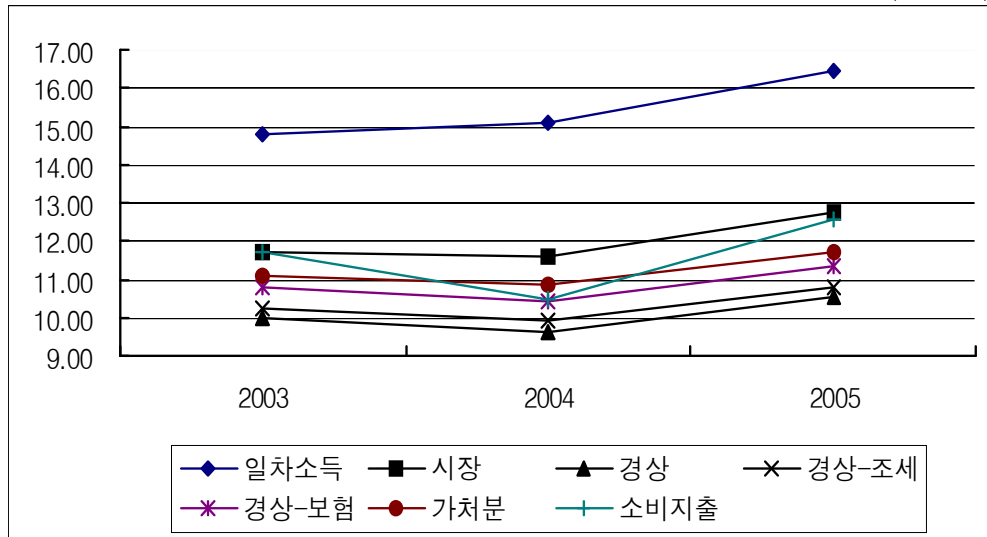
〈표 3-3-3〉 절대적 빈곤율(1): 전가구기준

(단위 : %)

	일차소득	시장	경상	경상소득- 조세	경상소득- 사회보험료	가처분	소비지출
2003	14.79	11.68	9.96	10.23	10.76	11.11	11.70
2004	15.12	11.58	9.60	9.92	10.44	10.83	10.48
2005	16.42	12.74	10.51	10.80	11.33	11.68	12.60

〈그림 3-3-2〉 절대적 빈곤율(1): 전가구 기준

(단위 : %)



소득격차비율의 경우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다시 낮아지다가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빈곤율과는 반대로 소비지출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격차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2004년의 40.99%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30%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소득격차비율은 소득기준으로 40%중반에서 50%대에 이르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기초로 볼 경우 빈곤층에서 빈곤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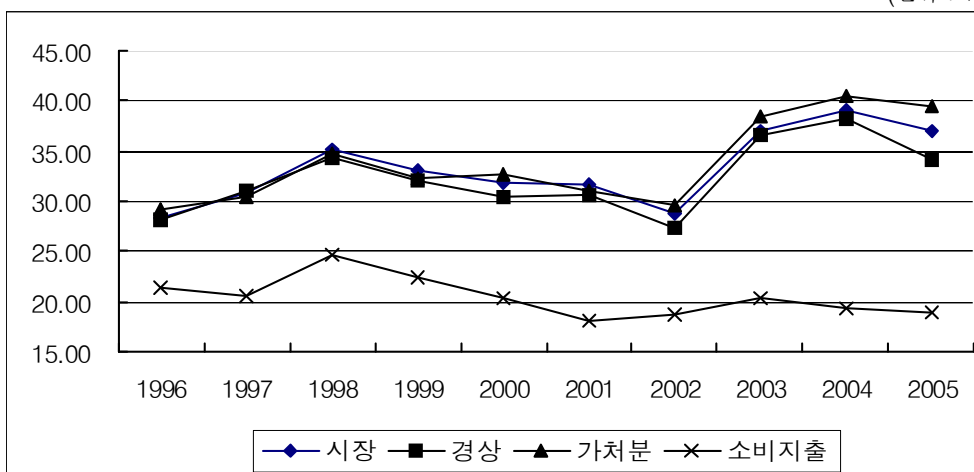
〈표 3-3-4〉 절대적 소득격차비율(1):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29.75	29.61	31.00	20.76
1997	33.25	33.55	30.83	19.84
1998	38.07	37.30	36.82	23.91
1999	33.08	32.08	32.51	22.36
2000	31.92	30.44	32.72	20.34
2001	31.43	30.28	31.08	17.88
2002	28.74	27.48	29.88	18.62
2003	36.89	36.50	38.85	20.23
2004	39.39	38.80	40.99	19.42
2005	35.80	33.17	38.12	19.22

〈그림 3-3-3〉 절대적 소득격차비율(1):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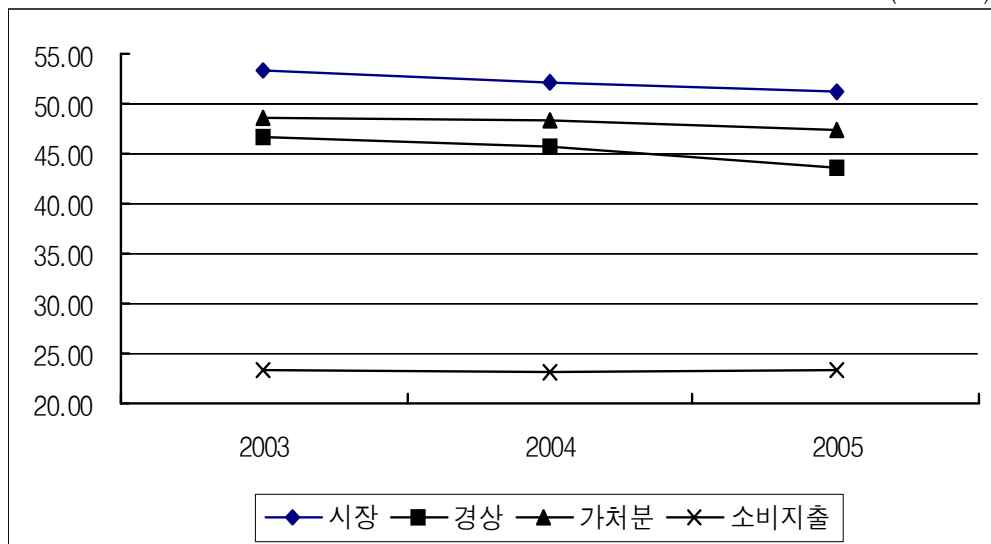
〈표 3-3-5〉 절대적 소득격차비율(1):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53.38	46.57	48.53	23.24
2004	52.25	45.67	48.41	23.02
2005	51.20	43.68	47.28	23.28

〈그림 3-3-4〉 절대적 소득격차비율(1): 전가구 기준

(단위 : %)



빈곤격차비율의 경우에는 소득격차비율에 비해 비교수치는 낮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볼 경우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과 1999년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감소하다 2003년들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경제위기기간에는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 조금씩이지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시 전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도시근로자기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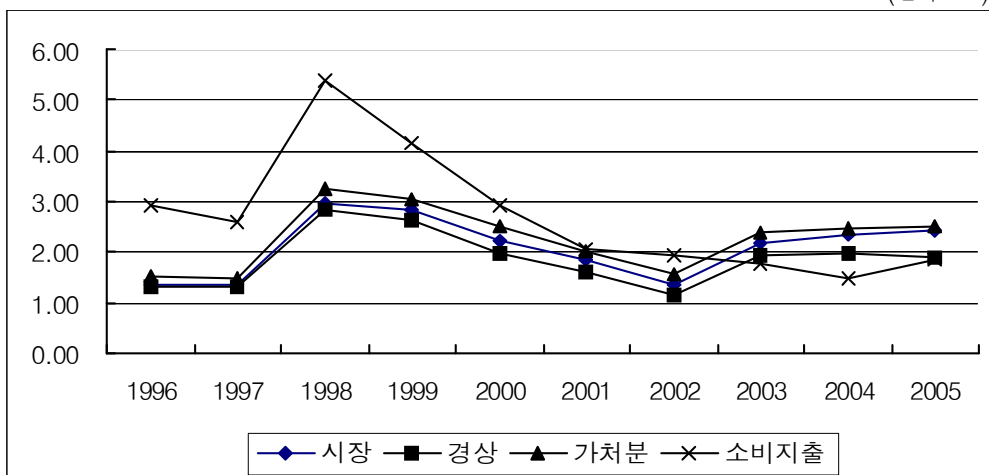
〈표 3-3-6〉 절대적 빈곤격차비율(1):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1.36	1.32	1.53	2.90
1997	1.34	1.30	1.47	2.57
1998	2.96	2.83	3.26	5.39
1999	2.83	2.63	3.04	4.13
2000	2.20	1.95	2.49	2.91
2001	1.83	1.59	2.02	2.05
2002	1.35	1.15	1.56	1.92
2003	2.18	1.92	2.38	1.76
2004	2.33	1.98	2.48	1.50
2005	2.43	1.89	2.49	1.85

〈그림 3-3-5〉 절대적 빈곤격차비율(1):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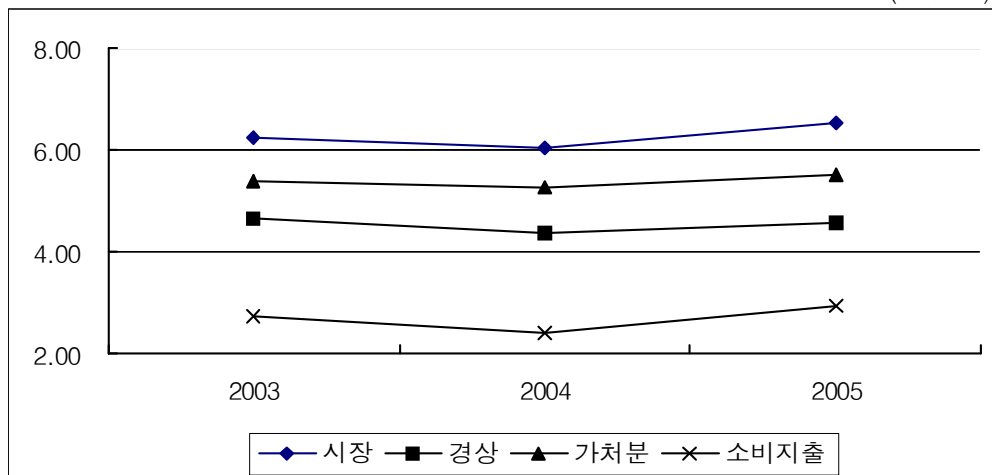
〈표 3-3-7〉 절대적 빈곤격차비율(1):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6.23	4.64	5.39	2.72
2004	6.05	4.39	5.25	2.41
2005	6.52	4.59	5.52	2.93

〈그림 3-3-6〉 절대적 빈곤격차비율(1): 전가구 기준

(단위 : %)



제곱빈곤격차비율은 FGT계열의 빈곤지수로 빈곤층에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분석하는 지수이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소득에 대한 제곱빈곤격차비율은 경제위기기간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감소하다 2003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2005년의 제곱빈곤격차비율이 다른 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해와 비교시 2005년이 다른 해에 비해 저소득층의 부담하는 조세나 사회보장분담금이 높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소득,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변화 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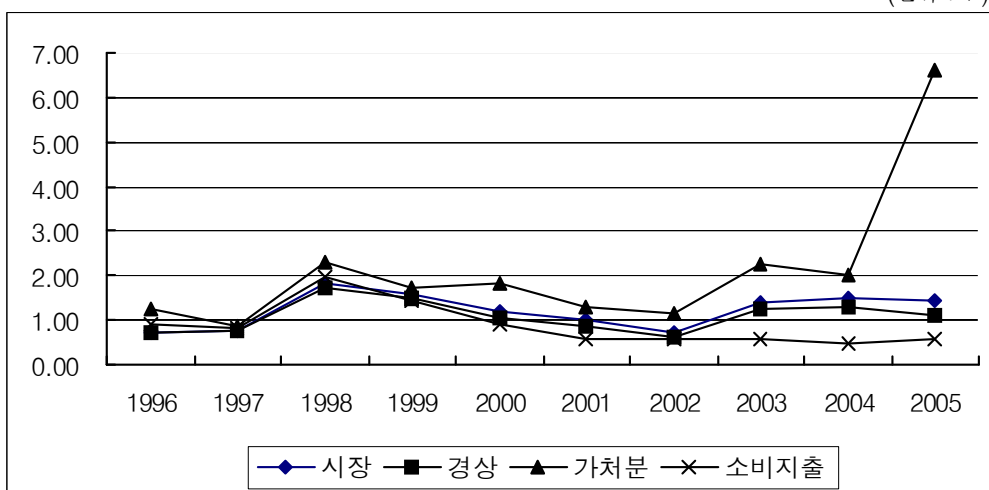
〈표 3-3-8〉 절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1):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0.73	0.70	1.24	0.93
1997	0.78	0.77	0.86	0.81
1998	1.84	1.75	2.28	1.95
1999	1.60	1.47	1.73	1.42
2000	1.22	1.05	1.82	0.92
2001	1.01	0.87	1.30	0.59
2002	0.70	0.60	1.17	0.57
2003	1.37	1.22	2.25	0.58
2004	1.51	1.28	2.00	0.47
2005	1.44	1.09	6.64	0.57

〈그림 3-3-7〉 절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1):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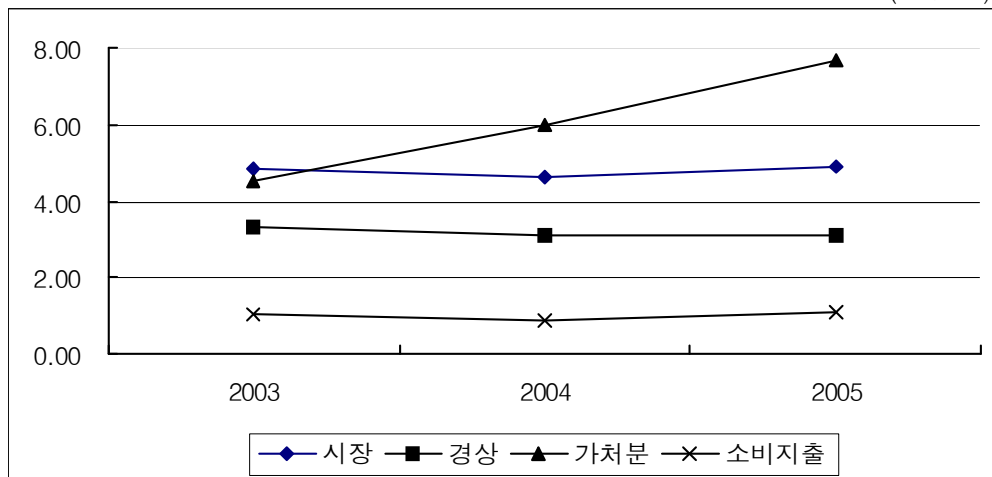
〈표 3-3-9〉 절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1):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4.85	3.33	4.52	1.01
2004	4.61	3.10	5.97	0.89
2005	4.89	3.12	7.67	1.09

〈그림 3-3-8〉 절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1): 전가구 기준

(단위 : %)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가구율의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기준 빈곤율과 같이 소비지출의 빈곤가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기준의 빈곤가구율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빈곤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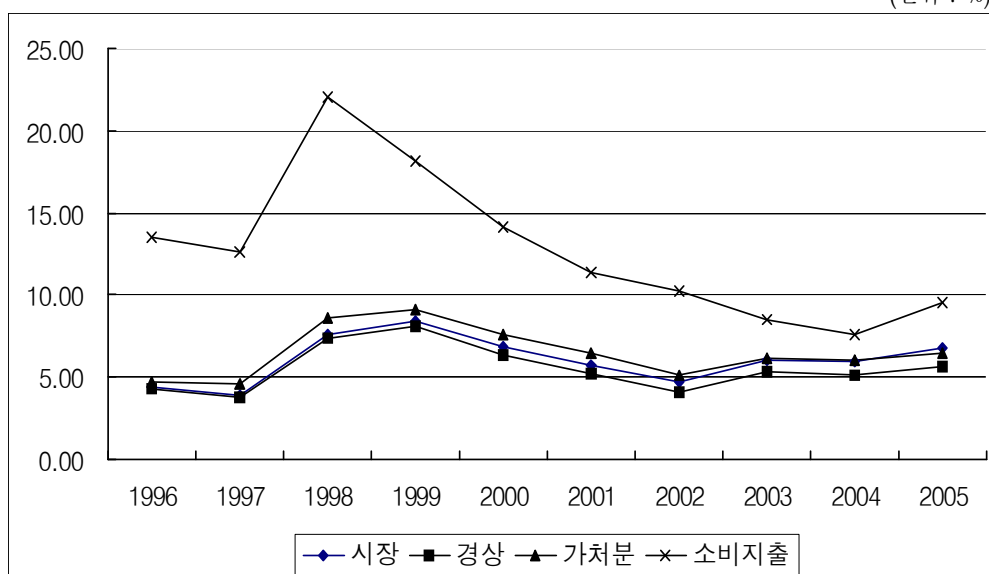
〈표 3-3-10〉 절대적 빈곤가구율(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4.37	4.29	4.71	13.50
1997	3.91	3.80	4.63	12.57
1998	7.58	7.41	8.63	22.03
1999	8.44	8.07	9.17	18.10
2000	6.90	6.40	7.58	14.16
2001	5.78	5.21	6.42	11.40
2002	4.67	4.13	5.15	10.22
2003	6.08	5.38	6.20	8.48
2004	5.97	5.17	6.05	7.61
2005	6.73	5.66	6.45	9.58

〈그림 3-3-9〉 절대적 빈곤가구율(1):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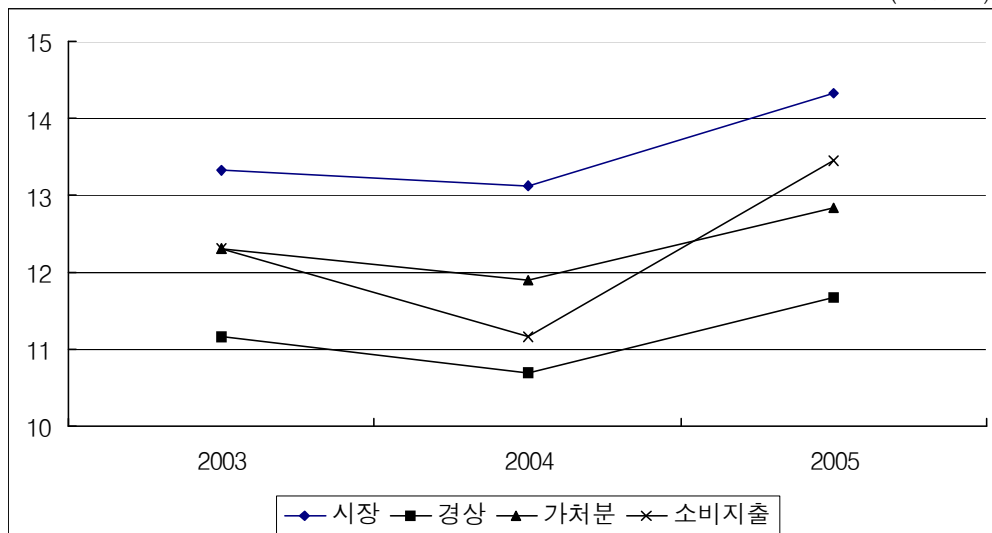
〈표 3-3-11〉 절대적 빈곤가구율(1):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13.33	11.16	12.30	12.30
2004	13.12	10.69	11.89	11.16
2005	14.32	11.68	12.84	13.45

〈그림 3-3-10〉 절대적 빈곤가구율(1): 전가구기준

(단위 : %)



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방법

앞의 추정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대적 빈곤을 측정시 특정연도의 삶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설정된 빈곤선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을 추정하여 보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분석한 빈곤율은 1998년과 1999년 경제위기 기간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앞에서 적용한 경우와 달리 2003년이후의 빈곤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빈곤선을 설정할 경우, 빈곤율은 낮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2000년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생활상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게 될 수 있다.

〈표 3-3-12〉 빈곤선－ 2000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CPI를 적용한 경우

(단위: 원)

	1	2	3	4	5	6	7	CPI
1996	279,910	463,575	637,616	802,034	911,912	1,029,009	1,146,106	86.389
1997	292,336	484,155	665,922	837,638	952,394	1,074,689	1,196,984	90.224
1998	314,297	520,526	715,948	900,565	1,023,941	1,155,424	1,286,906	97.002
1999	316,854	524,760	721,772	907,890	1,032,270	1,164,822	1,297,374	97.791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1,326,680	100
2001	337,295	558,615	768,337	966,462	1,098,867	1,239,970	1,381,074	104.1
2002	346,368	573,640	789,003	992,457	1,128,424	1,273,322	1,418,221	106.9
2003	358,680	594,032	817,050	1,027,737	1,168,536	1,318,585	1,468,635	110.7
2004	371,641	615,496	846,573	1,064,873	1,210,759	1,366,231	1,521,702	114.7
2005	381,685	632,131	869,454	1,093,653	1,243,483	1,403,156	1,562,829	1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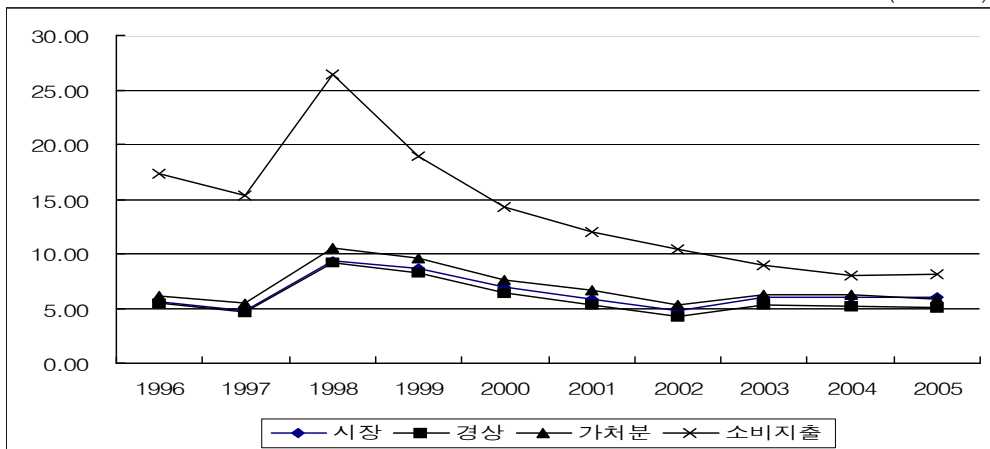
〈표 3-3-13〉 절대적 빈곤율(2):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5.61	5.50	6.09	17.34
1997	4.86	4.69	5.43	15.31
1998	9.38	9.21	10.50	26.37
1999	8.68	8.30	9.55	18.87
2000	6.90	6.42	7.61	14.32
2001	5.91	5.33	6.67	11.95
2002	4.74	4.21	5.28	10.44
2003	5.97	5.33	6.27	8.97
2004	6.06	5.25	6.21	8.04
2005	6.06	5.07	5.88	8.12

〈그림 3-3-11〉 절대적 빈곤율(2):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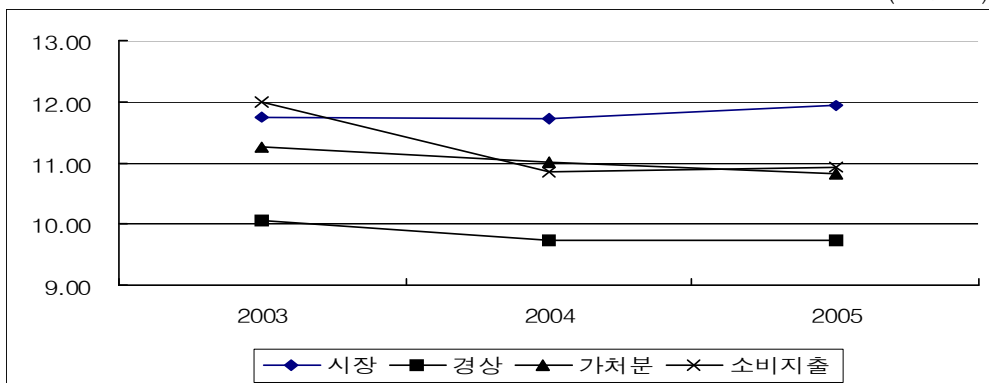
〈표 3-3-14〉 절대적 빈곤율(2):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11.76	10.06	11.26	12.00
2004	11.72	9.74	11.01	10.84
2005	11.94	9.72	10.82	10.94

〈그림 3-3-12〉 절대적 빈곤율(2): 전가구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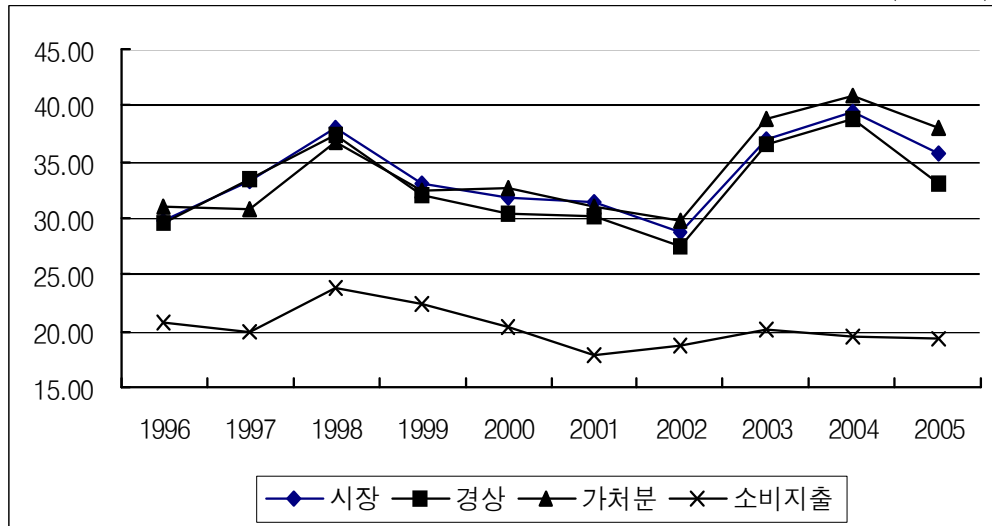
〈표 3-3-15〉 절대적 소득격차비율(2):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28.29	28.18	29.28	21.46
1997	30.83	31.04	30.31	20.48
1998	35.08	34.36	34.71	24.72
1999	33.08	32.14	32.30	22.46
2000	31.92	30.44	32.72	20.34
2001	31.68	30.54	31.01	17.99
2002	28.67	27.39	29.69	18.65
2003	37.00	36.58	38.52	20.28
2004	38.97	38.31	40.52	19.39
2005	36.99	34.17	39.54	18.86

〈그림 3-3-13〉 절대적 소득격차비율(2):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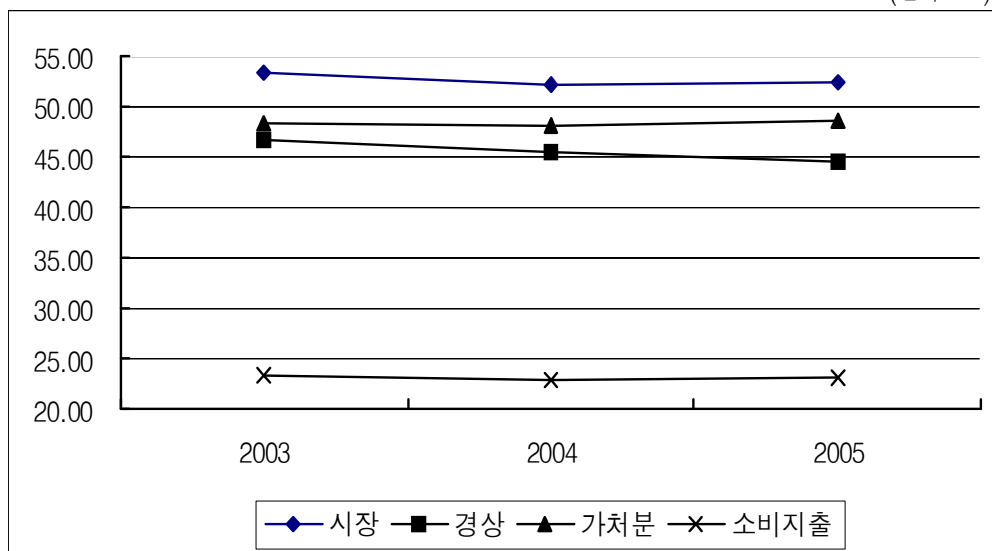
〈표 3-3-16〉 절대적 소득격차비율(2):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53.38	46.57	48.29	23.27
2004	52.07	45.52	48.10	22.96
2005	52.35	44.54	48.51	23.03

〈그림 3-3-14〉 절대적 소득격차비율(2): 전가구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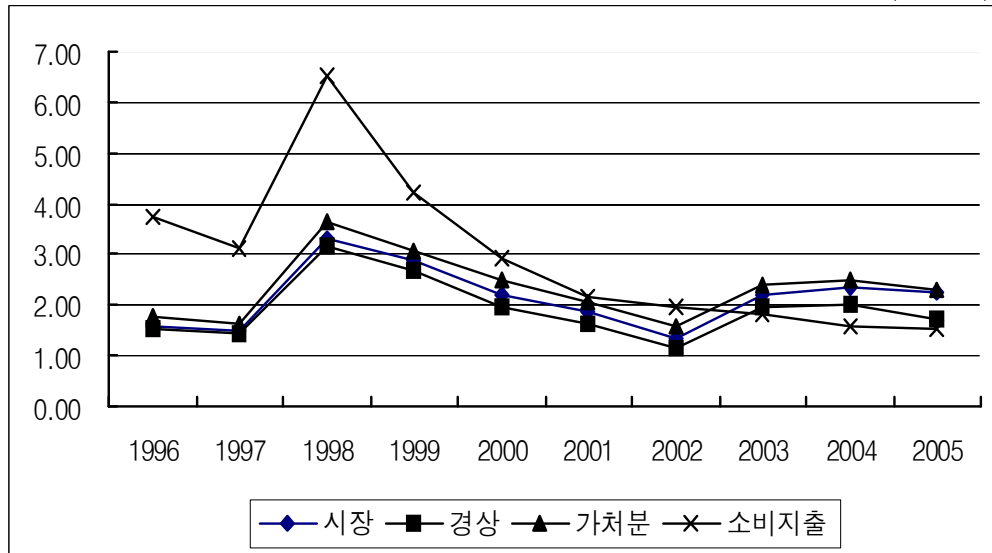
〈표 3-3-17〉 절대적 빈곤격차비율(2):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1.59	1.55	1.78	3.72
1997	1.50	1.46	1.65	3.14
1998	3.29	3.16	3.64	6.52
1999	2.87	2.67	3.08	4.24
2000	2.20	1.95	2.49	2.91
2001	1.87	1.63	2.07	2.15
2002	1.36	1.15	1.57	1.95
2003	2.21	1.95	2.41	1.82
2004	2.36	2.01	2.51	1.56
2005	2.24	1.73	2.33	1.53

〈그림 3-3-15〉 절대적 빈곤격차비율(2):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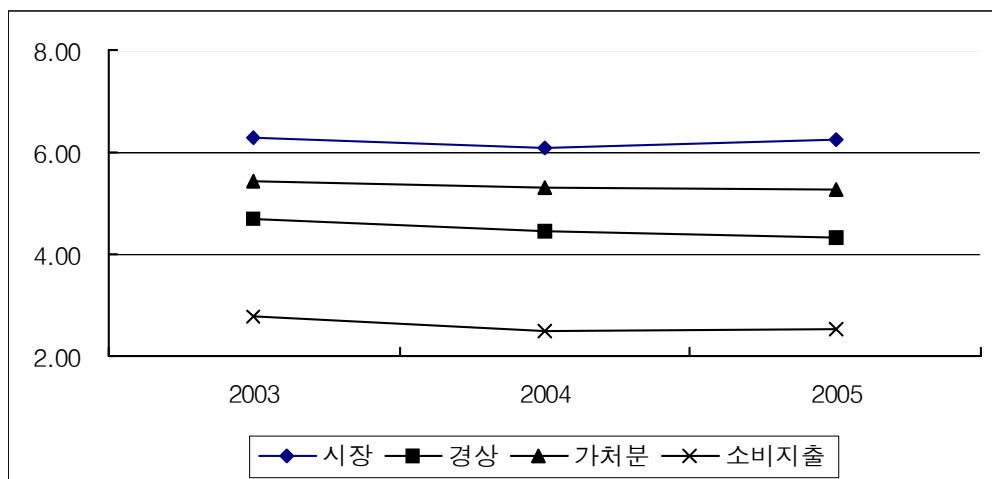
〈표 3-3-18〉 절대적 빈곤격차비율(2):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6.28	4.68	5.44	2.79
2004	6.10	4.44	5.30	2.49
2005	6.25	4.33	5.25	2.52

〈그림 3-3-16〉 절대적 빈곤격차비율(2): 전가구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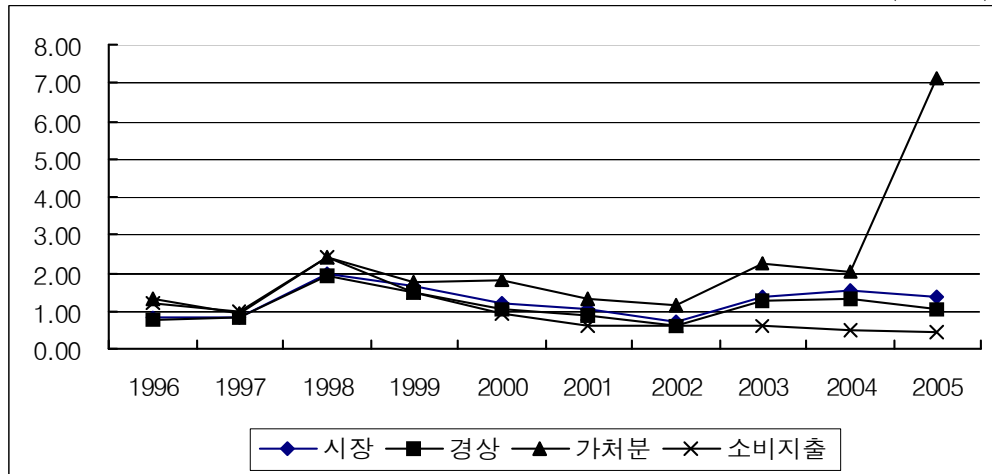
〈표 3-3-19〉 절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2):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0.82	0.79	1.30	1.23
1997	0.84	0.83	0.93	1.00
1998	1.99	1.89	2.42	2.41
1999	1.62	1.49	1.74	1.46
2000	1.22	1.05	1.82	0.92
2001	1.02	0.88	1.32	0.62
2002	0.71	0.60	1.17	0.58
2003	1.38	1.24	2.26	0.60
2004	1.52	1.29	2.01	0.49
2005	1.36	1.02	7.14	0.47

〈그림 3-3-17〉 절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2): 도시근로자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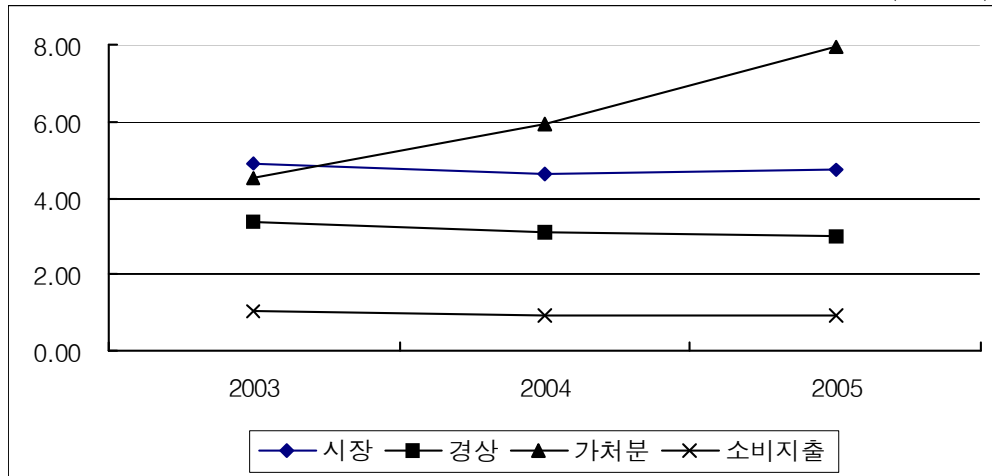
〈표 3-3-20〉 절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2):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4.88	3.35	4.54	1.04
2004	4.64	3.12	5.95	0.92
2005	4.74	2.99	7.93	0.93

〈그림 3-3-18〉 절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2): 전가구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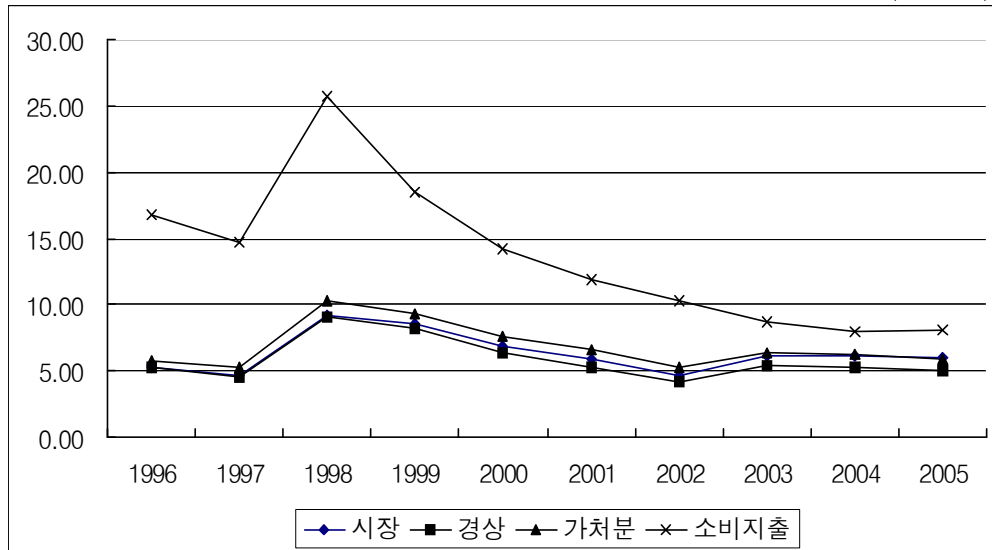
〈표 3-3-21〉 절대적 빈곤가구율(2):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1996	5.32	5.22	5.77	16.73
1997	4.69	4.56	5.25	14.69
1998	9.23	9.06	10.27	25.71
1999	8.56	8.18	9.36	18.47
2000	6.90	6.40	7.58	14.16
2001	5.86	5.28	6.59	11.89
2002	4.71	4.17	5.21	10.32
2003	6.14	5.44	6.33	8.73
2004	6.11	5.30	6.19	7.90
2005	6.01	5.02	5.82	8.09

〈그림 3-3-19〉 절대적 빈곤가구율(2):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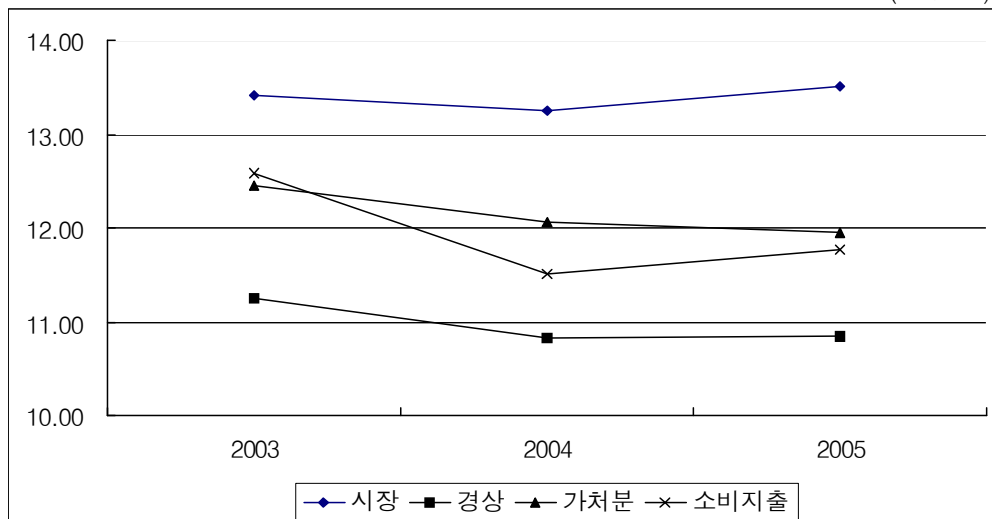
〈표 3-3-22〉 절대적 빈곤가구율(2):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	경상	가처분	소비지출
2003	13.41	11.26	12.45	12.59
2004	13.25	10.83	12.06	11.51
2005	13.51	10.85	11.94	11.78

〈그림 3-3-20〉 절대적 빈곤가구율(2): 전가구기준

(단위 : %)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과 1999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후 상대적 빈곤율이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역시 2003년 이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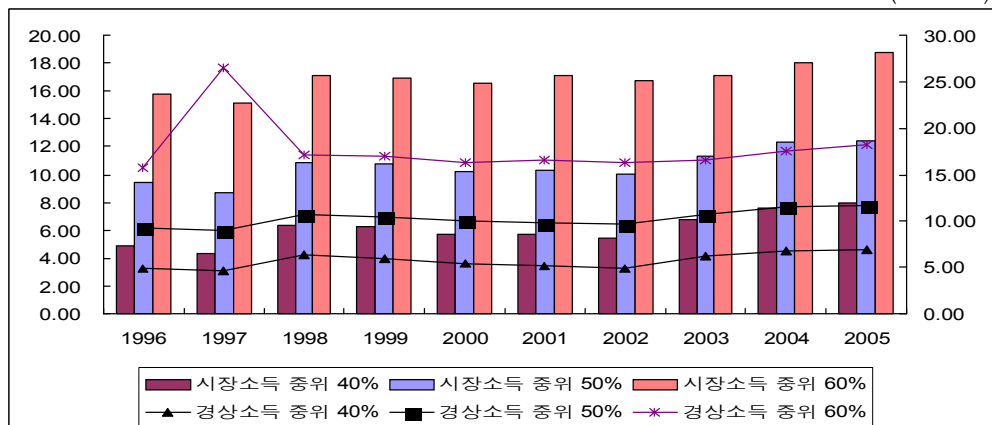
〈표 3-3-23〉 상대적 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88	9.40	15.75	4.84	9.24	15.81
1997	4.34	8.67	15.15	4.59	8.91	26.41
1998	6.38	10.84	17.07	6.34	10.76	17.12
1999	6.23	10.78	16.88	5.94	10.52	17.02
2000	5.70	10.19	16.60	5.40	9.99	16.33
2001	5.72	10.32	17.10	5.22	9.72	16.51
2002	5.39	10.06	16.77	4.82	9.63	16.28
2003	6.75	11.29	17.11	6.25	10.66	16.59
2004	7.57	12.33	17.98	6.77	11.59	17.54
2005	7.98	12.41	18.74	6.97	11.70	18.21

〈그림 3-3-21〉 상대적 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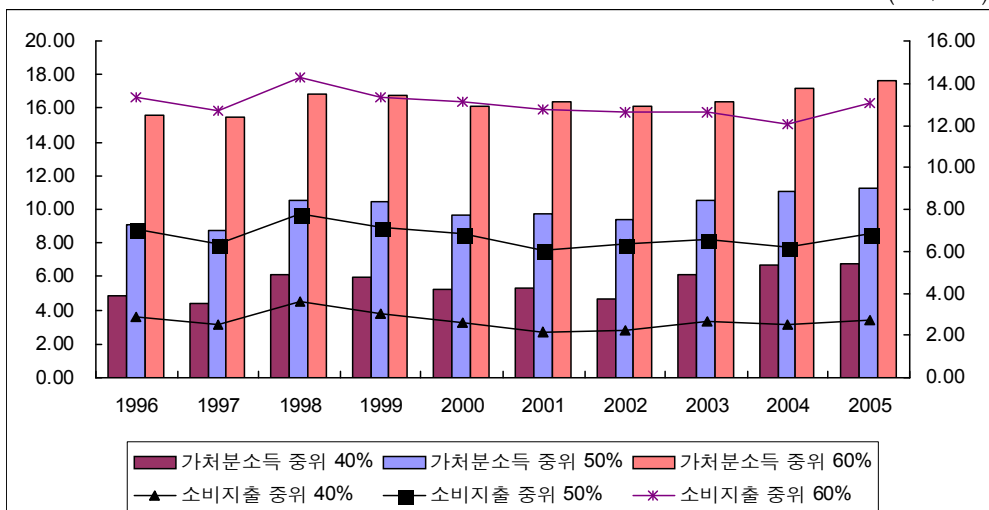
〈표 3-3-24〉 상대적 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83	9.13	15.60	2.90	7.08	13.35
1997	4.37	8.71	15.47	2.52	6.36	12.70
1998	6.16	10.57	16.82	3.62	7.77	14.30
1999	5.92	10.48	16.76	3.05	7.14	13.32
2000	5.22	9.63	16.09	2.60	6.88	13.14
2001	5.31	9.71	16.41	2.19	6.03	12.78
2002	4.72	9.33	16.15	2.26	6.34	12.59
2003	6.09	10.55	16.40	2.69	6.54	12.64
2004	6.65	11.08	17.24	2.49	6.23	12.07
2005	6.72	11.24	17.67	2.77	6.86	13.02

〈그림 3-3-22〉 상대적 빈곤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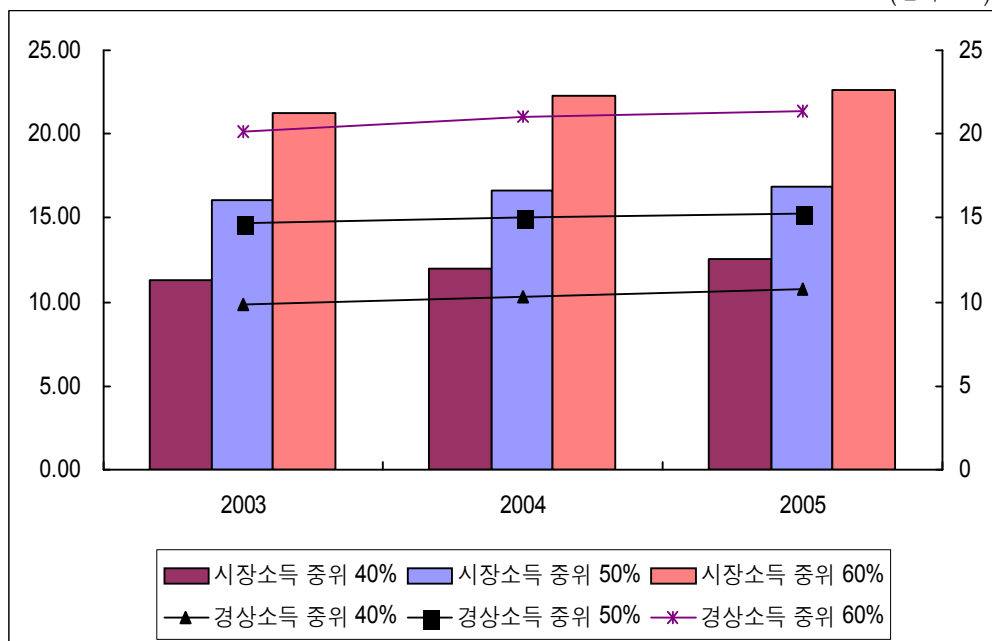
〈표 3-3-25〉 상대적 빈곤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1.32	16.07	21.23	9.87	14.73	20.11
2004	12.00	16.61	22.23	10.34	15.00	21.05
2005	12.56	16.88	22.57	10.78	15.28	21.41

〈그림 3-3-23〉 상대적 빈곤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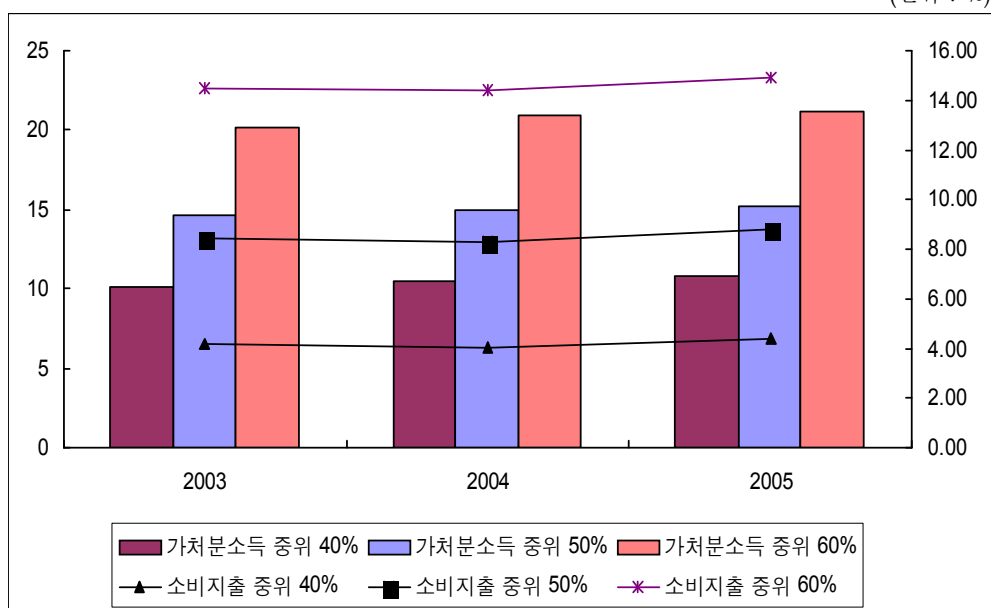
〈표 3-3-26〉 상대적 빈곤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0.11	14.63	20.18	4.16	8.40	14.51
2004	10.44	15.03	20.96	4.01	8.28	14.40
2005	10.78	15.17	21.21	4.38	8.76	14.94

〈그림 3-3-24〉 상대적 빈곤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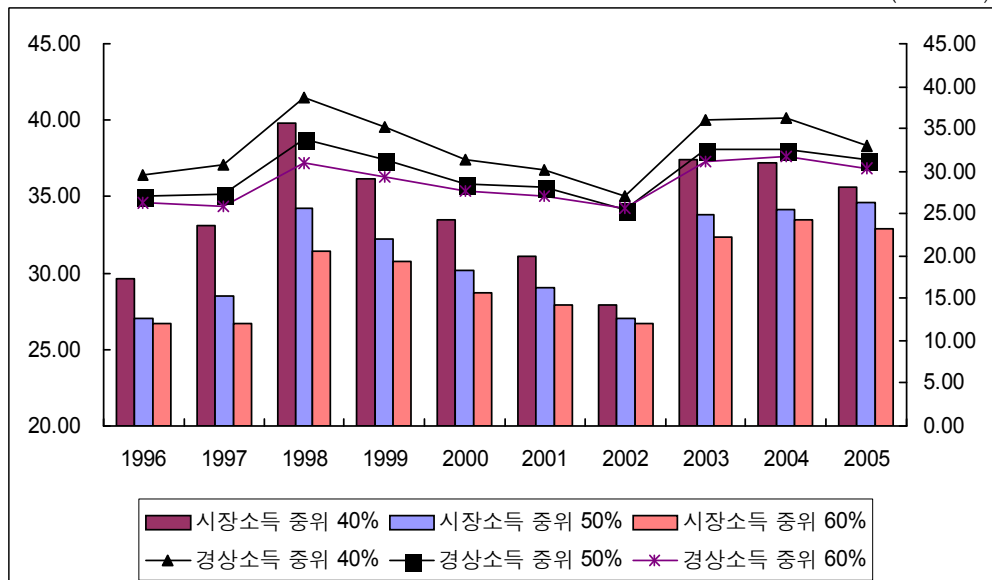
〈표 3-3-27〉 상대적 소득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29.66	26.98	26.64	29.55	27.17	26.29
1997	33.10	28.45	26.68	30.82	27.22	25.78
1998	39.82	34.27	31.46	38.64	33.78	31.02
1999	36.14	32.18	30.70	35.30	31.32	29.42
2000	33.44	30.21	28.74	31.33	28.44	27.77
2001	31.11	29.04	27.97	30.13	28.11	27.02
2002	27.93	27.00	26.67	26.98	25.42	25.69
2003	37.41	33.84	32.37	36.01	32.58	31.06
2004	37.23	34.17	33.48	36.28	32.54	31.71
2005	35.66	34.64	32.90	32.96	31.36	30.32

〈그림 3-3-25〉 상대적 소득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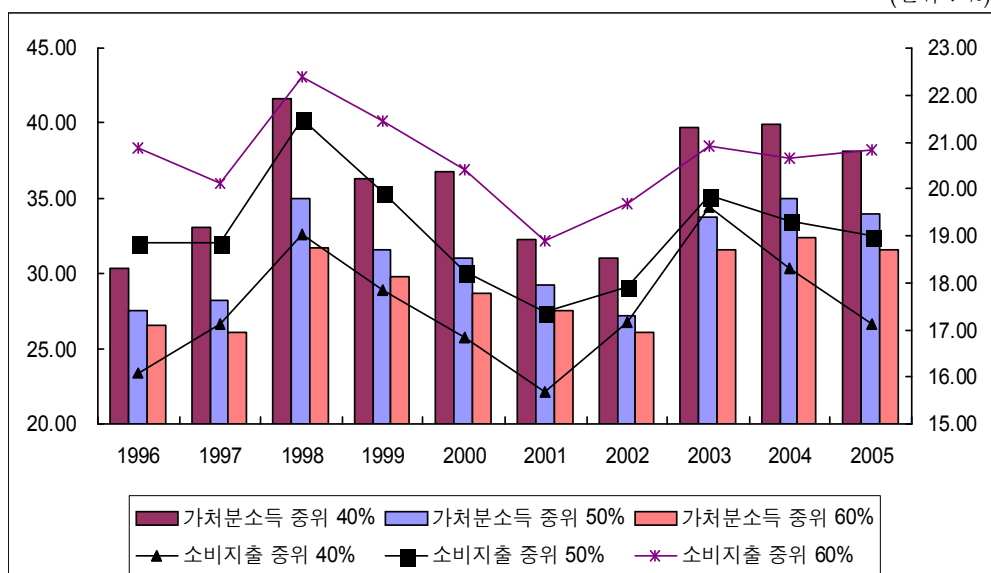
〈표 3-3-28〉 상대적 소득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30.38	27.53	26.49	16.09	18.84	20.89
1997	33.09	28.27	26.04	17.11	18.86	20.11
1998	41.61	34.93	31.70	19.05	21.48	22.39
1999	36.31	31.60	29.84	17.85	19.94	21.45
2000	36.82	31.05	28.67	16.86	18.25	20.42
2001	32.27	29.25	27.49	15.70	17.37	18.90
2002	31.08	27.26	26.08	17.17	17.91	19.70
2003	39.67	33.79	31.64	19.61	19.88	20.93
2004	39.91	34.99	32.38	18.33	19.34	20.66
2005	38.10	33.93	31.57	17.13	18.98	20.84

〈그림 3-3-26〉 상대적 소득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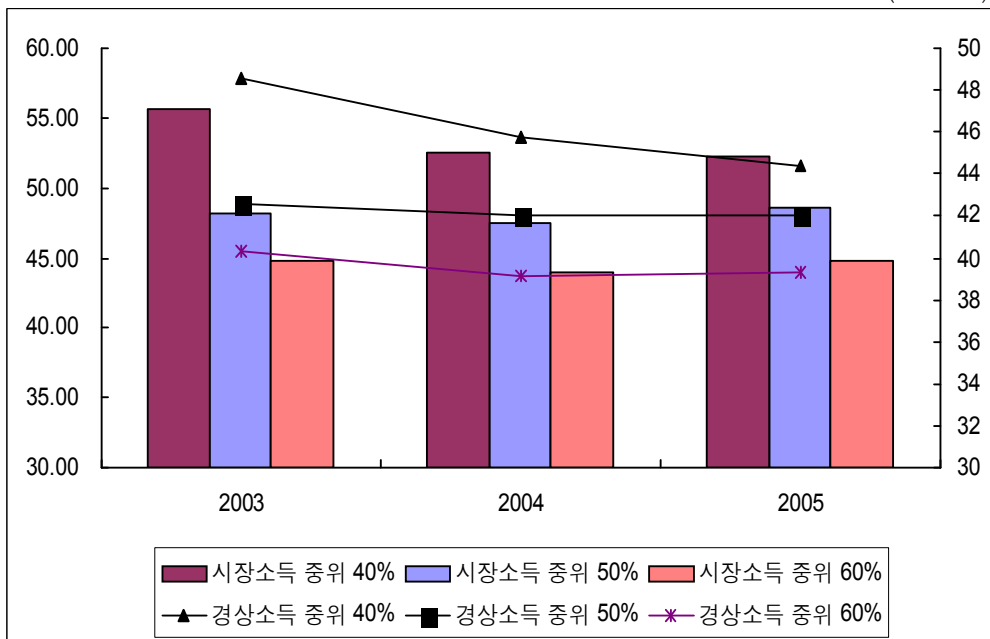
〈표 3-3-29〉 상대적 소득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55.66	48.15	44.82	48.58	42.62	40.32
2004	52.50	47.50	44.04	45.74	42.01	39.12
2005	52.20	48.57	44.78	44.38	42.06	39.31

〈그림 3-3-27〉 상대적 소득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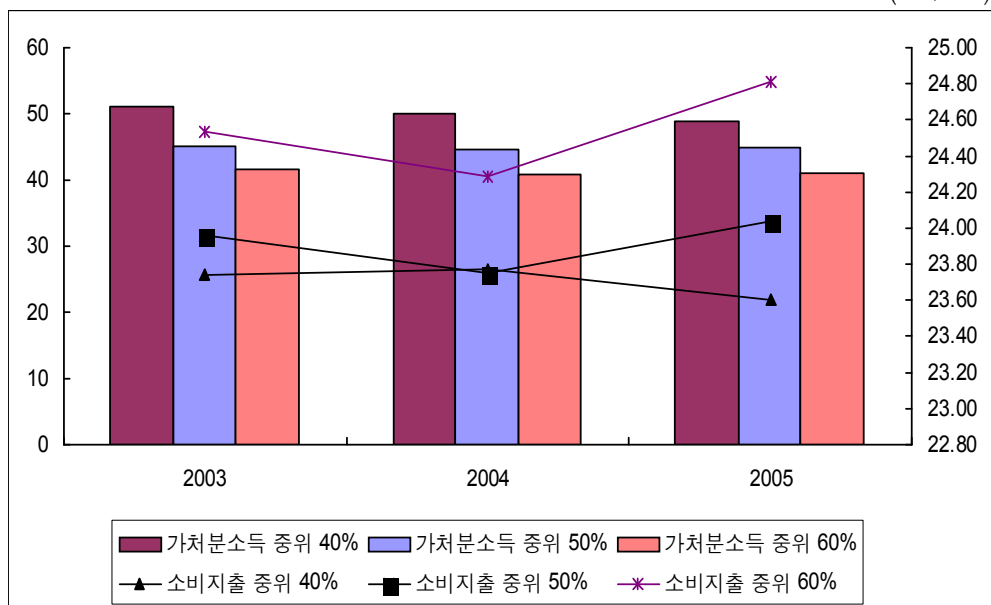
〈표 3-3-30〉 상대적 소득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51.19	45.07	41.52	23.74	23.96	24.53
2004	49.88	44.55	40.74	23.77	23.75	24.29
2005	48.98	44.85	40.96	23.60	24.04	24.81

〈그림 3-3-28〉 상대적 소득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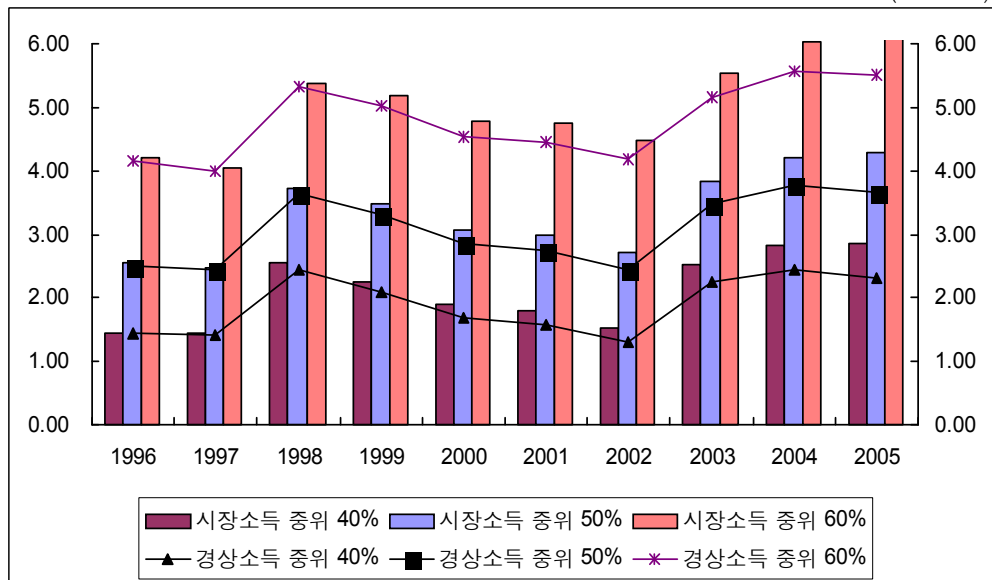
〈표 3-3-31〉 상대적 빈곤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1.45	2.54	4.20	1.43	2.51	4.16
1997	1.44	2.47	4.04	1.41	2.43	3.98
1998	2.54	3.72	5.37	2.45	3.64	5.31
1999	2.25	3.47	5.18	2.10	3.30	5.01
2000	1.91	3.08	4.77	1.69	2.84	4.53
2001	1.78	3.00	4.75	1.57	2.73	4.46
2002	1.51	2.72	4.47	1.30	2.45	4.18
2003	2.52	3.82	5.54	2.25	3.47	5.15
2004	2.82	4.21	6.02	2.46	3.77	5.56
2005	2.84	4.30	6.17	2.30	3.67	5.52

〈그림 3-3-29〉 상대적 빈곤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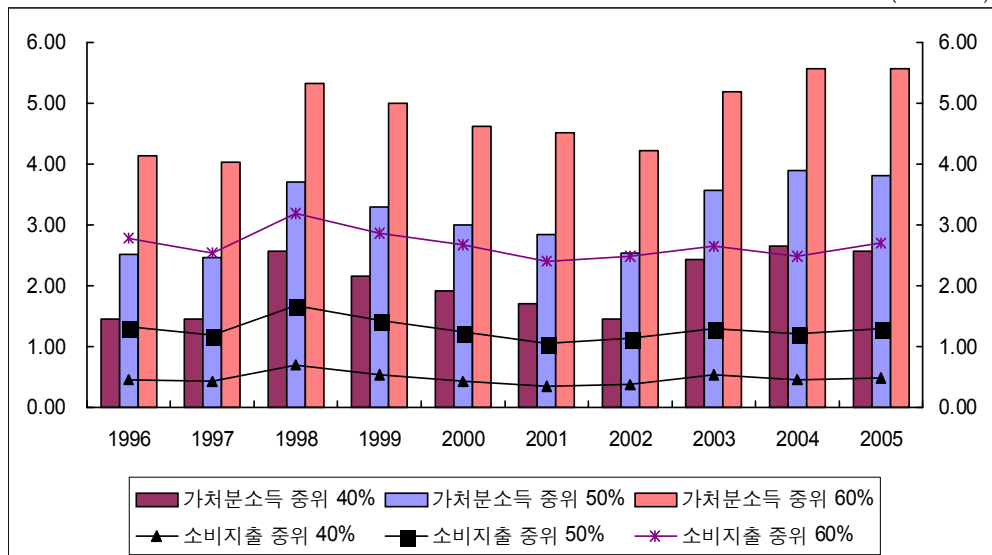
〈표 3-3-32〉 상대적 빈곤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1.47	2.51	4.13	0.47	1.33	2.79
1997	1.45	2.46	4.03	0.43	1.20	2.55
1998	2.56	3.69	5.33	0.69	1.67	3.20
1999	2.15	3.31	5.00	0.54	1.42	2.86
2000	1.92	2.99	4.61	0.44	1.26	2.68
2001	1.71	2.84	4.51	0.34	1.05	2.42
2002	1.47	2.54	4.21	0.39	1.14	2.48
2003	2.42	3.57	5.19	0.53	1.30	2.65
2004	2.65	3.88	5.58	0.46	1.21	2.49
2005	2.56	3.82	5.58	0.47	1.30	2.71

〈그림 3-3-30〉 상대적 빈곤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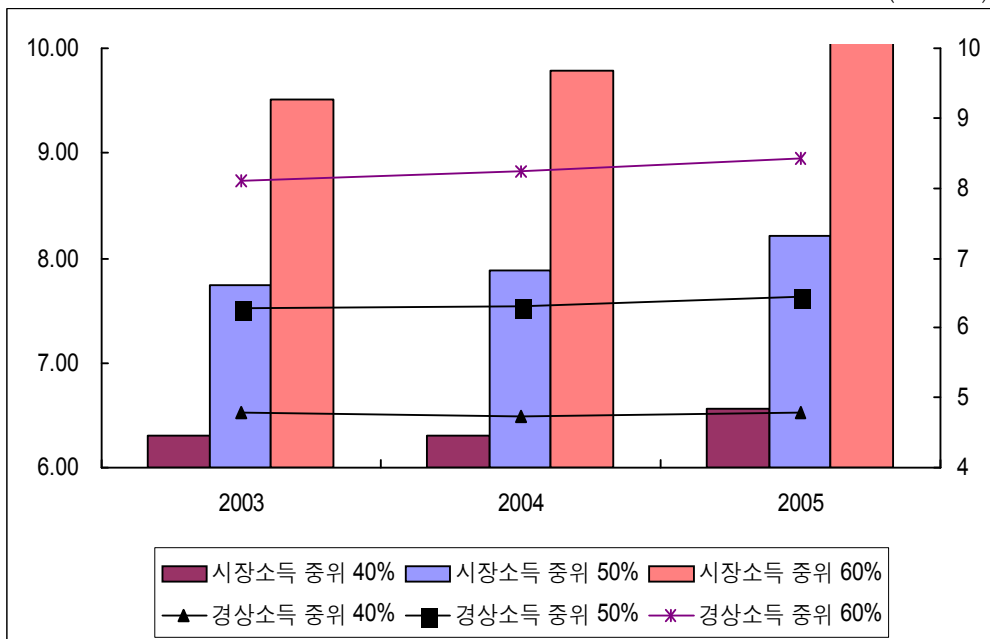
〈표 3-3-33〉 상대적 빈곤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6.30	7.74	9.51	4.79	6.28	8.11
2004	6.30	7.89	9.79	4.73	6.30	8.23
2005	6.56	8.20	10.11	4.78	6.43	8.42

〈그림 3-3-31〉 상대적 빈곤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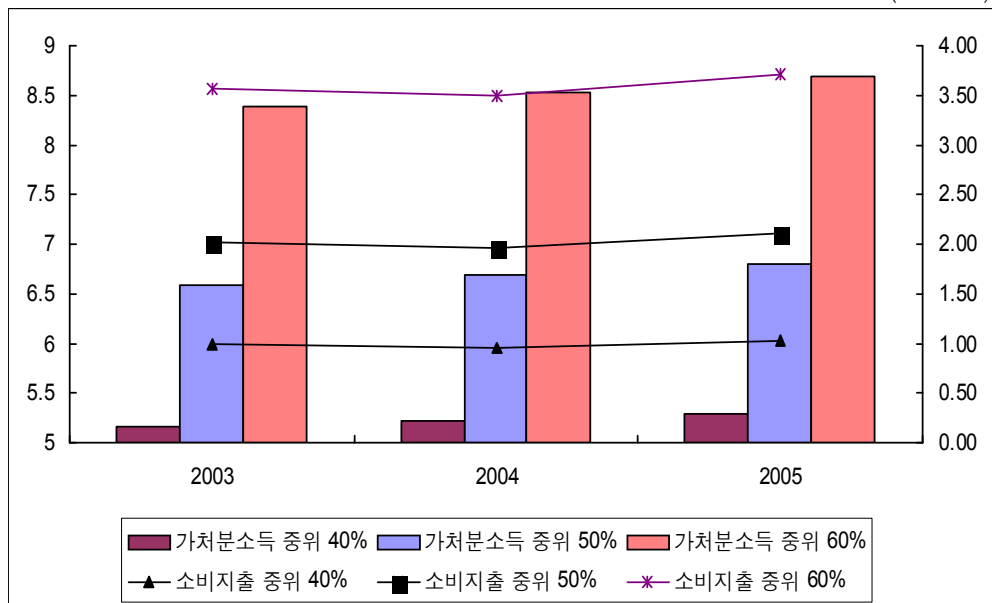
〈표 3-3-34〉 상대적 빈곤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5.17	6.59	8.38	0.99	2.01	3.56
2004	5.21	6.70	8.54	0.95	1.97	3.50
2005	5.28	6.81	8.69	1.03	2.11	3.71

〈그림 3-3-32〉 상대적 빈곤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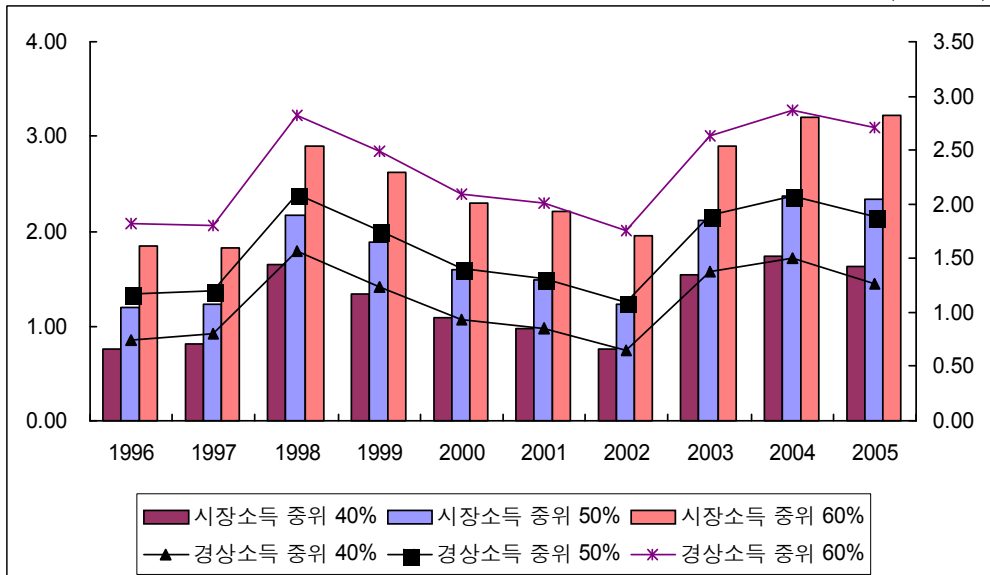
〈표 3-3-35〉 상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0.76	1.20	1.85	0.74	1.18	1.83
1997	0.82	1.22	1.84	0.81	1.21	1.81
1998	1.65	2.18	2.89	1.57	2.09	2.81
1999	1.33	1.88	2.62	1.23	1.75	2.48
2000	1.09	1.59	2.30	0.94	1.41	2.10
2001	0.98	1.48	2.21	0.86	1.32	2.01
2002	0.76	1.24	1.95	0.65	1.09	1.76
2003	1.54	2.12	2.90	1.37	1.90	2.64
2004	1.74	2.38	3.21	1.50	2.07	2.86
2005	1.63	2.33	3.21	1.27	1.88	2.71

〈그림 3-3-33〉 상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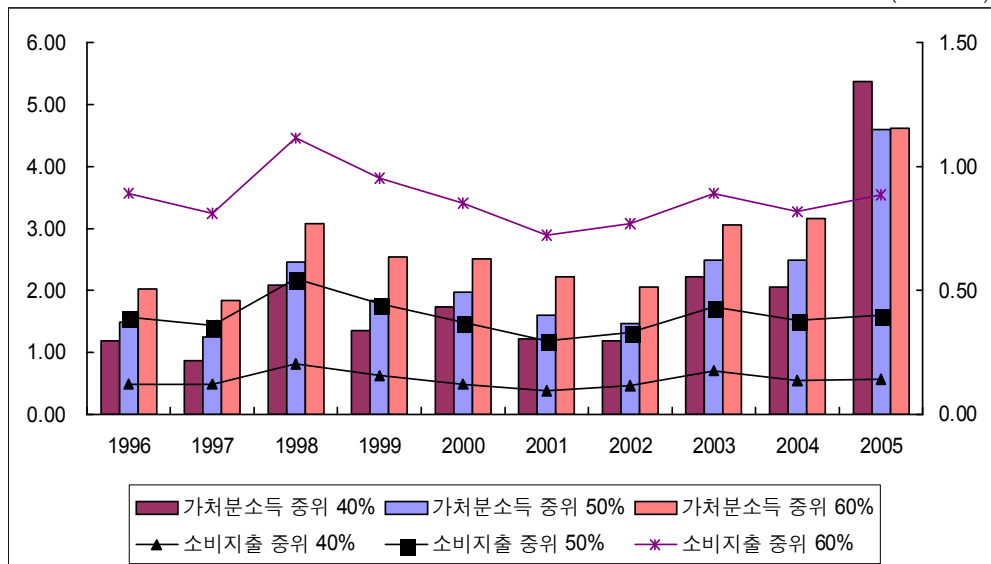
〈표 3-3-36〉 상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1.20	1.47	2.03	0.12	0.39	0.89
1997	0.86	1.24	1.85	0.12	0.36	0.81
1998	2.08	2.45	3.07	0.20	0.55	1.11
1999	1.34	1.84	2.54	0.16	0.44	0.95
2000	1.72	1.98	2.53	0.12	0.37	0.85
2001	1.22	1.60	2.22	0.09	0.30	0.72
2002	1.18	1.47	2.04	0.11	0.33	0.77
2003	2.22	2.49	3.07	0.17	0.43	0.89
2004	2.06	2.49	3.17	0.14	0.38	0.82
2005	5.38	4.59	4.62	0.14	0.40	0.88

〈그림 3-3-34〉 상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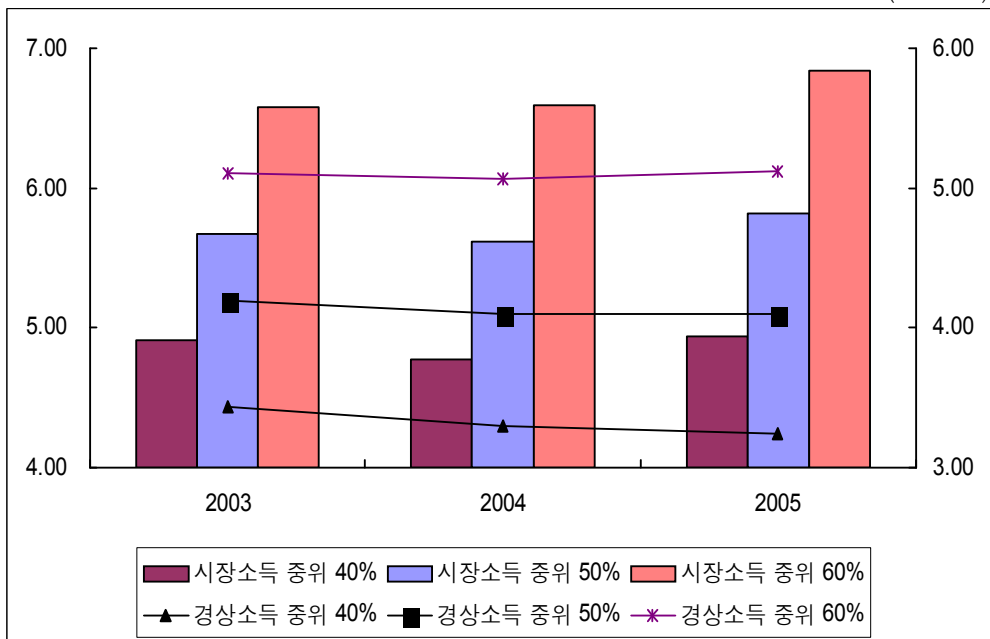
〈표 3-3-37〉 상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4.91	5.67	6.57	3.43	4.19	5.11
2004	4.77	5.61	6.60	3.30	4.10	5.06
2005	4.93	5.82	6.84	3.25	4.10	5.11

〈그림 3-3-35〉 상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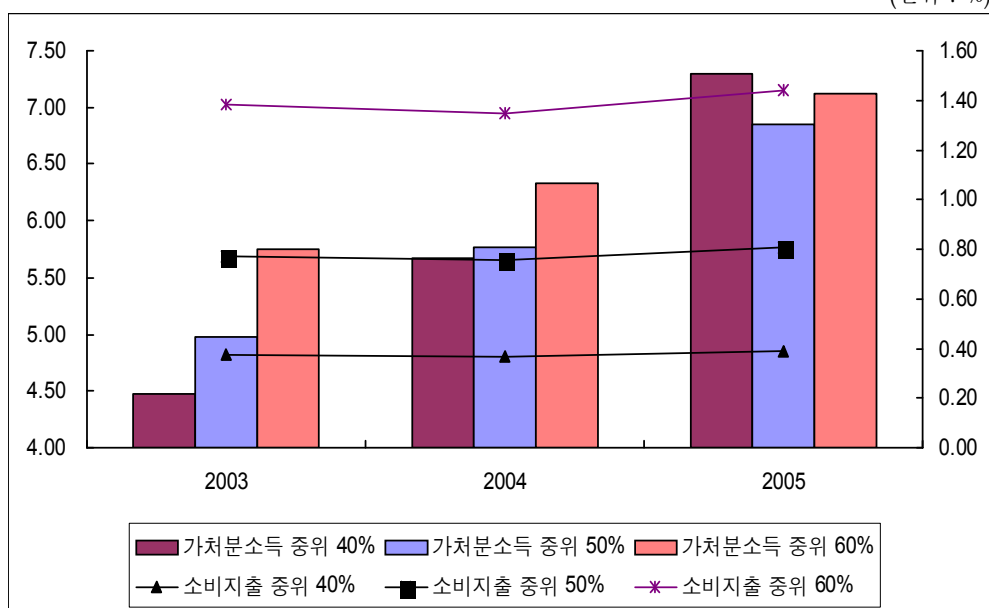
〈표 3-3-38〉 상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4.47	4.98	5.74	0.38	0.77	1.38
2004	5.67	5.77	6.34	0.37	0.75	1.35
2005	7.30	6.85	7.12	0.39	0.81	1.44

〈그림 3-3-36〉 상대적 제곱빈곤격차비율 : 전가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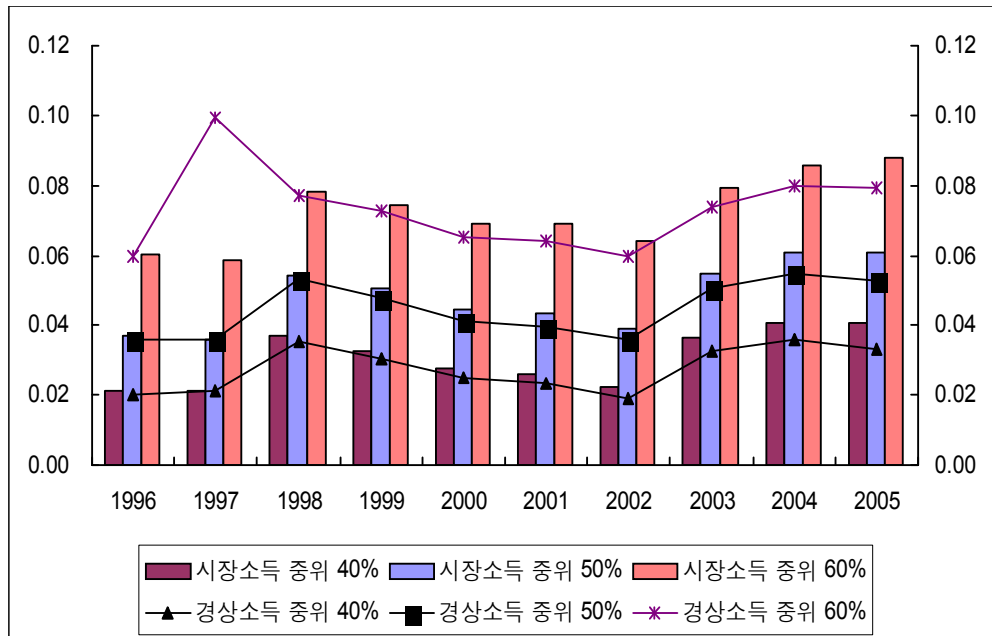
(단위 : %)



〈표 3-3-39〉 상대적 빈곤에 의한 센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0.0212	0.0370	0.0602	0.0201	0.0357	0.0599
1997	0.0209	0.0359	0.0584	0.0212	0.0359	0.0996
1998	0.0367	0.0543	0.0783	0.0356	0.0530	0.0773
1999	0.0324	0.0503	0.0745	0.0303	0.0478	0.0725
2000	0.0278	0.0448	0.0689	0.0249	0.0415	0.0653
2001	0.0262	0.0434	0.0688	0.0233	0.0396	0.0641
2002	0.0222	0.0392	0.0640	0.0193	0.0356	0.0597
2003	0.0363	0.0549	0.0792	0.0328	0.0503	0.0741
2004	0.0408	0.0608	0.0857	0.0357	0.0548	0.0796
2005	0.0407	0.0609	0.0878	0.0332	0.0527	0.0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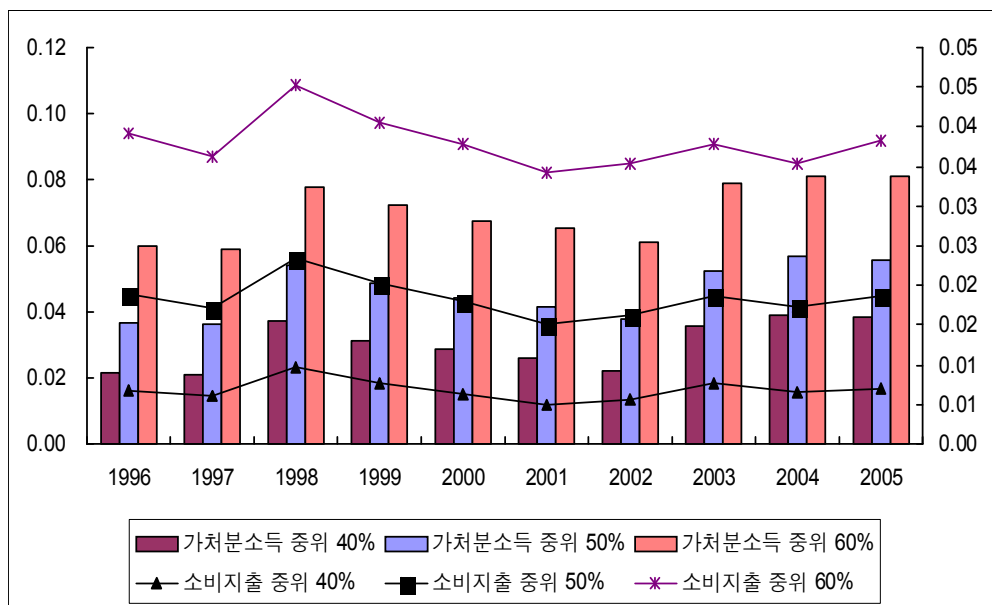
〈그림 3-3-37〉 상대적 빈곤에 의한 센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표 3-3-40〉 상대적 빈곤에 의한 센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0.0219	0.0369	0.0598	0.0067	0.0189	0.0393
1997	0.0213	0.0361	0.0589	0.0062	0.0171	0.0363
1998	0.0374	0.0543	0.0780	0.0097	0.0235	0.0454
1999	0.0314	0.0486	0.0725	0.0078	0.0202	0.0405
2000	0.0289	0.0444	0.0674	0.0063	0.0179	0.0379
2001	0.0258	0.0417	0.0655	0.0050	0.0151	0.0343
2002	0.0224	0.0376	0.0612	0.0056	0.0163	0.0353
2003	0.0359	0.0526	0.0792	0.0076	0.0188	0.0378
2004	0.0391	0.0567	0.0809	0.0065	0.0172	0.0355
2005	0.0382	0.0559	0.0809	0.0069	0.0186	0.0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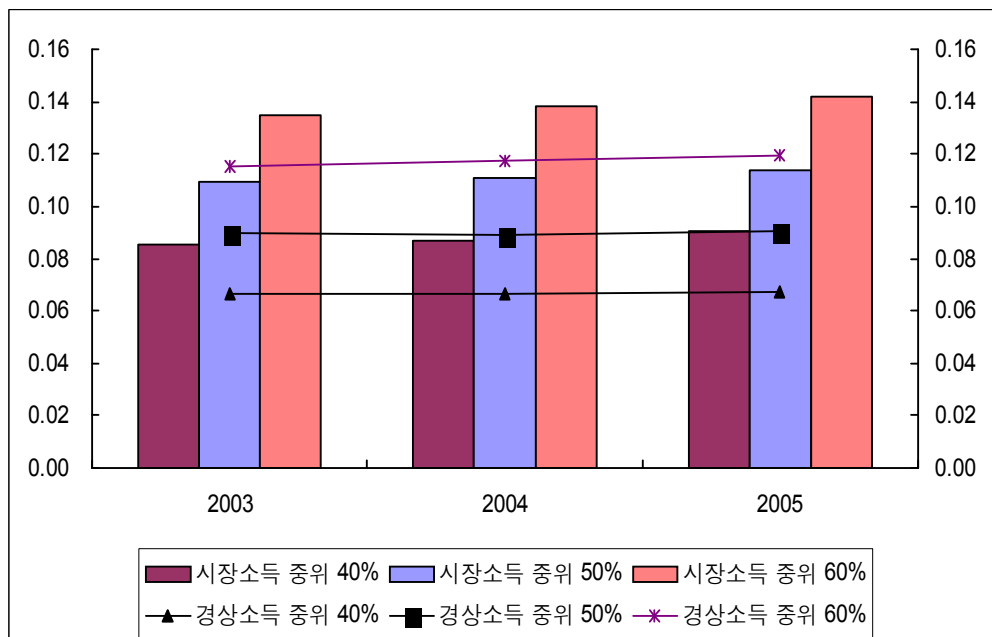
〈그림 3-3-38〉 상대적 빈곤에 의한 센지수 : 도시근로자기준



〈표 3-3-41〉 상대적 빈곤에 의한 센지수 : 전가구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0.0857	0.1092	0.1348	0.0668	0.0894	0.1152
2004	0.0870	0.1106	0.1383	0.0668	0.0893	0.1173
2005	0.0905	0.1138	0.1421	0.0676	0.0903	0.1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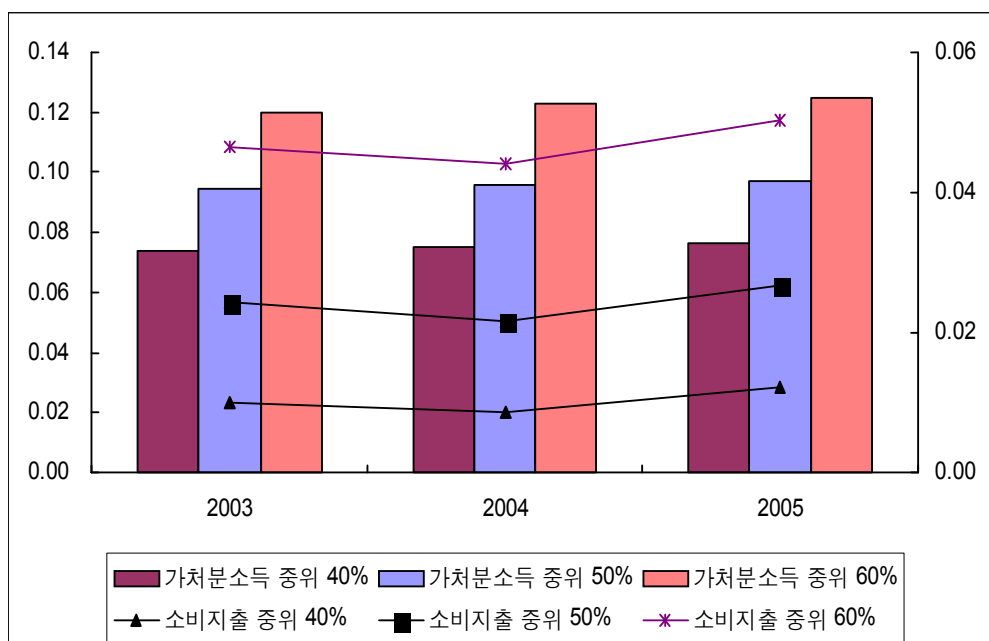
〈그림 3-3-39〉 상대적 빈곤에 의한 센지수 : 전가구기준



〈표 3-3-42〉 상대적 빈곤에 의한 센지수 : 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0.0736	0.0945	0.1201	0.0099	0.0243	0.0466
2004	0.0748	0.0961	0.1229	0.0086	0.0216	0.0439
2005	0.0766	0.0974	0.1247	0.0122	0.0267	0.0503

〈그림 3-3-40〉 상대적 빈곤에 의한 센지수 : 전가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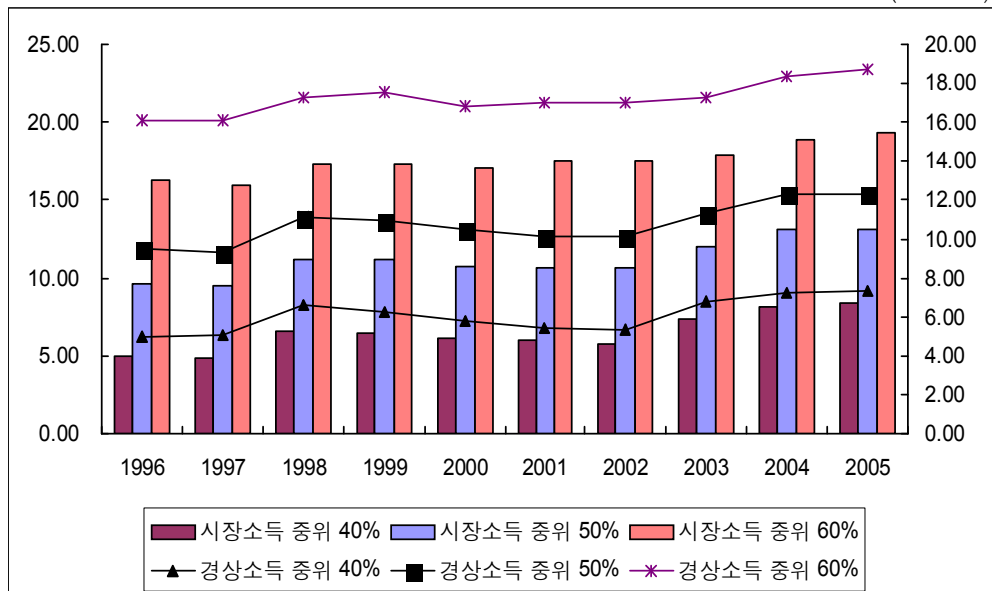
〈표 3-3-43〉 상대적 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99	9.62	16.25	4.95	9.51	16.14
1997	4.85	9.48	15.90	5.06	9.32	16.11
1998	6.61	11.17	17.25	6.57	11.10	17.29
1999	6.49	11.16	17.30	6.20	10.93	17.55
2000	6.09	10.71	17.07	5.77	10.53	16.83
2001	6.00	10.61	17.53	5.43	10.16	17.00
2002	5.77	10.63	17.49	5.31	10.18	17.06
2003	7.40	11.96	17.83	6.80	11.30	17.27
2004	8.11	13.10	18.85	7.22	12.31	18.33
2005	8.41	13.08	19.35	7.33	12.31	18.73

〈그림 3-3-41〉 상대적 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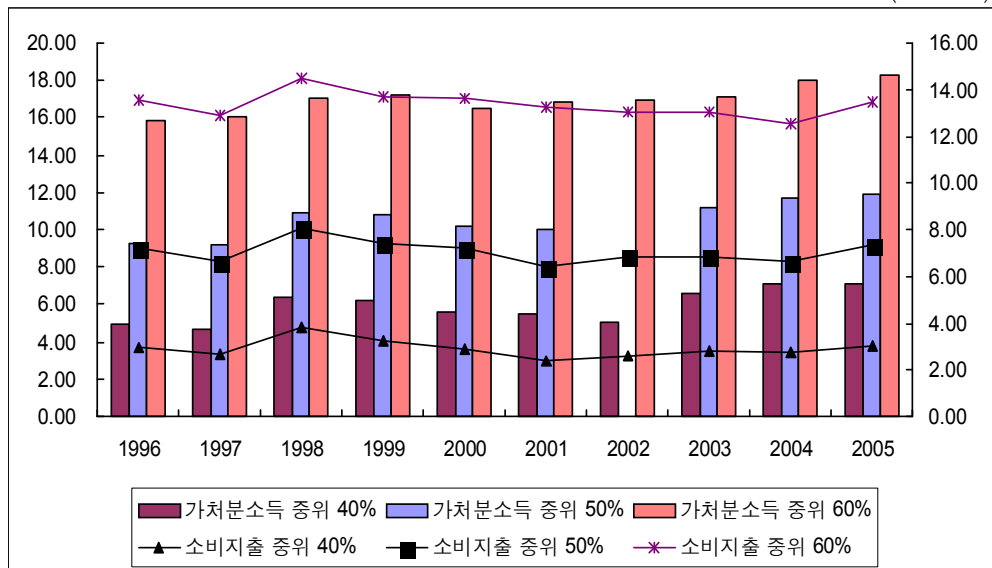
〈표 3-3-44〉 상대적 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94	9.31	15.86	2.95	7.20	13.57
1997	4.66	9.18	16.02	2.64	6.62	12.93
1998	6.40	10.87	17.04	3.79	8.04	14.49
1999	6.18	10.85	17.17	3.21	7.44	13.70
2000	5.59	10.15	16.51	2.86	7.23	13.62
2001	5.51	10.00	16.86	2.39	6.45	13.24
2002	5.07	9.00	16.95	2.57	6.81	13.05
2003	6.58	11.15	17.08	2.84	6.85	13.02
2004	7.09	11.73	18.02	2.74	6.62	12.52
2005	7.09	11.91	18.30	3.06	7.33	13.47

〈그림 3-3-42〉 상대적 빈곤가구율 : 도시근로자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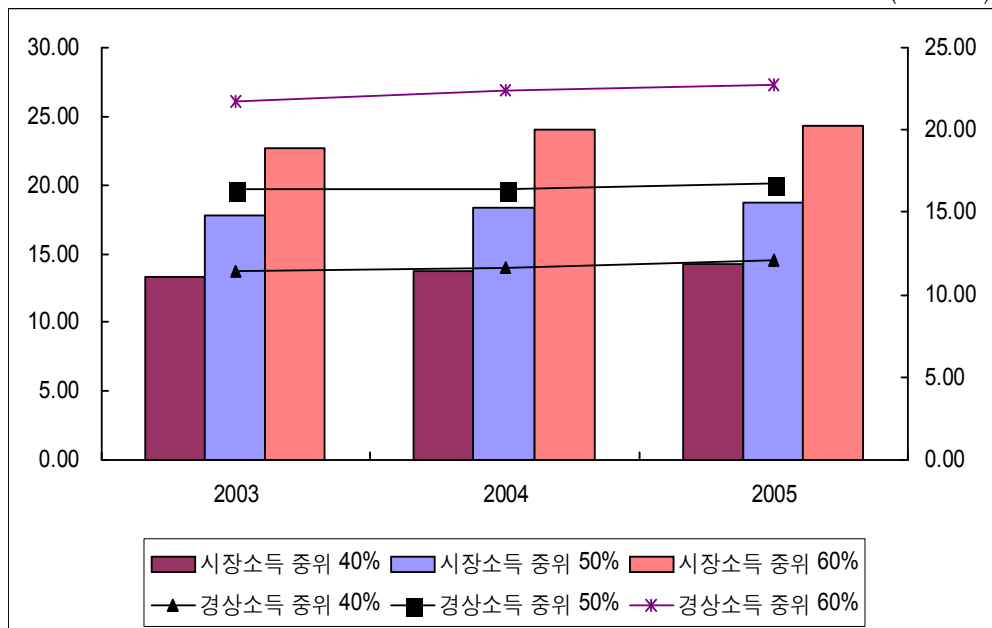
〈표 3-3-45〉 상대적 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3.27	17.77	22.66	11.43	16.37	21.75
2004	13.75	18.34	24.02	11.68	16.37	22.36
2005	14.27	18.75	24.25	12.13	16.79	22.78

〈그림 3-3-43〉 상대적 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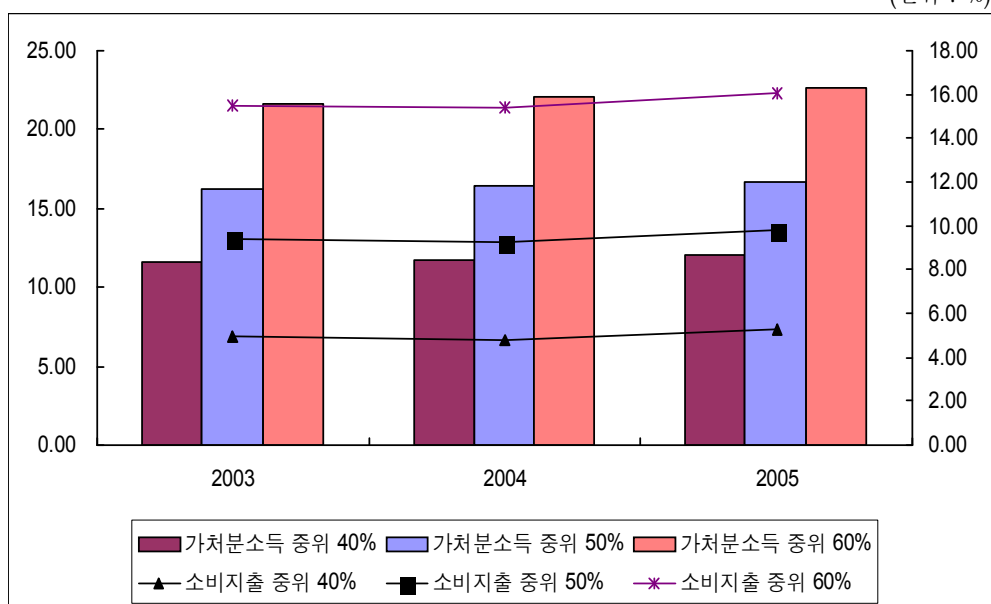
〈표 3-3-46〉 상대적 빈곤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11.57	16.19	21.63	4.93	9.38	15.52
2004	11.74	16.40	22.06	4.75	9.21	15.38
2005	12.09	16.62	22.59	5.25	9.81	16.07

〈그림 3-3-44〉 상대적 빈곤가구율 : 전가구기준

(단위 : %)



제4장 불평등 관련 지표의 변화추이

제1절 지니계수

1. 개 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불평등 지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이다. 이러한 지니계수는 로렌츠가 고안한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산출된다. 로렌츠 곡선은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순서대로 정렬한 인구의 누적비율이 횡축에 나타내어지고, 인구의 $x\%$ 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의 누적비율이 종축을 구성하게 된다. 이 때, 인구의 0%가 0%의 소득을 향유하며, 전체를 의미하는 100%는 모든 소득을 점유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은 단위 사각형의 왼쪽 아래 꼭지점으로부터 대각선방향으로 정반대쪽에 위치한 오른쪽 위 꼭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으로 표현된다. 이 때, 만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완전 평등의 분배상태라면 로렌츠 곡선은 단순히 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대각선(45도선)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한 평등이 아닌 상태에서는 하위 소득집단들은 비율적으로 더 낮은 비율의 소득을 점유하게 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은 일반적으로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대각선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될 것이며, 그 기울기는 인구의 점점 더 부유한 부분으로 움직일수록 점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는 대각선과 실제의 소득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존재하는데, 완전 평등을 나타내는 대각선에 의해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비교할 때 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지니계수이다. 이러한 지니계수를 정의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쌍의 소득들 간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평균차의 $1/2$ 로도 계산될 수 있다.

$$\begin{aligned}
G &= (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
&= 1 - (1/n^2\mu) \sum_{i=1}^n \sum_{j=1}^n \text{Min}(y_i, y_j) \\
&= 1 + (1/n) - (2/n^2\mu)[y_1 + 2y_2 + \dots + ny_n] \text{ for } y_1 \geq y_2 \geq \dots \geq y_n.
\end{aligned}$$

이상과 같이 계측되는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현실의 소득분배 상태가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져 로렌즈 곡선이 대각선과 동일하게 그려질 경우 그 사이에 위치한 면적은 0이 된다. 따라서, 이 때 산출되는 지니계수는 0이다. 반면에, 특정 사회에서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처럼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태에서는 로렌즈 곡선이 단위 사각형의 횡축과 종축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처럼 완전 평등을 가정한 대각선과 로렌즈 곡선 사이의 면적은 직각삼각형의 면적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인 불완전 평등을 상정한 경우 지니계수의 값은 1이 된다. 따라서, 대표적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그 값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며, 0에 가까워질수록 평등한 상태를,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지니계수 변화추이

대표적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의 변화추이를 살펴 보기 위해 OECD의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의 범주를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먼저, 일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체의 이전소득은 제외하고 있는 가장 좁은 개념이다. 이와 같은 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것이 시장소득의 개념인데, 일차소득과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측정된 불평등지수 차이는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추가한 것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상소득으로 정의된다. 경상소득은 총소득의 개념으로,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측정된 불평등지수 차이는 다양한 소득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변화되는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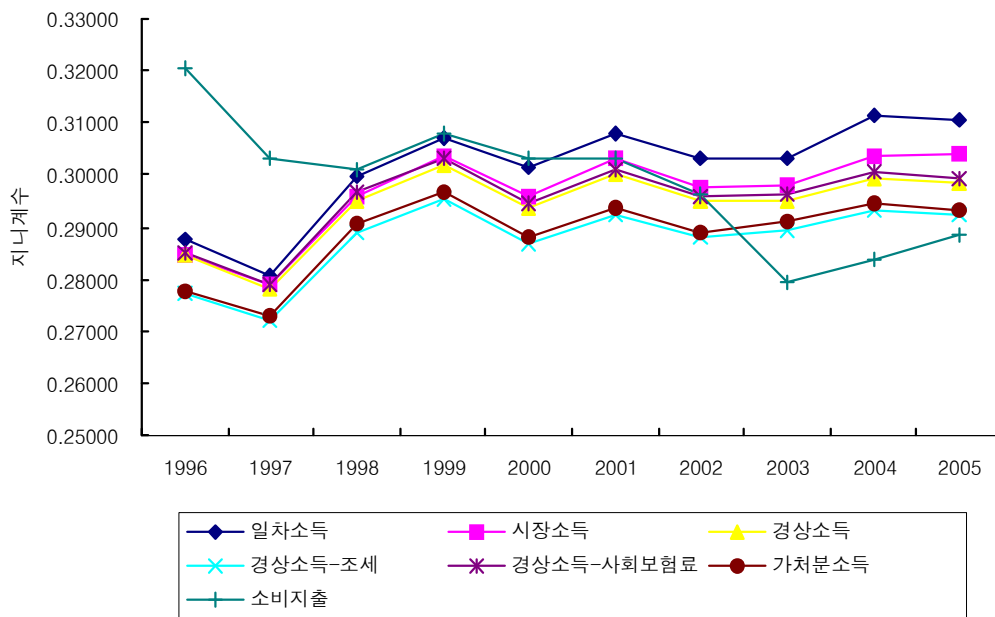
다. 마지막으로,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모두 제외한 것이 가처분소득의 개념이며, OECD나 LIS 등에서 빈곤 및 불평등 관련 비교연구 등에서 가장 널리 활용된다. 여기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측정한 불평등 지표의 차이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에 의한 불평등 변화정도를 보여주는데, 순수하게 조세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상소득에서 조세만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경상소득 기준의 측정결과와 비교하면 된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상소득에서 사회보험료만을 제외한 소득으로 기준으로 측정된 결과와 경상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의 차이는 사회보험료에 의한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이러한 소득개념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전 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지니계수의 변화경향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공적이전, 사적이전,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에 의해 지니계수에 나타나는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4-1-1>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변화추이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 조세	경상소득- 사회보험료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996	0.28750	0.28455	0.28439	0.27715	0.28485	0.27779	0.32034
1997	0.28062	0.27898	0.27821	0.27200	0.27884	0.27285	0.30321
1998	0.29972	0.29590	0.29513	0.28894	0.29667	0.29072	0.30121
1999	0.30699	0.30380	0.30203	0.29528	0.30325	0.29665	0.30804
2000	0.30132	0.29596	0.29362	0.28660	0.29456	0.28788	0.30308
2001	0.30794	0.30298	0.30018	0.29254	0.30121	0.29377	0.30316
2002	0.30307	0.29769	0.29494	0.28798	0.29584	0.28907	0.29635
2003	0.30316	0.29801	0.29499	0.28951	0.29616	0.29093	0.27939
2004	0.31145	0.30355	0.29946	0.29321	0.30045	0.29441	0.28388
2005	0.31069	0.30414	0.29860	0.29224	0.29934	0.29314	0.28857

<그림 4-1-1>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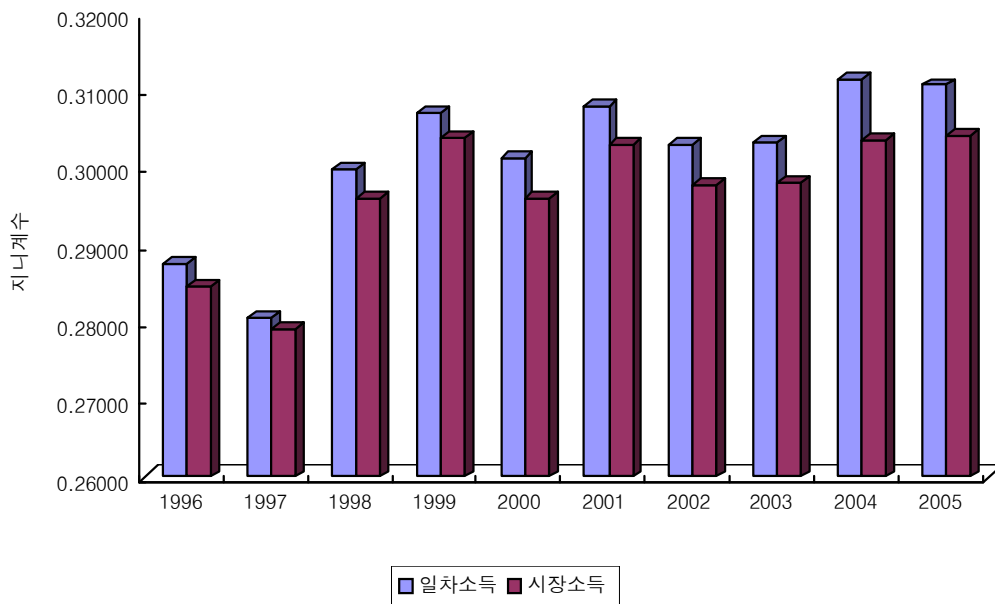
다양한 소득개념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97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의 지니계수는 경제위기 당시보다도 오히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2004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2005년에 0.30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산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1996년 0.32034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3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2005년에 다시 0.28857까지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일차소득과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측정한 지니계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적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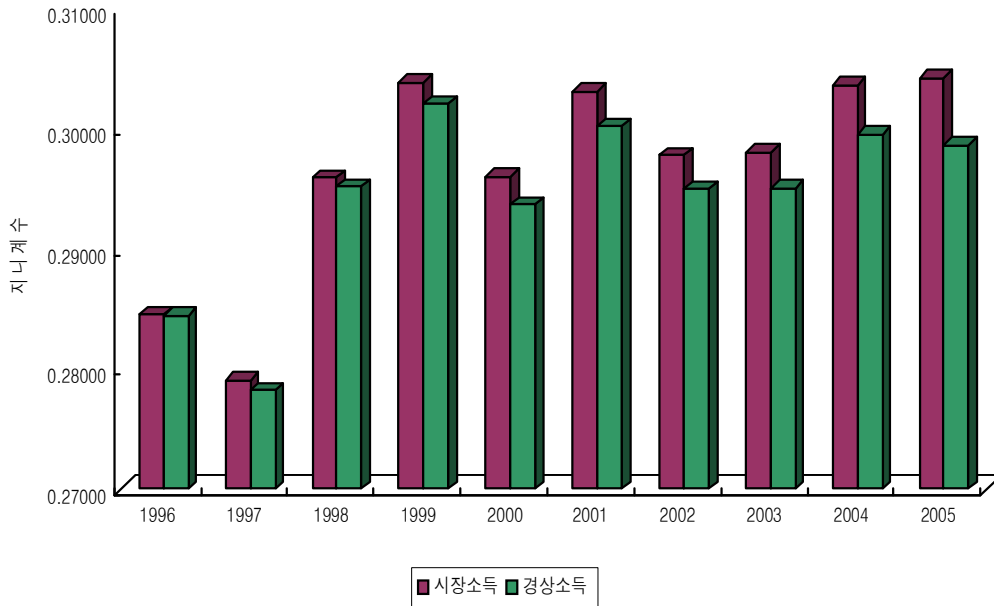
의해 개선되고 있는 불평등의 정도가 다소 증가하였음으로 나타낸다. 1996년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해 지니계수가 약 0.003만큼 감소하였으나,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0.008까지 감소하고 있다.

<그림 4-1-2> 사적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추이 (도시근로자가구)



공적이전에 의한 불평등 개선정도는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측정한 지니계수의 차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는 0.0002에 불과할 정도로 두 지니계수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적이전에 해당하는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 초에 약 0.002~0.003을 나타냈으며 2005년에는 약 0.006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2000년 이후 확대된 각종 사회안전망에 의해 공적이전의 규모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불평등 개선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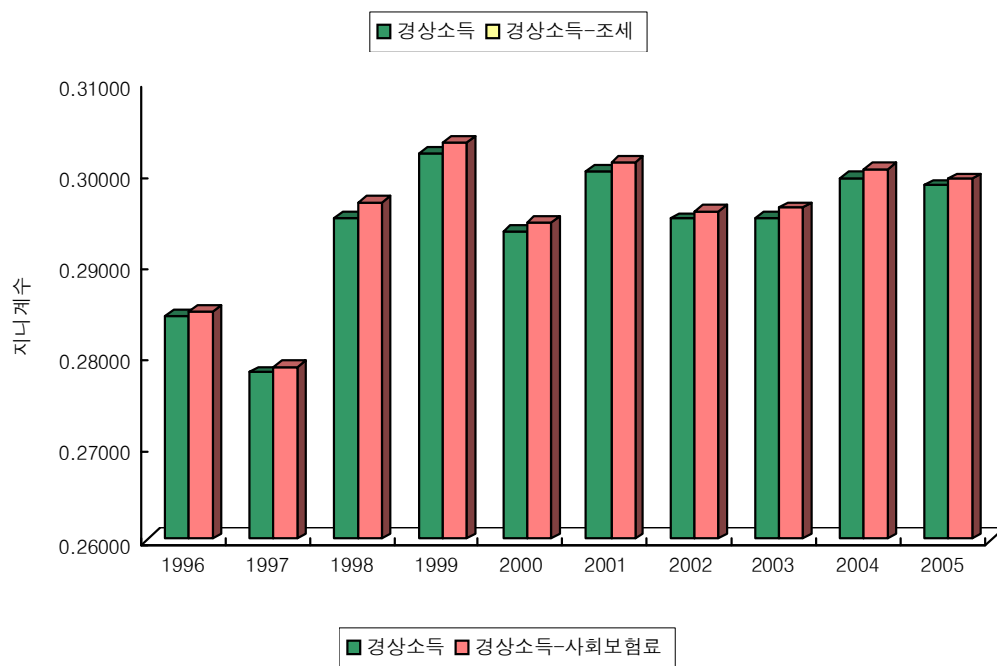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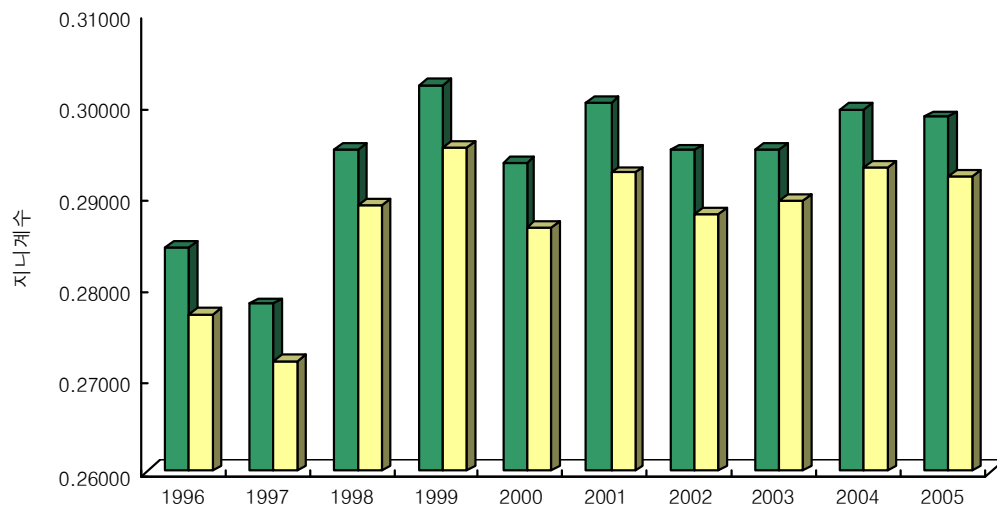
<그림 4-1-3> 공적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추이 (도시근로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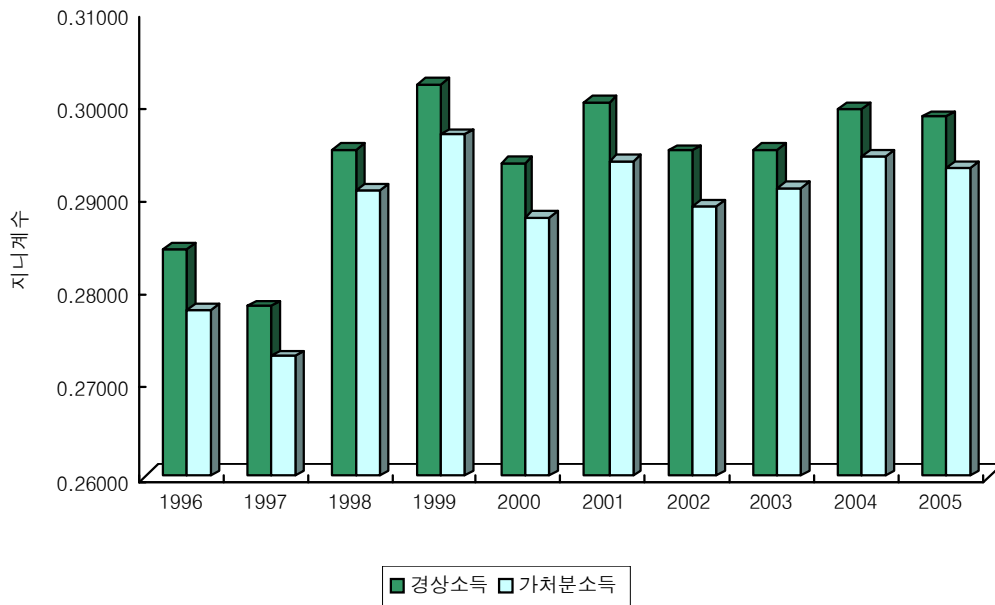


다음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각각 고려할 경우의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먼저 경상소득에서 조세를 고려한 후 측정한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조세체계의 누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평등의 개선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996년부터 거의 유사하게 0.006~0.007 수준의 감소효과를 보임으로써 그 개선정도가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경상소득에서 사회보험료만을 고려한 후 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오히려 약 0.001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대해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상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다소 증가시킬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의한 불평등 개선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측정한 불평등지수 차이인데, 그 감소 폭은 약 0.005~0.006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림 4-1-4> 조세 및 사회보험료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추이 (도시근로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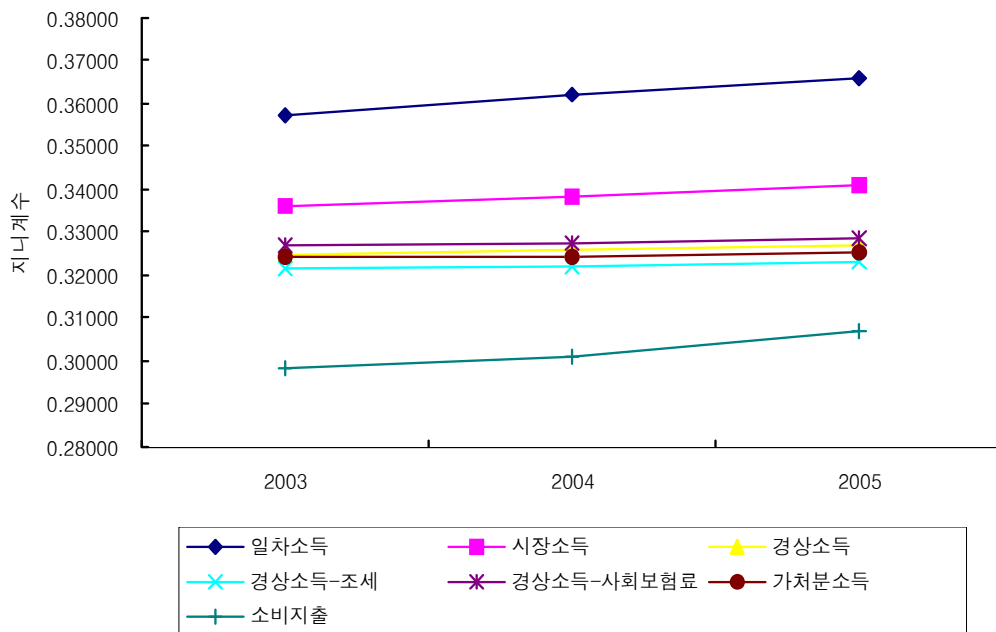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의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소득개념 및 소비지출 기준의 지니계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차소득과 시장소득의 증가폭이 약 0.0085와 0.005로 다른 소득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차소득과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의 증가보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의 증가폭이 다소 완만한 것은 공적이전에 의한 불평등 개선효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2> 전 국가계조사 지니계수 변화추이

구분	전 국가계조사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경상소득- 조세	경상소득- 사회보험료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2003	0.35736	0.33630	0.32485	0.32154	0.32713	0.32411	0.29822
2004	0.36201	0.33846	0.32580	0.32202	0.32779	0.32428	0.30096
2005	0.36586	0.34135	0.32692	0.32309	0.32887	0.32531	0.30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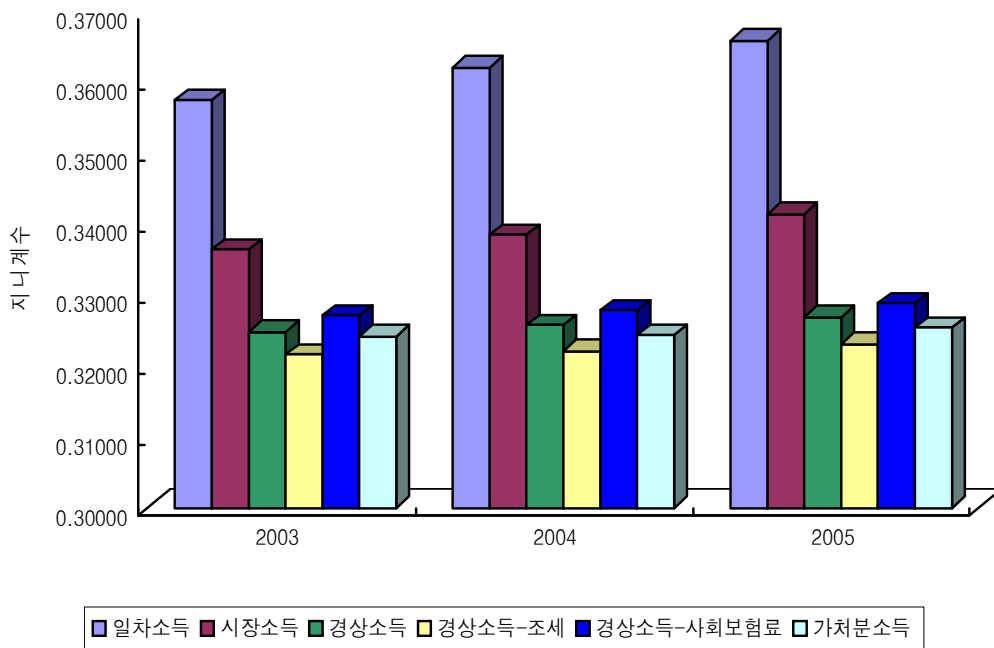
<그림 4-1-5> 전 국가계조사 지니계수 변화추이



다음으로 다양한 소득기준에 의해 측정된 지니계수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에 의해 시장소득에 의한 지니계수가 일차소득에 기준의 지니계수보다 0.02~0.025만큼 감소하고 있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에 의해서는 약 0.012~0.015의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개선정도는 약간씩 증가되고 있다.

한편, 조세 및 사회보험료에 의한 불평등 변화의 방향은 다르지만 2003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세의 불평등 개선효과에 의해 가처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보다 0.001~0.002 정도 낮아지고 있다.

<그림 4-1-6> 사적이전, 공적이전, 조세, 사회보험료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추이 (전국가계조사)



제 2절 앳킨슨지수

1. 개요

앳킨슨(Atkinson, 1970)은 불평등에 대한 사회의 기피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그의 이름을 따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라고 한다. 불평등에 대한 사회의 기피정도는 한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평등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판단을 드러낸다. 마치 사회도 개인처럼 특정한 자원의 배분(여기서는 개인별 소득의 분포)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앳킨슨의 접근방법으로 사회후생적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

앳킨슨 지수에 대한 이해는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level of income)이란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한 사회에서 개인간에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사회는 현재의 분배상태에 대해 일정한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하자. 만일 현재의 분배상태가 매우 불평등하다면, 사회의 만족도는 낮을 것이고 평등하다면 반대로 높을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한 분배상태에서 사회가 얻는 만족도와 동일한 크기의 만족도는 개인간 분배를 어떤 수준의 값에서 평등화시킴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만족도와 동일한 사회적 만족도를 가져다주는 균등분배소득(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는 소득)의 크기를 앳킨슨은 균등분배대등소득이라고 하였다. 한 사회의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y_e , 평균소득을 μ 라고 하면, 앳킨슨지수는 다음의 식(4-2-1)처럼 표현된다.

$$A = 1 - (y_e / \mu) \text{ ----- 식(4-2-1)}$$

만일 이 사회의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y_e 는 평균소득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A의 값은 0이 된다. 반대로 소득분배가 극도로 불평등하여 한 사회의 총 소득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간주하면, y_e 는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따라서 A는 1의

값을 갖는다. 즉 앳킨슨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y_e 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앳킨슨은 다음과 같은 식을 제시하였다.

$$A_\varepsilon = 1 - \left[\frac{1}{N} \sum \left(\frac{y_i}{\mu} \right)^{1-\varepsilon} \right]^{\frac{1}{1-\varepsilon}} \quad \varepsilon \neq 1, \varepsilon \geq 0 \quad \text{-----식 (4-2-2)}$$

$$= 1 - \exp \left[\frac{1}{N} \sum \ln \frac{y_i}{\mu} \right] \quad \varepsilon = 1$$

여기서 ε 은 불평등에 대한 사회의 기피정도를 나타내는 패러미터이다. ε 이 커질수록 사회구성원은 불평등을 싫어하며, $\varepsilon = 0$ 이면 불평등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ε 이 무한대로 커진다면 이 사회는 불평등을 극도로 기피하여, 오직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수준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사회임을 의미한다. ε 의 값이 1라는 의미는 1원의 소득을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0.5원의 사회적 손실이 생겨도 개의치 않을 만큼 사회가 불평등을 싫어한다는 뜻으로, $\varepsilon=2$ 일 경우는 3/4원의 손실이 생겨도 개의치 않을 만큼(즉 재분배 받는 사람에게 1/4원만 전달되도 만족할만큼) 사회가 불평등을 싫어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준구 1992).

앳킨슨 지수를 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ε 의 값을 0.5, 1.0, 1.5, 2.0, 3.0 등으로 다양하게 부여하여 구하는데, 이하에서는 0.5, 2.0, 3.0에 국한하여 구하도록 한다.

2. 앳킨슨지수의 변화추이

앳킨슨 지수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1999년에 악화되었다가 이후 미세한 폭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한 후 2003년을 기준으로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1999년과 2003년의 악화정도가 심하여, $\varepsilon = 2.0$ 으로 계산한 경우 가처분소득의 경우 1999년과 2003년에 예외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04년 이후에도 악화 경향이 일반적이나 $\varepsilon = 0.5$ 로 계산한 가처분소득 앳킨슨지수와 $\varepsilon = 3.0$ 으로 계산한 시장소득 앳킨슨지수의 경우 '04-'05년간에 다소 개선이 있었다. 소득과 달리 소비지출의 앳킨슨지수($\varepsilon = 0.5$)는 하락세

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의 앳킨슨지수가 상승하던 외환위기 직후의 기간과 '02-'03년의 기간동안 소비의 지수는 하락한 것이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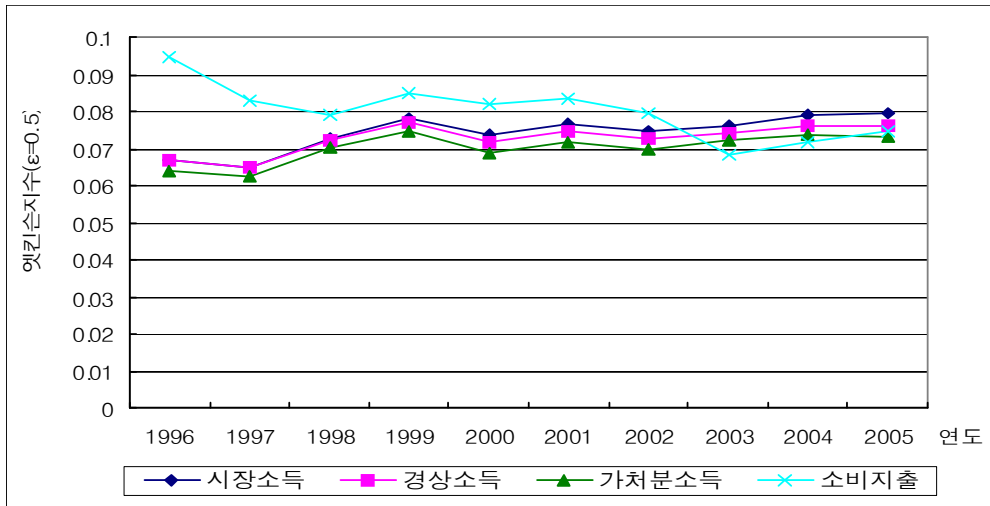
<표 4-2-1>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앳킨슨지수 변화(도시근로자)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varepsilon=0.5$	$\varepsilon=2.0$	$\varepsilon=3.0$	$\varepsilon=0.5$	$\varepsilon=2.0$	$\varepsilon=3.0$
1996	0.06691	0.26097	0.42873	0.06684	0.26071	0.42901
1997	0.06506	0.26333	0.47673	0.06475	0.26213	0.47507
1998	0.07273	0.33896	0.74089	0.07237	0.33136	0.72202
1999	0.07785	0.34159	0.66876	0.07683	0.33350	0.66016
2000	0.07352	0.32007	0.70436	0.07191	0.29881	0.58756
2001	0.07658	0.32242	0.63500	0.07480	0.30723	0.60250
2002	0.07471	0.29696	0.53735	0.07292	0.28636	0.52427
2003	0.07616	0.37688	0.87362	0.07414	0.34226	0.72420
2004	0.07879	0.41390	0.90226	0.07595	0.35023	0.67498
2005	0.07970	0.41768	0.88118	0.07609	0.37044	0.87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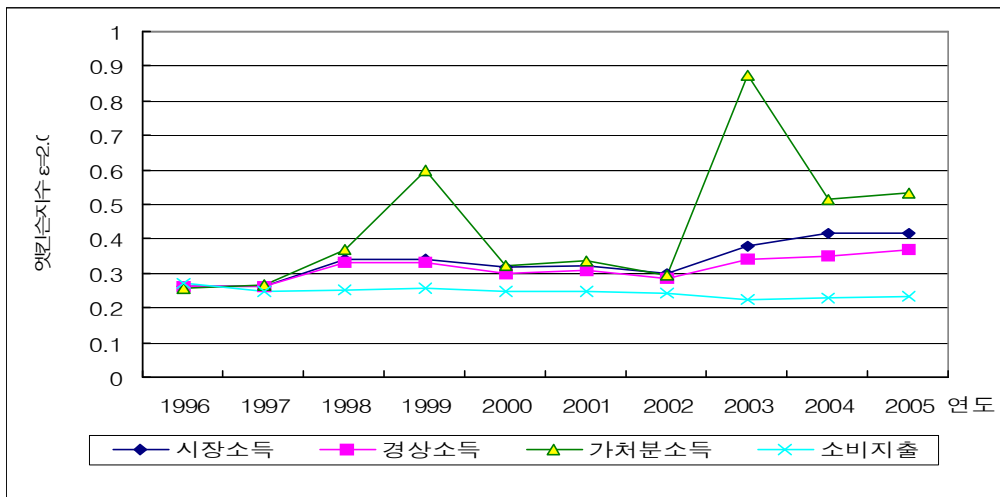
<표 4-2-2>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앳킨슨지수 변화(도시근로자)

구분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varepsilon=0.5$	$\varepsilon=2.0$	$\varepsilon=3.0$	$\varepsilon=0.5$	$\varepsilon=2.0$	$\varepsilon=3.0$
1996	0.06398	0.25655	0.46115	0.09443	0.26913	0.35352
1997	0.06254	0.26787	0.59405	0.08303	0.24675	0.33105
1998	0.07033	0.37025	0.88214	0.07906	0.25281	0.34765
1999	0.07448	0.59607	0.98734	0.08473	0.25668	0.34690
2000	0.06890	0.32419	0.80414	0.08203	0.24815	0.33496
2001	0.071814	0.33753	0.83764	0.083418	0.24571	0.32765
2002	0.06985	0.29569	0.74327	0.07961	0.24147	0.32675
2003	0.07216	0.87330	0.99886	0.06823	0.22467	0.31696
2004	0.07344	0.51362	0.98153	0.07187	0.22759	0.31501
2005	0.07309	0.53501	0.98415	0.07443	0.23528	0.32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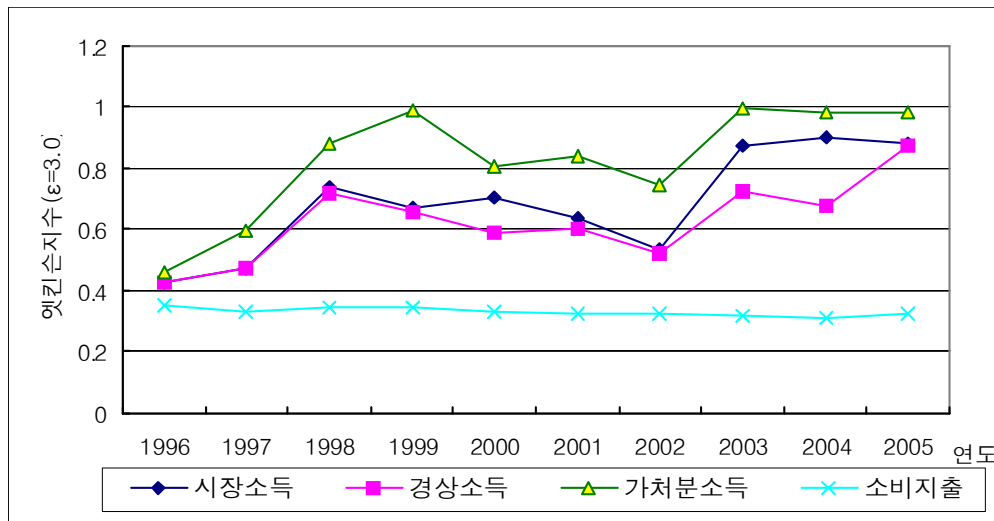
<그림 4-2-1 > 근로자가구의 엡킨슨지수 $\epsilon=0.5$



<그림 4-2-2> 근로자가구의 엡킨슨지수 $\epsilon=2.0$



<그림 4-2-3 > 근로자가구의 앳킨슨지수 $\varepsilon=3.0$



비도시근로자를 포함한 전체가구의 경우 $\varepsilon = 0.5$ 인 앳킨슨 지수는 2003년 이후 미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varepsilon = 2.0$ 으로 파악했을 경우의 앳킨슨지수는 '03-'04년간에 하락했다. $\varepsilon = 3.0$ 일 경우의 앳킨슨지수는 가처분소득의 지수가 '04-'05년 사이에 약간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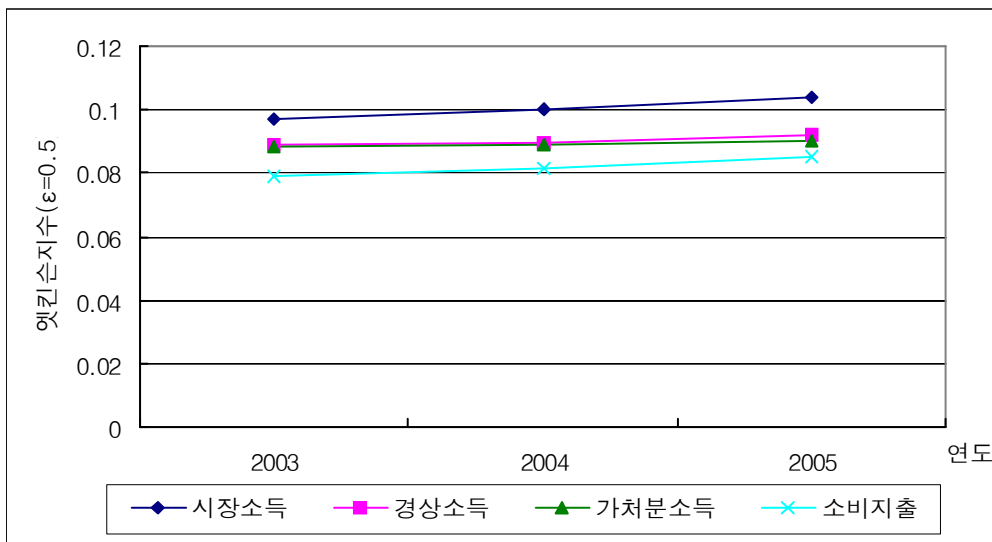
<표 4-2-3>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앳킨슨지수(전체가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varepsilon=0.5$	$\varepsilon=2.0$	$\varepsilon=3.0$	$\varepsilon=0.5$	$\varepsilon=2.0$	$\varepsilon=3.0$
2003	0.09711	0.66305	0.95907	0.08861	0.44723	0.87704
2004	0.09988	0.72643	0.98281	0.08973	0.45507	0.86375
2005	0.10369	0.74562	0.97568	0.09174	0.50557	0.92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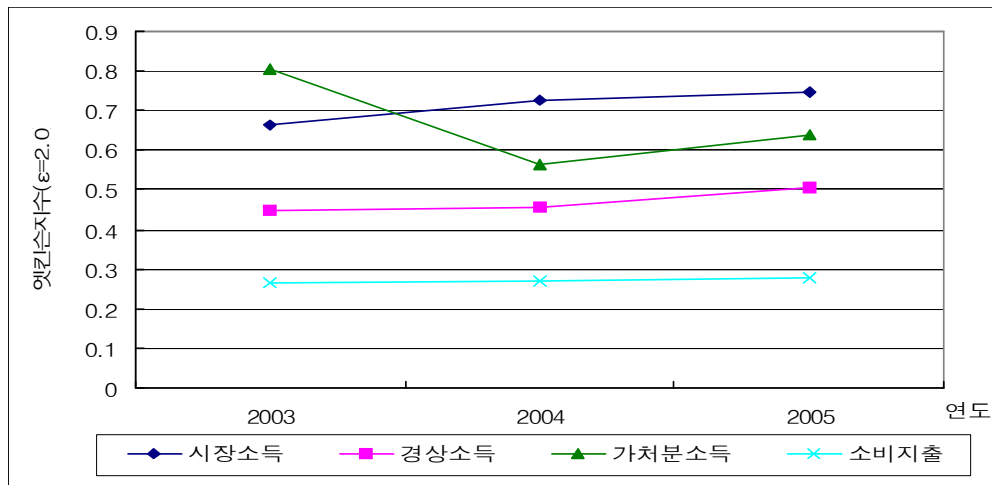
<표 4-2-4>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의 앳킨슨지수(전체가구)

구분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varepsilon=0.5$	$\varepsilon=2.0$	$\varepsilon=3.0$	$\varepsilon=0.5$	$\varepsilon=2.0$	$\varepsilon=3.0$
2003	0.08802	0.80430	0.99828	0.07923	0.26659	0.38696
2004	0.08866	0.56466	0.97404	0.08118	0.27005	0.39548
2005	0.09041	0.63703	0.98580	0.08498	0.27929	0.4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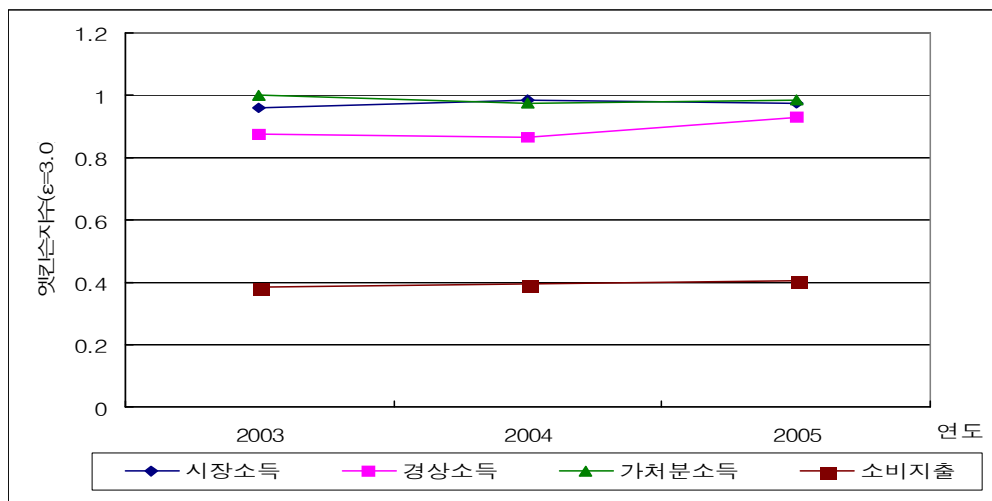
<그림 4-2-4> 전가구의 dpt킨슨지수($\varepsilon=0.5$)



<그림 4-2-5> 전가구의 앳킨슨지수($\epsilon=2.0$)



<그림 4-2-6 > 전가구의 앳킨슨지수($\epsilon=3.0$)



제 3절 타일지수

1. 개요

타일(Theil 1967)은 정보이론에 등장하는 엔트로피(entropy)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타일지수(Theil index) 또는 타일의 엔트로피지수(Theil's entropy index)라고 한다.

어떤 체계의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인 엔트로피는, 이 체계 내에서 한 사건 i 가 일어날 확률 p_i 와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정보의 크기 $h(p_i)$ 에 의존한다. 이때 p_i 가 커질수록 $h(p_i)$ 의 크기는 작아지기 마련이다. 서로 독립적인 사건 1과 2 사이에 $h(p_1 p_2) = h(p_1) + h(p_2)$ 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h(p) = -\log p$ 의 함수 형태가 이용된다. 이때 전체 엔트로피의 H 의 크기는 식 (4-3-1)과 같이 표현된다.

$$H = \sum p_i h(p_i) = - \sum p_i \log(p_i) \text{ -----식 (4-3-1)}$$

이 개념을 소득분배에 응용하여 p_i 를 전체 소득의 합에서 개인 i 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 s_i 로 대체하면 다음 식 (4-3-2)와 같은 타일지수를 얻게 된다(Cowell, 1995).

$$\begin{aligned} T &= \sum \frac{1}{n} h\left(\frac{1}{n}\right) - \sum s_i h(s_i) \\ &= \sum s_i \left[h\left(\frac{1}{n}\right) - h(s_i) \right] \end{aligned}$$

$$= \sum s_i [\log(s_i) - \log(\frac{1}{n})]$$

$$= \frac{1}{n} \sum \frac{y_i}{y} \log(\frac{y_i}{y}) \quad \text{-----식 (4-3-2)}$$

$$\text{단, } s_i = \frac{y_i}{ny}$$

식(4-3-2)에서 첫 번째 등식의 첫 번째 항은 한 사회의 소득이 모든 개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경우의 엔트로피를, 두 번째 항은 실제의 엔트로피를 나타낸다. 따라서 타일지수는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 0의 값을 갖게 되고,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log n$ 의 값을 갖게 된다. 즉, 타일지수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2. 타일지수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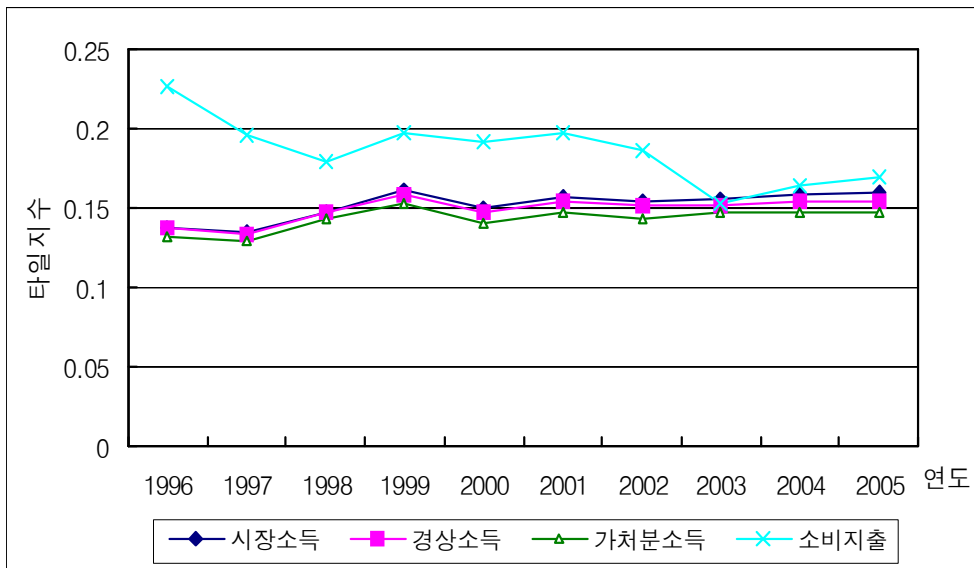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의 타일지수는 '97-'99년 기간동안 상승하였고 '00년에는 하락, '01년에 다시 상승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03-'05년 기간동안에는 미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과 경상소득간의 타일지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고 이에 비해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간의 타일지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반면 소비지출의 타일지수는 '0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전시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96-'98년의 기간동안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경우 소득은 불평등이 심화, 소비는 불평등이 완화되는 모습이었으나 '98-'99년의 기간 동안은 소득과 소비가 모두 불평등이 심화되었었다.

<표 4-3-1> 타일지수의 변화(도시근로자가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996	0.13796	0.13785	0.13158	0.22708
1997	0.13410	0.13348	0.12850	0.19574
1998	0.14785	0.14736	0.14243	0.17851
1999	0.16053	0.15880	0.15312	0.19722
2000	0.15020	0.14748	0.14026	0.19159
2001	0.15739	0.15420	0.14696	0.19754
2002	0.15405	0.15075	0.14368	0.18571
2003	0.15506	0.15178	0.14707	0.15218
2004	0.15822	0.15364	0.14750	0.16386
2005	0.16026	0.15438	0.14784	0.16920

<그림 4-3-1> 근로자가구의 타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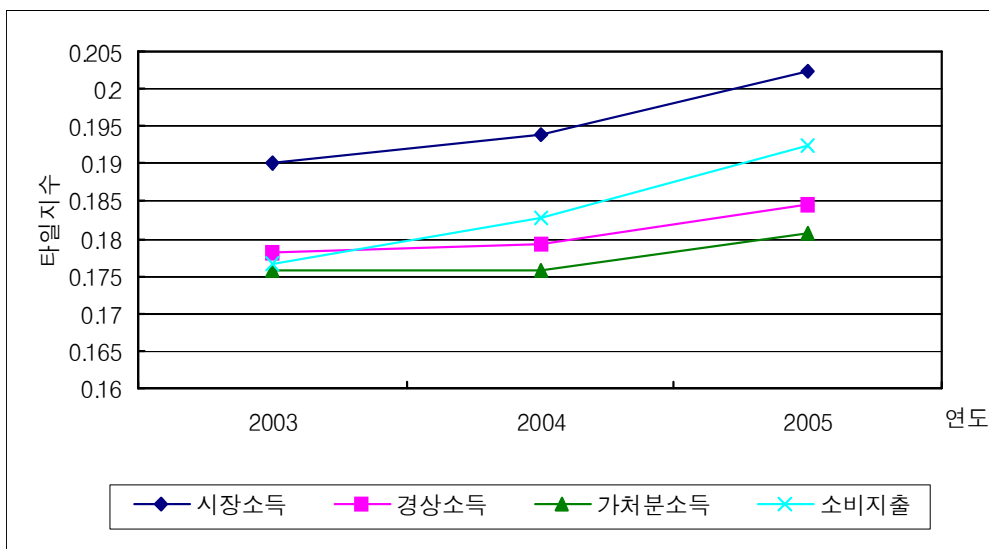


도시 비근로자가구와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03-'05년 타일지수 변화추이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도시근로자의 같은 기간 타일지수 변화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타일지수 격차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격차보다 크게 나타나, 공적이전의 불평등 감소효과가 더 큰 것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표 4-3-2> 타일지수의 변화(전체가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2003	0.19024	0.17802	0.17590	0.17678
2004	0.19401	0.17919	0.17568	0.18268
2005	0.20223	0.18452	0.18084	0.19230

<그림 4-3-2 > 전가구의 타일지수



제4절 분위수 배율

1. 개 요

분위수 배율은 소득 및 지출수준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를 10분위(Percentile)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경계점에 해당하는 소득 및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 배율을 의미한다. 분위수 배율은 값이 증가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P90/10$ = 상위 10% 기준 / 하위 10% 기준
- $P90/50$ = 상위 10% 기준 / 중위소득 기준
- $P80/20$ = 상위 20% 기준 / 하위 20% 기준

2.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도시근로자가구 및 전 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소득 기준 분위수배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순서로 분위수 배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하위 10% 기준 경계소득 대비 상위 10% 기준 경계소득의 배율인 $P90/10$ 의 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에 약 3.5배 정도로 가장 낮았으나 경제위기 당시 크게 증가한 후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되어 2005년에 약 4배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이 값은 약 5~6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에 비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하위 10%의 경계소득($P10$)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상위 10% 경계소득($P90$)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P80/20$ 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값은 약 2~3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P90/50$ 은 경제위기 직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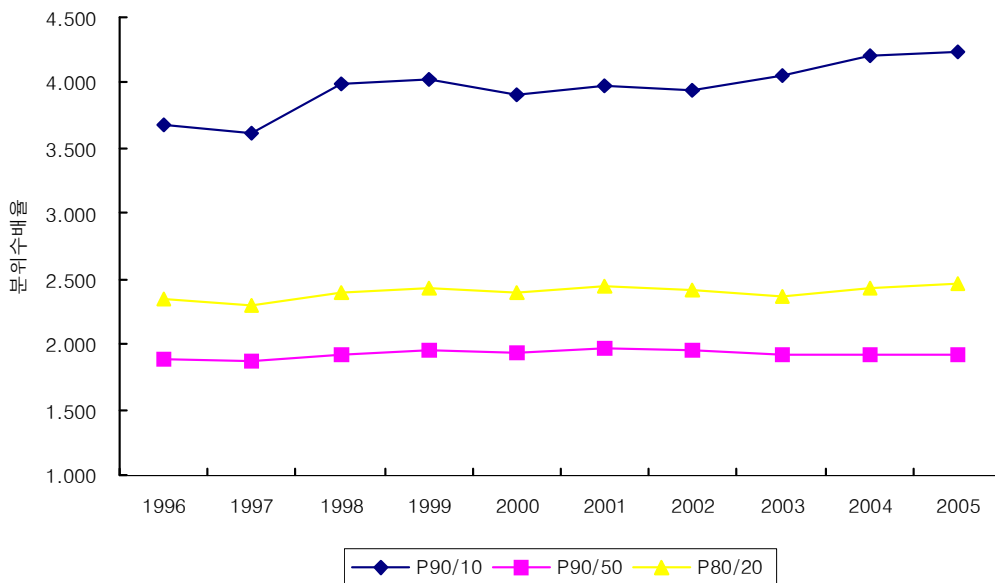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분위수 배율의 경우에는 P90/10, P80/20, P90/50 모두 1996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표 4-4-1>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단위: 원, 배)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 시장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6	485,000	606,680	941,081	1,421,375	1,774,200	3.658	1.885	2.343
1997	519,615	659,731	1,000,000	1,518,489	1,877,962	3.614	1.878	2.302
1998	450,427	599,266	932,168	1,435,100	1,795,223	3.986	1.926	2.395
1999	465,000	614,500	961,935	1,491,053	1,873,000	4.028	1.947	2.426
2000	511,296	667,761	1,035,325	1,595,161	1,999,075	3.910	1.931	2.389
2001	560,000	725,000	1,131,450	1,775,969	2,221,025	3.966	1.963	2.450
2002	612,012	789,980	1,228,352	1,907,450	2,407,798	3.934	1.960	2.415
2003	626,099	851,592	1,325,000	2,014,952	2,535,755	4.050	1.914	2.366
2004	647,003	899,841	1,415,000	2,184,075	2,715,175	4.197	1.919	2.427
2005	669,527	918,130	1,483,701	2,257,440	2,840,500	4.243	1.914	2.459

<그림 4-4-1> 도시근로자가구 분위수 배율(시장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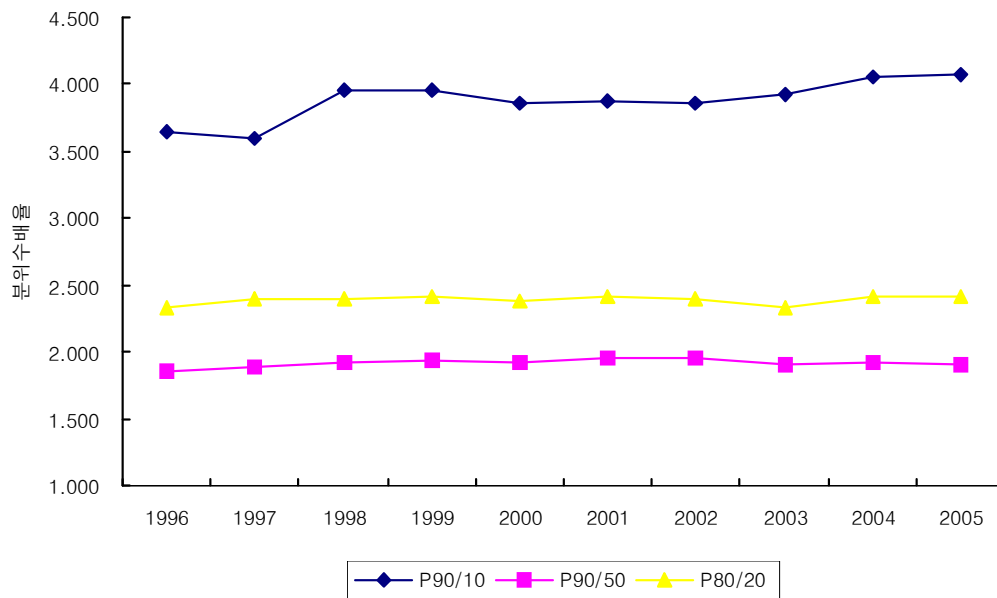


<표 4-4-2>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단위: 원, 배)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 경상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6	490,000	611,059	945,584	1,428,869	1,782,500	3.638	1.885	2.338
1997	525,000	665,000	1,004,500	1,524,205	1,887,830	3.596	1.880	2.292
1998	455,000	600,000	938,971	1,442,300	1,800,888	3.958	1.918	2.404
1999	473,427	619,563	967,500	1,495,000	1,876,000	3.963	1.939	2.413
2000	520,700	673,155	1,040,720	1,600,470	2,006,960	3.854	1.928	2.378
2001	575,618	739,512	1,141,623	1,787,435	2,231,817	3.877	1.955	2.417
2002	629,312	800,000	1,237,000	1,919,973	2,424,750	3.853	1.960	2.400
2003	649,000	866,025	1,331,000	2,020,000	2,543,322	3.919	1.911	2.332
2004	674,000	911,000	1,428,557	2,194,000	2,731,560	4.053	1.912	2.408
2005	702,500	937,553	1,500,481	2,267,842	2,857,860	4.068	1.905	2.419

<그림 4-4-2> 도시근로자가구 분위수 배율(경상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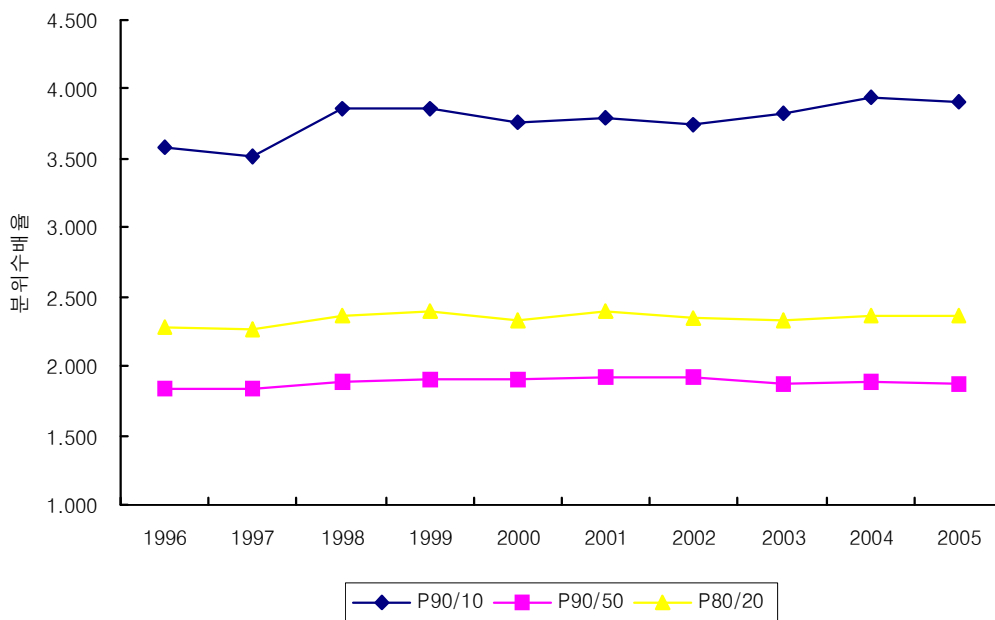


<표 4-4-3> 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단위: 원, 배)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 가처분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6	462,660	585,861	899,628	1,337,165	1,653,406	3.574	1.838	2.282
1997	498,911	633,750	960,127	1,431,600	1,756,577	3.521	1.830	2.259
1998	430,848	566,779	880,744	1,337,015	1,664,592	3.864	1.890	2.359
1999	446,850	581,100	907,473	1,388,709	1,726,000	3.863	1.902	2.390
2000	490,344	632,377	970,006	1,474,795	1,846,112	3.765	1.903	2.332
2001	537,401	687,785	1,063,650	1,646,759	2,036,865	3.790	1.915	2.394
2002	588,250	753,120	1,149,865	1,763,270	2,201,900	3.743	1.915	2.341
2003	602,846	798,943	1,231,370	1,859,604	2,306,187	3.826	1.873	2.328
2004	630,030	848,528	1,318,760	2,010,622	2,478,623	3.934	1.880	2.370
2005	663,850	876,812	1,389,588	2,076,794	2,592,133	3.905	1.865	2.369

<그림 4-4-3> 도시근로자가구 분위수 배율(가처분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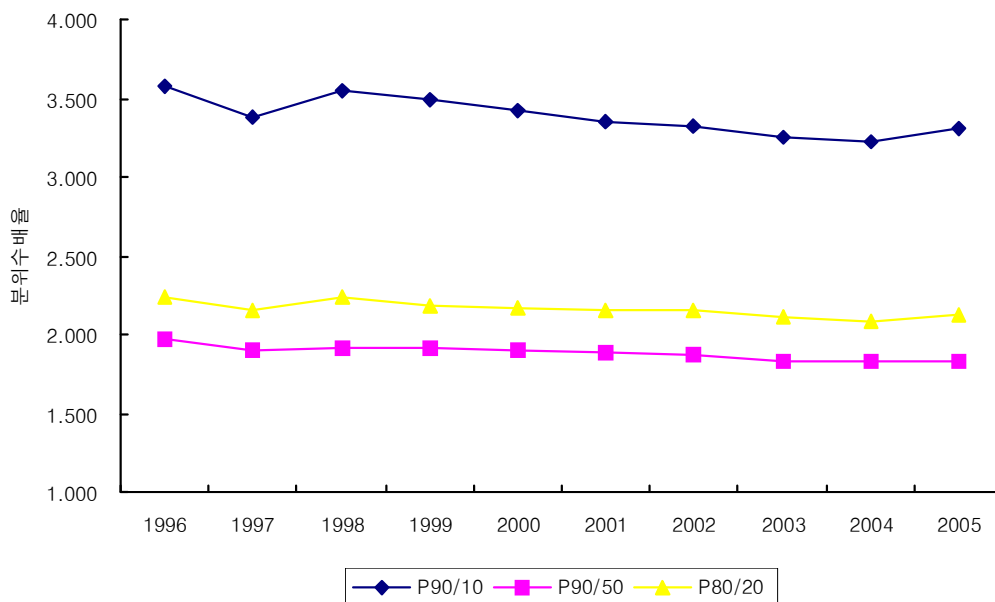


<표 4-4-4>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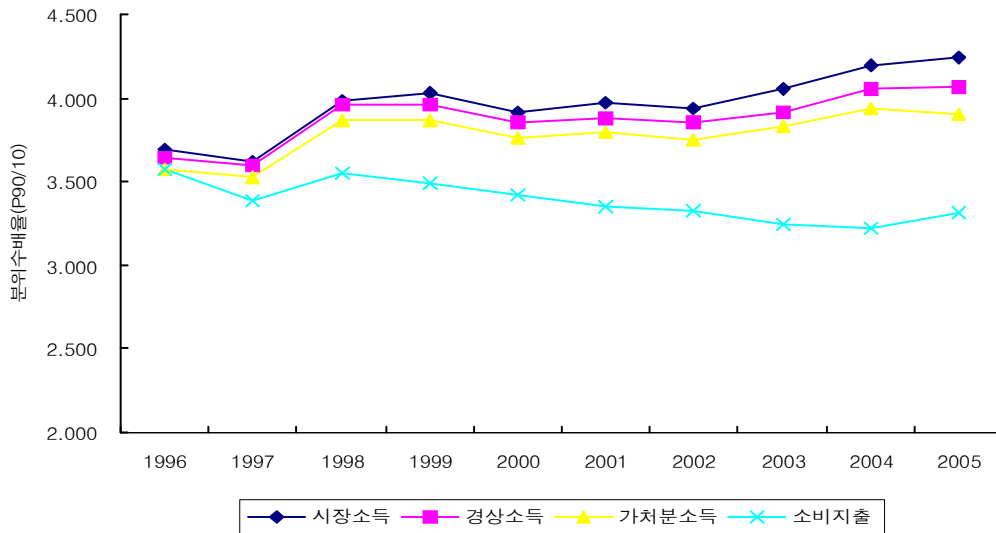
(단위: 원, 배)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 소비지출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1996	331,809	408,000	602,130	916,180	1,185,202	3.572	1.968	2.246
1997	361,968	442,965	644,340	957,295	1,225,204	3.385	1.901	2.161
1998	314,985	393,834	586,064	882,554	1,118,647	3.551	1.909	2.241
1999	359,775	449,646	654,180	983,564	1,255,021	3.488	1.918	2.187
2000	403,830	496,880	728,122	1,080,924	1,382,240	3.423	1.898	2.175
2001	444,705	543,245	791,935	1,169,915	1,491,399	3.354	1.883	2.154
2002	473,407	577,699	838,501	1,242,718	1,574,436	3.326	1.878	2.151
2003	509,691	626,090	906,935	1,323,675	1,656,706	3.250	1.827	2.114
2004	541,905	667,671	954,150	1,391,240	1,745,993	3.222	1.830	2.084
2005	553,850	683,560	999,107	1,454,357	1,834,520	3.312	1.836	2.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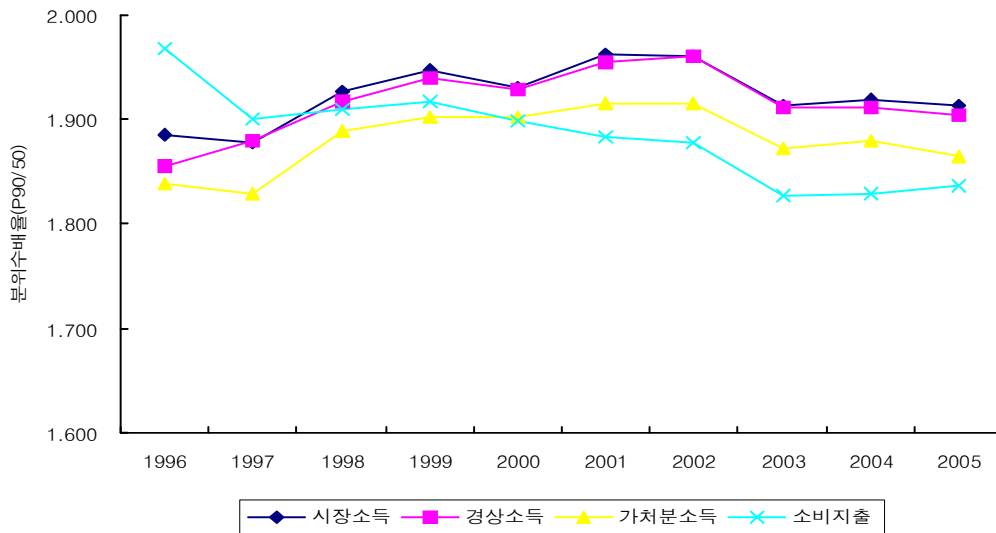
<그림 4-4-4> 도시근로자가구 분위수 배율(소비지출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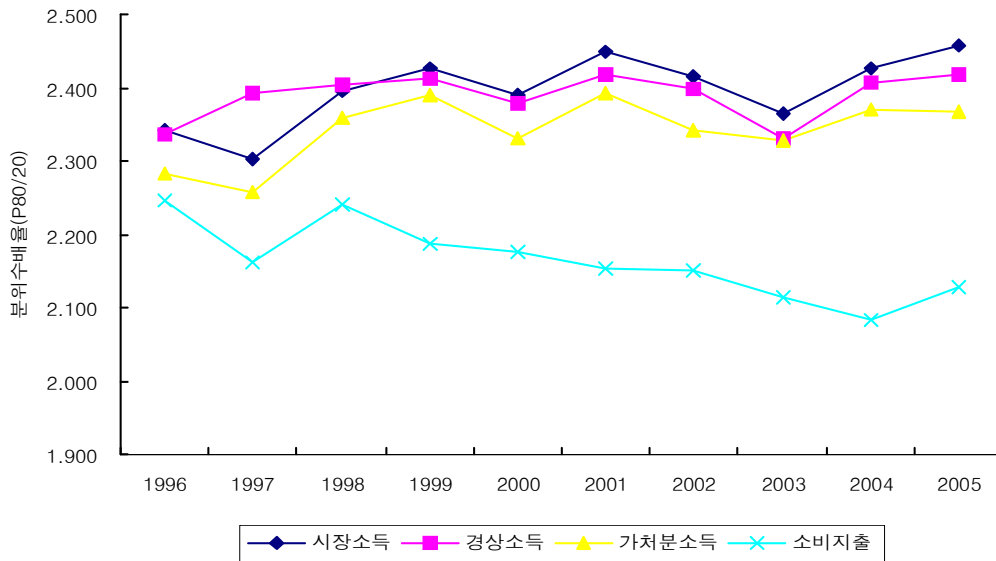
<그림 4-4-5> 도시근로자가구 분위수 배율(P90/10) 변화추이



<그림 4-4-6> 도시근로자가구 분위수 배율(P90/50) 변화추이



<그림 4-4-7> 도시근로자가구 분위수 배율(P80/20)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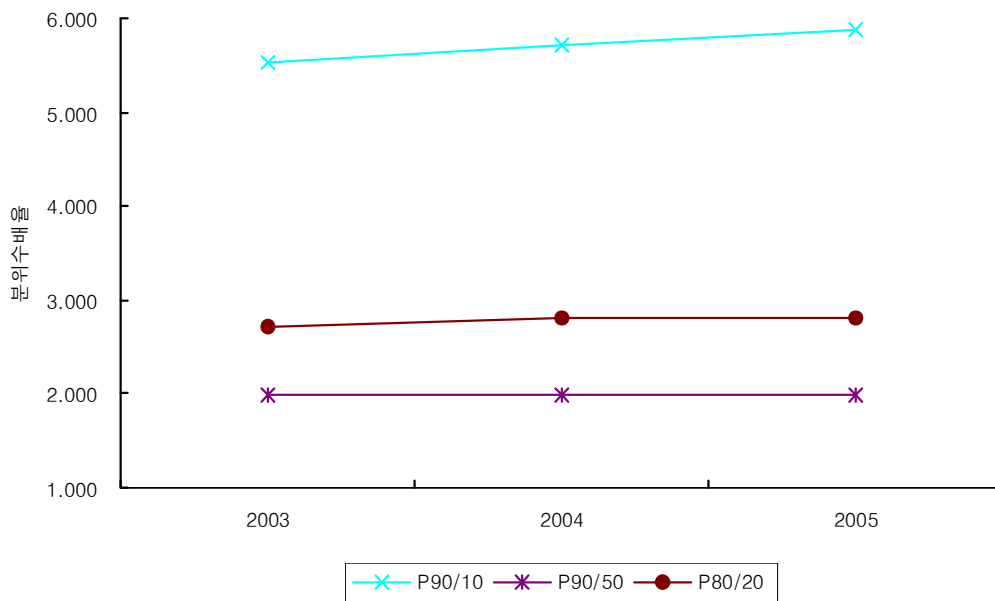


<표 4-4-5> 전국가계조사 시장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단위: 원, 배)

구분	전국가계조사 - 시장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430,628	700,000	1,203,750	1,895,615	2,382,500	5.533	1.979	2.708
2004	448,603	725,000	1,287,975	2,035,747	2,563,969	5.715	1.991	2.808
2005	450,000	750,000	1,341,641	2,102,695	2,651,650	5.893	1.976	2.804

<그림 4-4-8> 전국가계조사 분위수 배율(시장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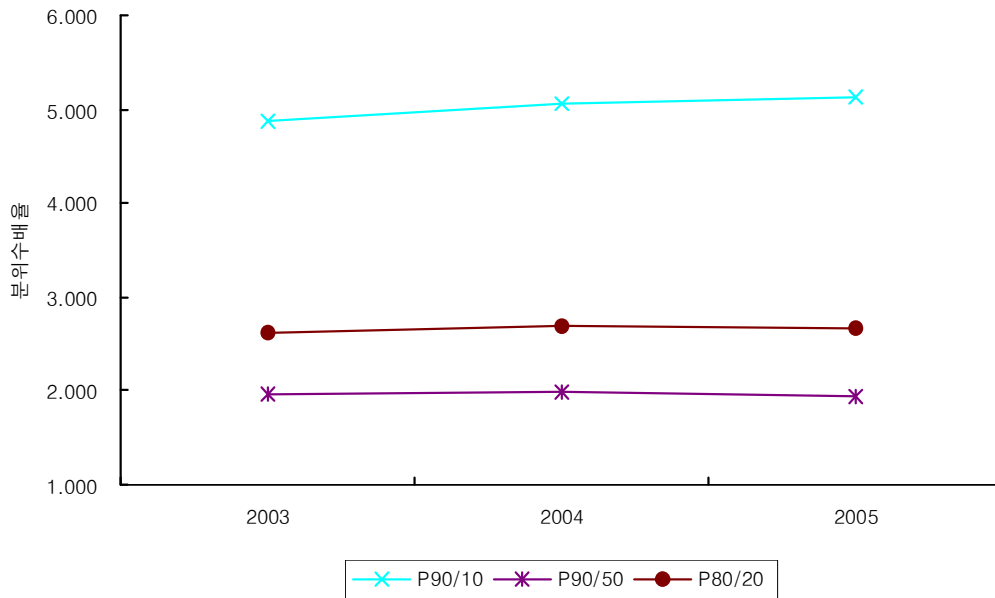


<표 4-4-6> 전국가계조사 경상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단위: 원, 배)

구분	전국가계조사 - 경상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494,126	730,488	1,222,600	1,907,350	2,402,500	4.862	1.965	2.611
2004	511,507	760,263	1,308,148	2,051,145	2,585,650	5.055	1.977	2.698
2005	523,259	793,500	1,374,450	2,125,000	2,680,060	5.122	1.950	2.678

<그림 4-4-9> 전국가계조사 분위수 배율(경상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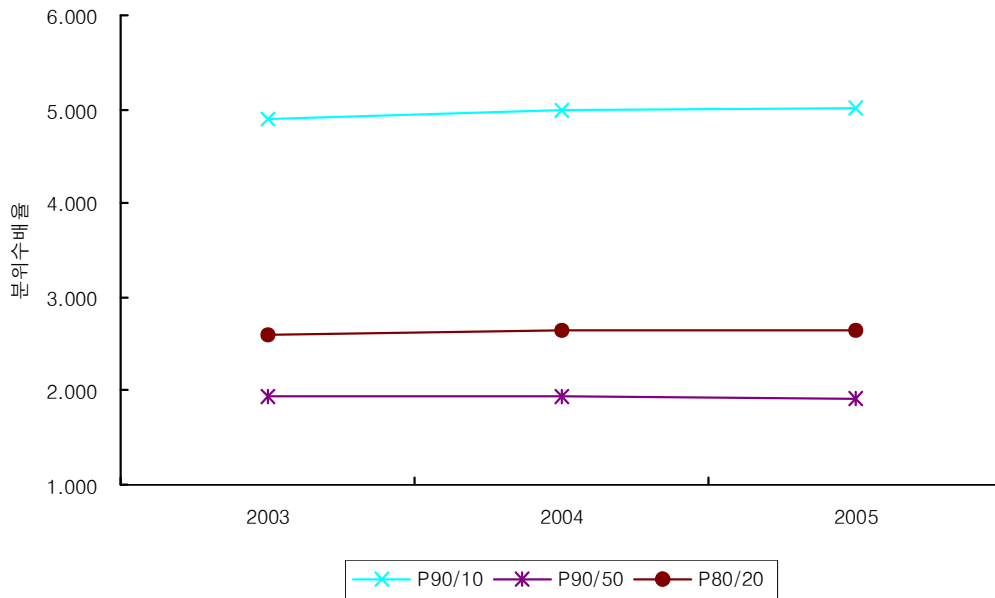


<표 4-4-7> 전국가계조사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단위: 원, 배)

구분	전국가계조사 - 가처분소득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455,108	683,650	1,144,800	1,774,347	2,227,135	4.894	1.945	2.595
2004	476,535	717,860	1,222,950	1,903,241	2,377,716	4.990	1.944	2.651
2005	490,146	742,877	1,280,268	1,969,619	2,463,145	5.025	1.924	2.651

<그림 4-4-10> 전국가계조사 분위수 배율(가처분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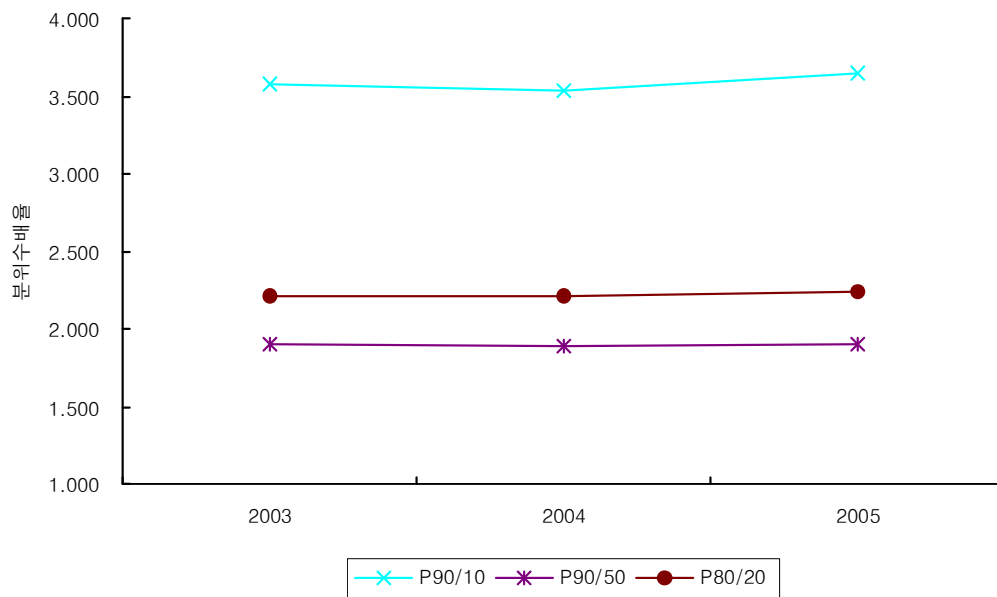


<표 4-4-8> 전국가계조사 소비지출 기준 분위수 배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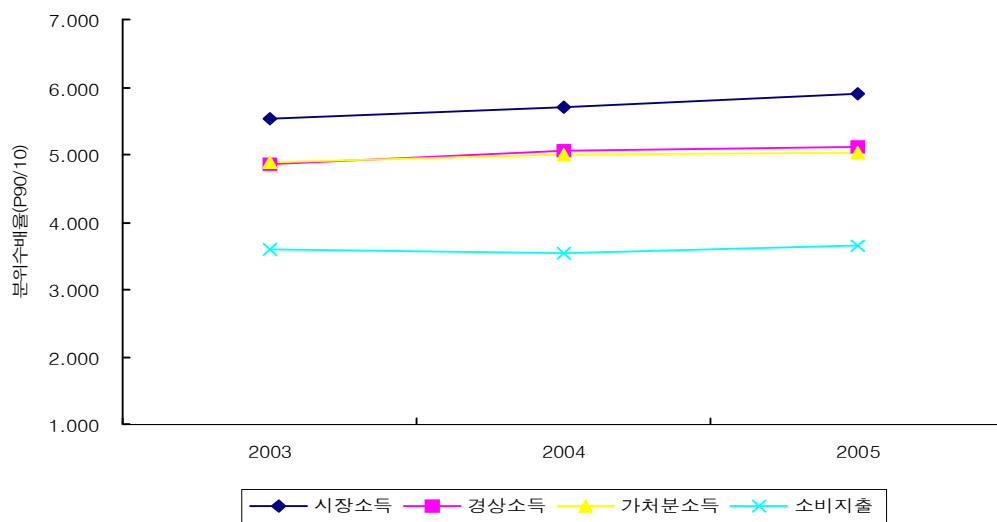
(단위: 원, 배)

구분	전국가계조사 - 소비지출							
	P10	P20	P50	P80	P90	P90/10	P90/50	P80/20
2003	462,590	587,825	873,842	1,302,310	1,657,436	3.583	1.897	2.215
2004	492,747	623,512	926,385	1,376,114	1,745,515	3.542	1.884	2.207
2005	503,389	640,970	692,022	1,433,948	1,834,605	3.645	1.907	2.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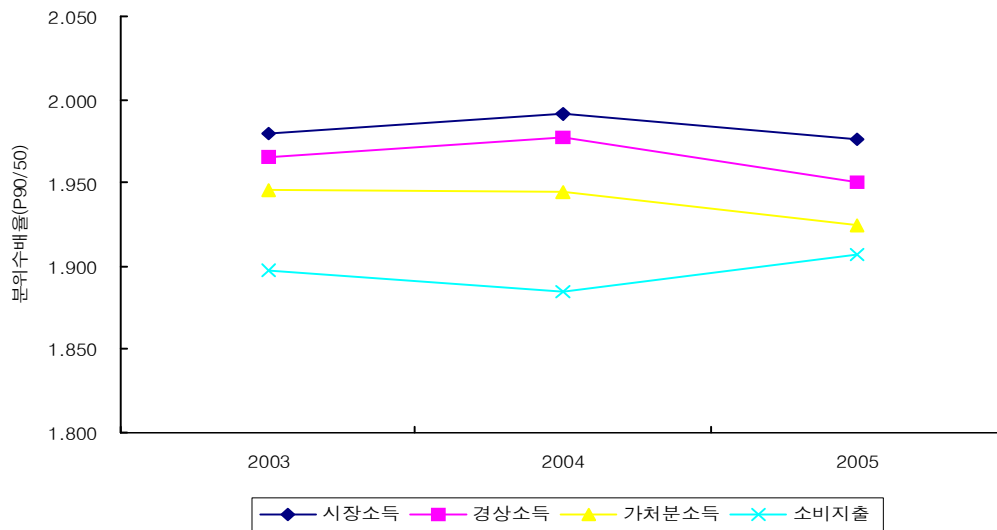
<그림 4-4-11> 전국가계조사 분위수 배율(소비지출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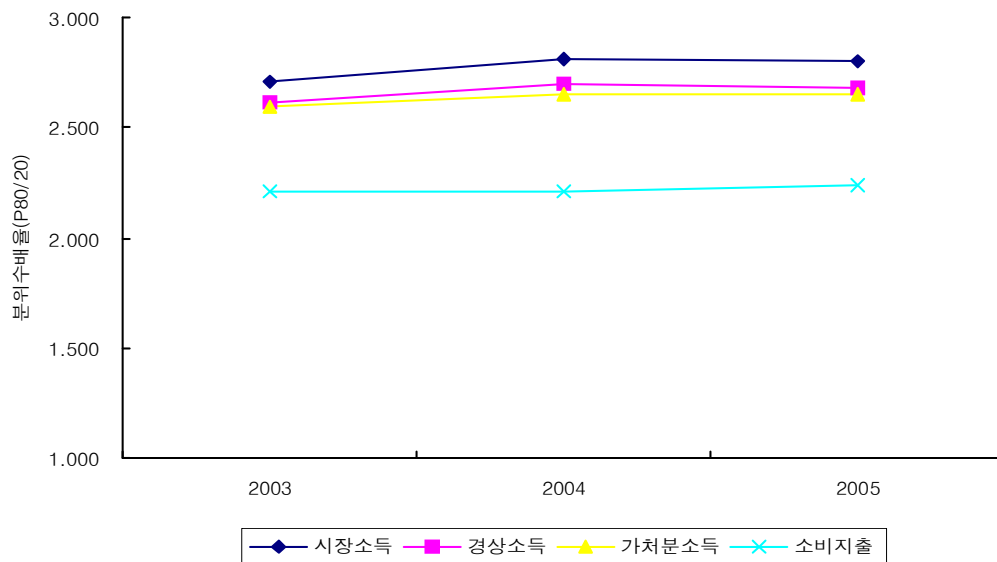
<그림 4-4-12> 전국가계조사 분위수 배율(P90/10) 변화추이



<그림 4-4-13> 전국가계조사 분위수 배율(P90/50) 변화추이



<그림 4-4-14> 전국가계조사 분위수 배율(P80/20) 변화추이



제5절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1. 개 요

10분위 소득배율 및 5분위 소득배율은 소득 및 지출수준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를 10분위 (Percentile)로 구분한 후, 각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점유하고 있는 소득 및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출하고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 배율을 의미한다. 분위수 배율과 마찬가지로 소득배율의 값이 증가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10분위 소득배율 = 상위 10% 점유율 / 하위 10% 점유율
- 5분위 소득배율 = 상위 20% 점유율 / 하위 20% 점유율

2.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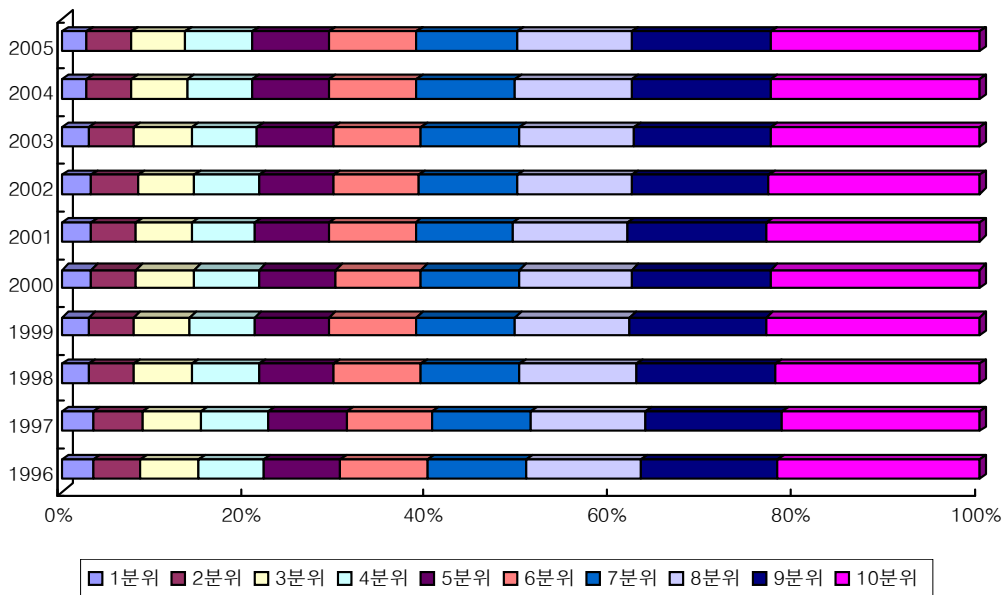
도시근로자가구 및 전 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은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위계층에서 감소하는 반면 상위계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5분위 소득배율 및 10분위 소득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지출 기준 분위별 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전 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5분위 소득배율 및 10분위 소득배율 역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표 4-5-1>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단위: %, 배)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 시장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 배율	5분위 소득 배율
1996	3.33%	5.19%	6.33%	7.17%	8.34%	9.47%	10.78%	12.42%	14.90%	22.07%	6.631	4.338
1997	3.39%	5.25%	6.37%	7.33%	8.69%	9.18%	10.78%	12.47%	14.94%	21.59%	6.364	4.228
1998	2.79%	5.04%	6.23%	7.30%	8.26%	9.47%	10.84%	12.55%	15.18%	22.33%	8.006	4.790
1999	2.86%	4.97%	6.06%	7.09%	8.17%	9.38%	10.77%	12.46%	15.05%	23.17%	8.089	4.881
2000	3.04%	5.05%	6.19%	7.19%	8.22%	9.42%	10.68%	12.42%	15.06%	22.73%	7.481	4.673
2001	3.04%	4.95%	6.07%	7.03%	8.10%	9.31%	10.70%	12.52%	15.10%	23.19%	7.625	4.788
2002	3.17%	5.01%	6.12%	7.09%	8.16%	9.30%	10.72%	12.44%	15.06%	22.93%	7.227	4.646
2003	2.76%	4.99%	6.28%	7.28%	8.34%	9.49%	10.71%	12.45%	14.95%	22.75%	8.229	4.860
2004	2.60%	4.85%	6.18%	7.22%	8.32%	9.45%	10.84%	12.60%	15.18%	22.75%	8.742	5.089
2005	2.60%	4.82%	6.10%	7.24%	8.32%	9.53%	10.97%	12.48%	15.18%	22.76%	8.753	5.114

<그림 4-5-1> 도시근로자가구 분위별 점유율(시장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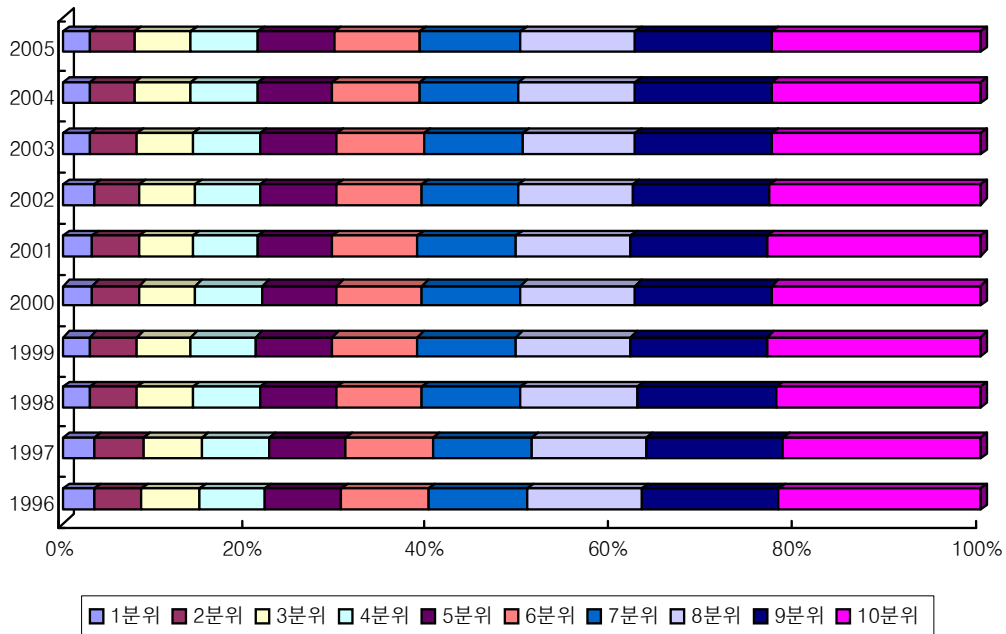


<표 4-5-2> 도시근로자가구 경상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단위: %, 배)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 경상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 배율	5분위 소득 배율
1996	3.35%	5.20%	6.26%	7.27%	8.30%	9.46%	10.84%	12.37%	14.89%	22.08%	6.600	4.327
1997	3.39%	5.29%	6.44%	7.28%	8.38%	9.49%	10.80%	12.47%	14.90%	21.57%	6.366	4.204
1998	2.84%	5.11%	6.17%	7.26%	8.31%	9.45%	10.84%	12.53%	15.15%	22.33%	7.868	4.713
1999	2.94%	4.98%	6.08%	7.09%	8.18%	9.39%	10.75%	12.45%	15.00%	23.13%	7.864	4.812
2000	3.14%	5.07%	6.20%	7.20%	8.22%	9.38%	10.71%	12.40%	15.03%	22.64%	7.215	4.587
2001	3.15%	5.00%	6.09%	7.04%	8.10%	9.28%	10.67%	12.47%	15.06%	23.13%	7.335	4.685
2002	3.29%	5.06%	6.12%	7.10%	8.14%	9.30%	10.70%	12.43%	15.00%	22.85%	6.947	4.533
2003	2.89%	5.19%	6.17%	7.30%	8.29%	9.41%	10.82%	12.35%	14.91%	22.68%	7.841	4.651
2004	2.80%	4.91%	6.19%	7.23%	8.30%	9.45%	10.81%	12.55%	15.10%	22.65%	8.086	4.895
2005	2.84%	4.91%	6.13%	7.25%	8.34%	9.51%	10.93%	12.36%	15.05%	22.67%	7.973	4.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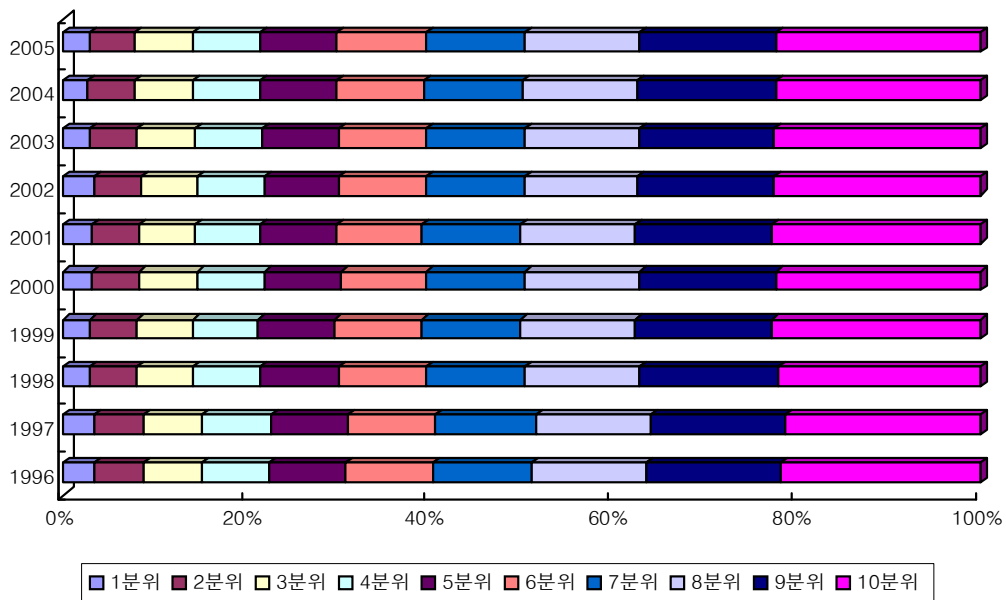
<그림 4-5-2> 도시근로자가구 분위별 점유율(경상소득 기준) 변화추이



<표 4-5-3> 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단위: %, 배)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 가처분소득											10분위 소득 배율	5분위 소득 배율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996	3.37%	5.29%	6.35%	7.36%	8.42%	9.57%	10.84%	12.41%	14.78%	21.61%		6.411	4.200
1997	3.41%	5.36%	6.45%	7.41%	8.47%	9.58%	10.84%	12.47%	14.81%	21.19%		6.216	4.105
1998	2.82%	5.11%	6.30%	7.35%	8.38%	9.54%	10.89%	12.54%	15.08%	21.99%		7.792	4.674
1999	2.96%	5.05%	6.16%	7.19%	8.26%	9.46%	10.81%	12.45%	14.93%	22.73%		7.690	4.701
2000	3.10%	5.16%	6.30%	7.32%	8.32%	9.47%	10.79%	12.44%	14.95%	22.16%		7.144	4.494
2001	3.15%	5.09%	6.22%	7.11%	8.20%	9.39%	10.75%	12.48%	15.00%	22.61%		7.182	4.566
2002	3.28%	5.14%	6.25%	7.21%	8.25%	9.37%	10.81%	12.38%	14.89%	22.44%		6.849	4.438
2003	2.87%	5.13%	6.35%	7.36%	8.40%	9.48%	10.79%	12.43%	14.82%	22.37%		7.792	4.649
2004	2.74%	5.03%	6.28%	7.32%	8.38%	9.53%	10.88%	12.54%	15.03%	22.26%		8.111	4.794
2005	2.80%	5.04%	6.24%	7.35%	8.44%	9.65%	10.82%	12.46%	14.94%	22.27%		7.965	4.751

<그림 4-5-3> 도시근로자가구 분위별 점유율(가처분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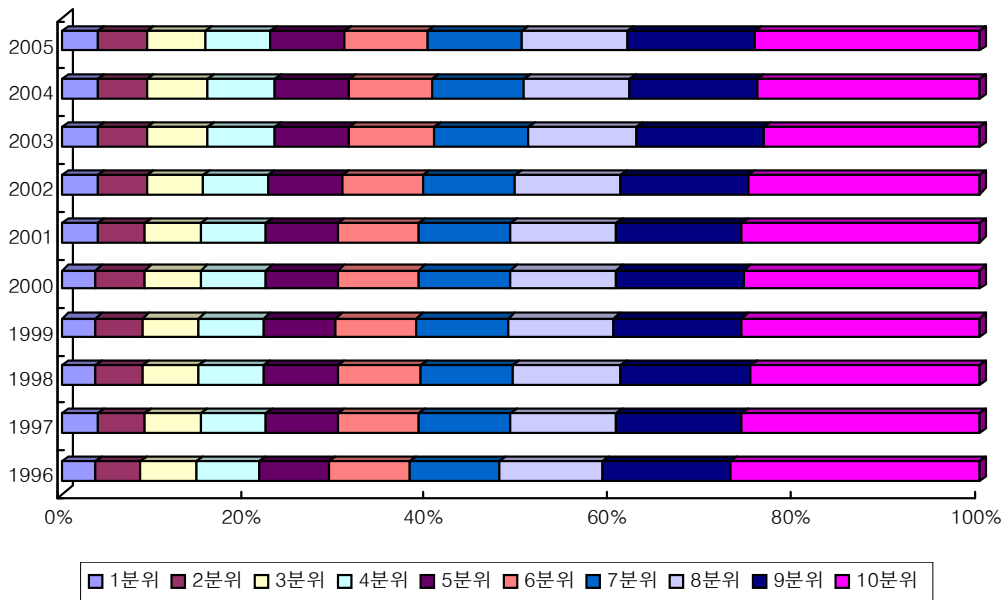


<표 4-5-4>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지출 기준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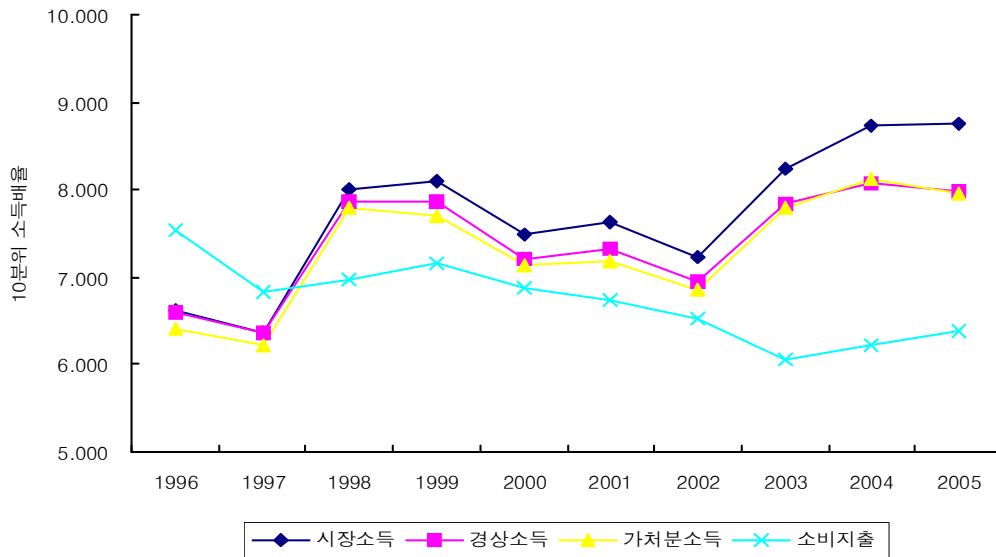
(단위: %, 배)

구분	도시근로자가구 - 소비지출											10분위 소득 배율	5분위 소득 배율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996	3.60%	5.03%	5.97%	6.84%	7.70%	8.65%	9.81%	11.37%	13.96%	27.08%	7.532	4.757	
1997	3.77%	5.24%	6.19%	7.04%	7.88%	8.83%	9.95%	11.45%	13.89%	25.77%	6.832	4.400	
1998	3.57%	5.15%	6.19%	7.09%	8.00%	9.01%	10.14%	11.72%	14.23%	24.90%	6.973	4.485	
1999	3.63%	5.16%	6.14%	6.98%	7.84%	8.84%	10.01%	11.52%	13.95%	25.93%	7.150	4.538	
2000	3.73%	5.20%	6.18%	7.06%	7.91%	8.88%	10.01%	11.48%	13.87%	25.67%	6.881	4.428	
2001	3.84%	5.22%	6.17%	7.01%	7.88%	8.84%	9.99%	11.40%	13.77%	25.88%	6.740	4.374	
2002	3.84%	5.31%	6.24%	7.08%	7.96%	8.93%	10.07%	11.54%	13.93%	25.10%	6.537	4.265	
2003	3.87%	5.46%	6.45%	7.33%	8.22%	9.18%	10.27%	11.73%	14.02%	23.46%	6.063	4.016	
2004	3.89%	5.46%	6.44%	7.30%	8.14%	9.05%	10.15%	11.56%	13.85%	24.17%	6.217	4.067	
2005	3.81%	5.36%	6.34%	7.25%	8.12%	9.07%	10.17%	11.60%	13.94%	24.35%	6.388	4.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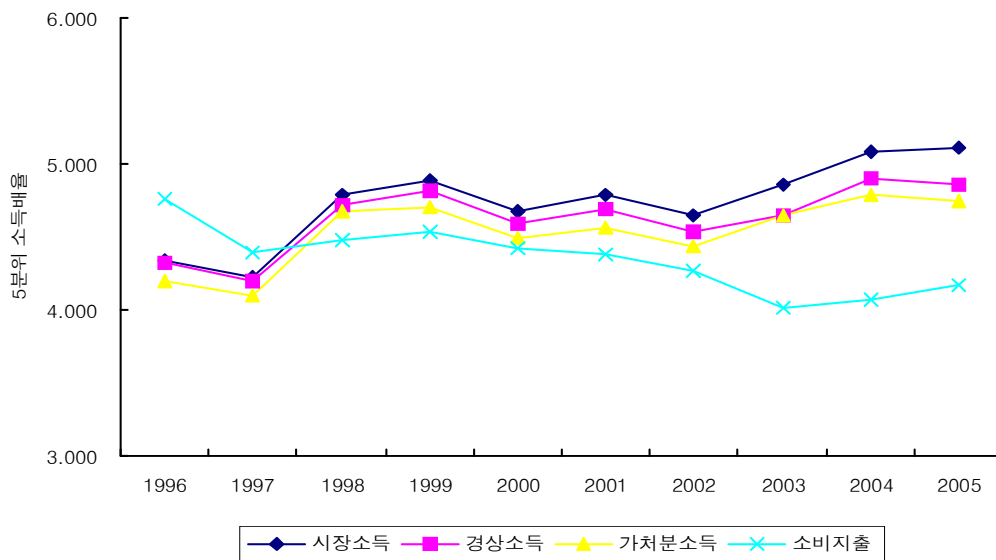
<그림 4-5-4> 도시근로자가구 분위별 점유율(소비지출 기준) 변화추이



<그림 4-5-5> 도시근로자가구 10분위 소득배율 변화추이



<그림 4-5-6> 도시근로자가구 5분위 소득배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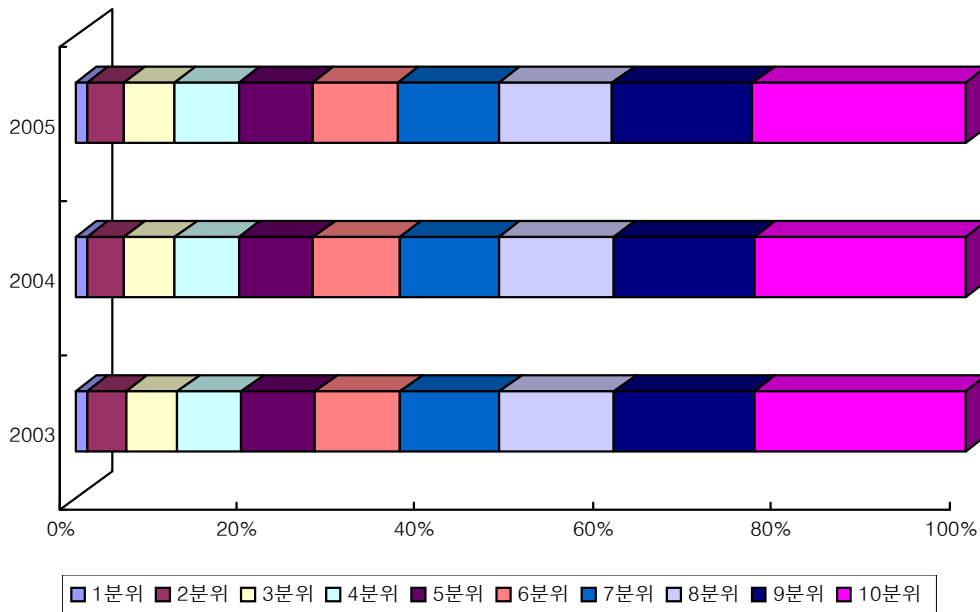


<표 4-5-5> 전 국가계조사 시장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단위: %, 배)

구분	전국가계조사 - 시장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 배율	5분위 소득 배율
2003	1.35%	4.32%	5.84%	7.23%	8.22%	9.62%	11.03%	12.92%	15.64%	23.81%	17.685	6.959
2004	1.37%	4.15%	5.80%	7.10%	8.35%	9.62%	11.10%	12.99%	15.76%	23.76%	17.390	7.163
2005	1.32%	4.19%	5.60%	7.28%	8.20%	9.63%	11.26%	12.86%	15.69%	23.96%	18.140	7.193

<그림 4-5-7> 전 국가계조사 분위별 점유율(시장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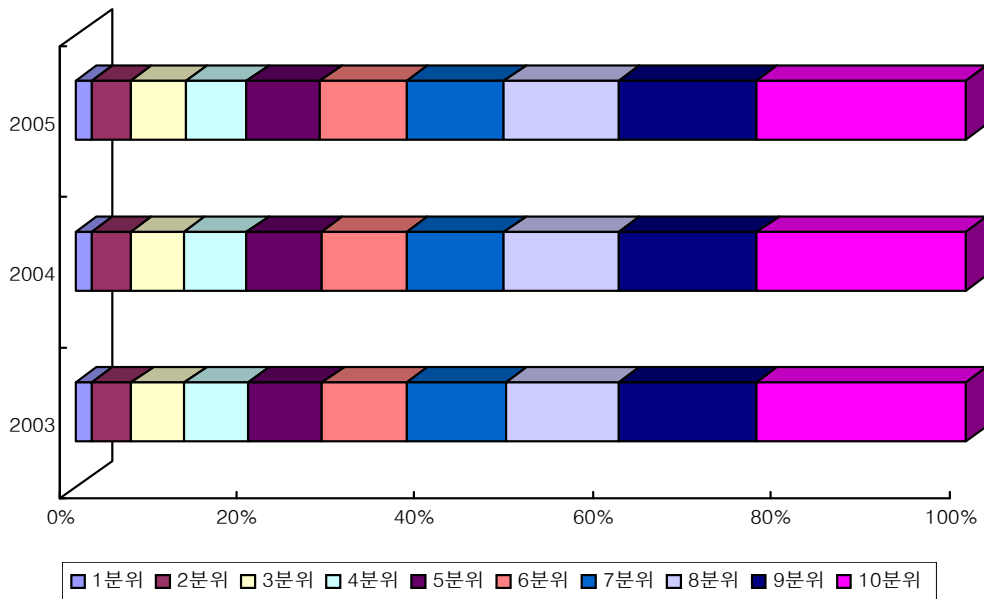


<표 4-5-6> 전국가계조사 경상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단위: %, 배)

구분	전국가계조사 - 경상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 배율	5분위 소득 배율
2003	1.85%	4.49%	5.95%	7.16%	8.29%	9.54%	11.06%	12.66%	15.46%	23.53%	12.699	6.143
2004	1.88%	4.43%	5.88%	7.14%	8.30%	9.63%	10.94%	12.82%	15.55%	23.44%	12.490	6.183
2005	1.88%	4.37%	6.15%	6.83%	8.33%	9.61%	11.02%	12.80%	15.41%	23.61%	12.567	6.249

<그림 4-5-8> 전국가계조사 분위별 점유율(경상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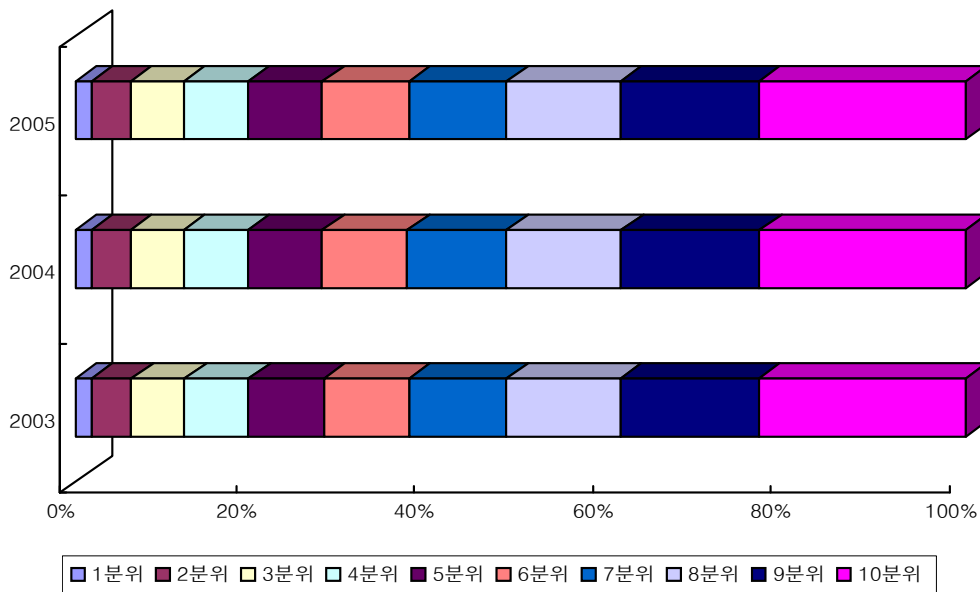


<표 4-5-7> 전국가계조사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단위: %, 배)

구분	전국가계조사 - 가처분소득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 배율	5분위 소득 배율
2003	1.81%	4.52%	5.99%	7.20%	8.34%	9.59%	10.99%	12.79%	15.45%	23.33%	12.909	6.129
2004	1.82%	4.45%	5.95%	7.20%	8.37%	9.62%	11.06%	12.85%	15.52%	23.17%	12.730	6.167
2005	1.84%	4.42%	5.92%	7.19%	8.40%	9.67%	11.06%	12.79%	15.41%	23.29%	12.691	6.190

<그림 4-5-9> 전국가계조사 분위별 점유율(가처분소득 기준)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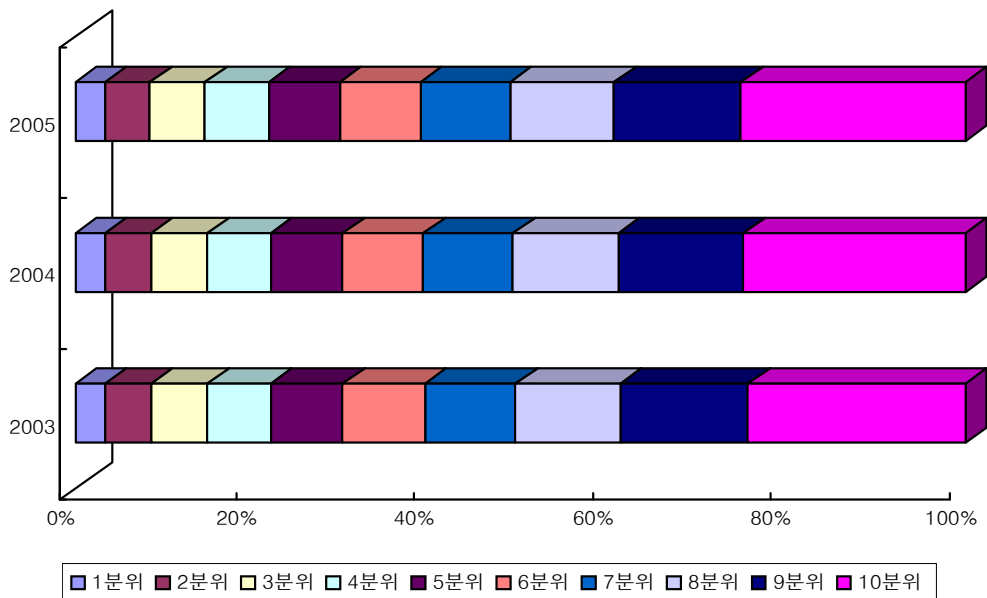


<표 4-5-8> 전국가계조사 소비지출 기준 분위별 점유율 및 소득배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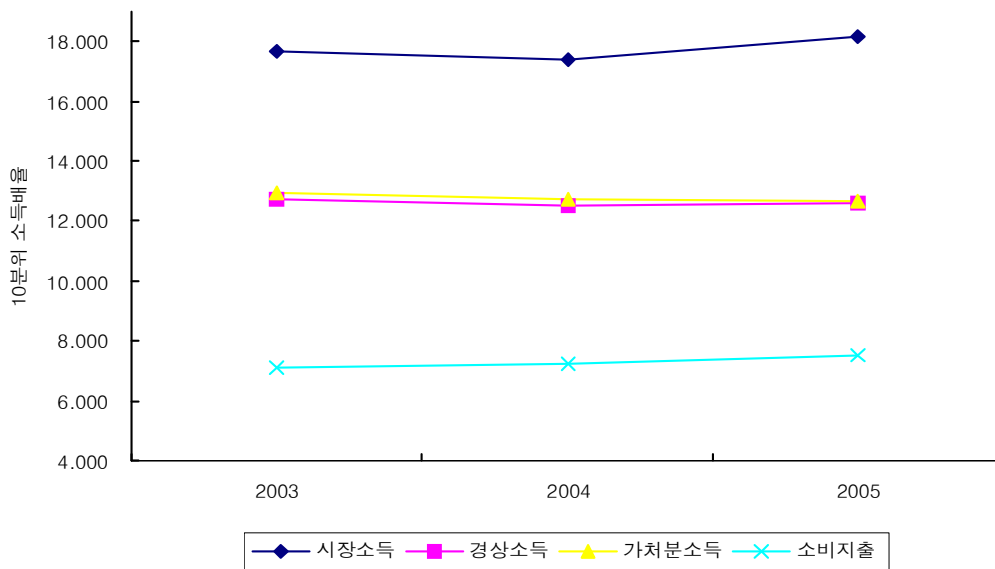
(단위: %, 배)

구분	전국가계조사 - 소비지출											
	1/10 분위	2/10 분위	3/10 분위	4/10 분위	5/10 분위	6/10 분위	7/10 분위	8/10 분위	9/10 분위	10/10 분위	10분위 소득 배율	5분위 소득 배율
2003	3.44%	5.18%	6.25%	7.16%	8.09%	9.09%	10.26%	11.80%	14.25%	24.46%	7.104	4.487
2004	3.45%	5.17%	6.24%	7.16%	8.06%	9.03%	10.17%	11.68%	14.12%	24.91%	7.221	4.526
2005	3.36%	5.08%	6.15%	7.10%	8.01%	9.01%	10.16%	11.68%	14.18%	25.27%	7.517	4.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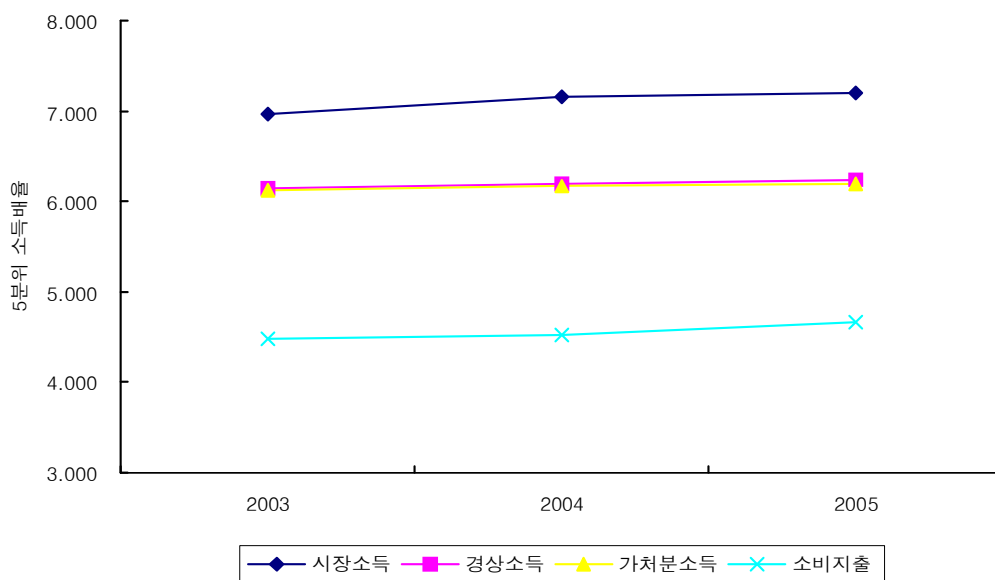
<그림 4-5-10> 전국가계조사 분위별 점유율(소비지출 기준) 변화추이



<그림 4-5-11> 전국가계조사 10분위 소득배율 변화추이



<그림 4-5-12> 전국가계조사 5분위 소득배율 변화추이



제 5장 양극화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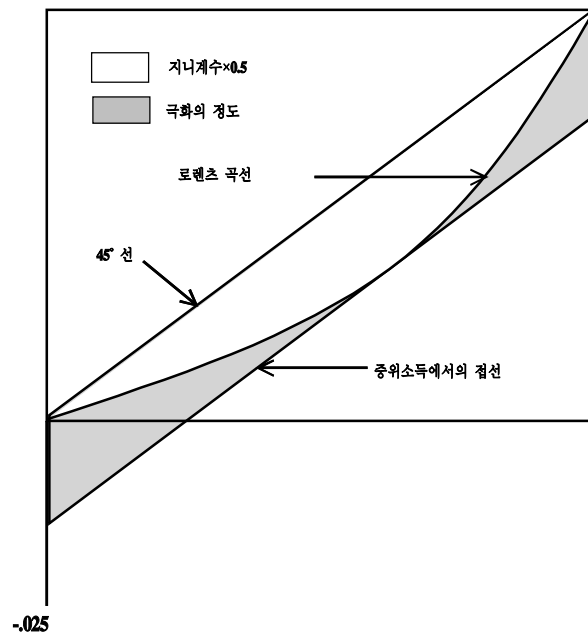
제1절 울프슨(Wolfson)의 양극화지수

극화(polarization) 개념은 지니계수와 같은 기존의 불평등 관련 지표가 중산층의 감소와 같은 분포형태 상의 변화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에서 중산층의 몰락을 계측하고 표현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그 정의가 구체화되었다. 사전적 의미에서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소득분포의 양쪽 끝이 두터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때(윤진호 2005), 이는 다시 소득이나 부 등의 분포가 중간층이 얇아지는 측면과 양 극단이 두터워지는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산층의 감소에 주목한 것이 울프슨(Wolfson 1994)의 양극화지수¹⁰⁾이며, 양 극단이 두터워지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 뒤에서 설명할 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 Ray 1994)의 양극화지수로 볼 수 있다.

울프슨(Wolfson 1994)은 중산층을 중위소득을 가진 인구계층으로 간주하고, 중위소득으로부터의 확산정도가 커질수록,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여타 계층의 소득차이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커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울프슨은 불평등을 나타내는 전통적 방법인 로렌츠곡선으로부터 양극화 지수를 도출하였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과 같은 <그림 5-1>이다.

10) 엄밀한 의미에서는 극화지수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인지 다극화인지는 전체 소득분포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소득분포를 두 구간으로 나눈 뒤 분석하게 되므로 편의상 양극화 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림 5-1-1> 울프슨의 양극화 지수

먼저 전체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정규화한후, 이를 이용하여 로렌즈곡선을 그린다. 중위 소득(즉 x축의 0.5)에 대응되는 로렌즈곡선 상에서 접선을 그은 후, 지니계수를 설명하는 45도선과 이 접선에 의해 형성되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한다. 그리고 이 사다리꼴의 면적에서 보름달 모양의 면적(즉 지니계수의 0.5배값)을 빼면, 남는 것이 색칠된 부분인데, 이 면적이 양극화의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 면적의 크기(P_w^*)는 다음 식 (5-1)로 표현 된다.

$$P_w^* = [0.5 - L(0.5) - 0.5G] \frac{\mu}{m} \quad \text{----- 식 (5-1)}$$

μ : 평균, m : 중위값, G : 지니계수, $L(0.5)$: 중위값에서 로렌즈곡선의 높이

P_w^* 의 값은 0부터 0.25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이를 지니계수와 비교하기 쉽게 0부터 1의 값을 갖도록 하려면 4를 곱해야 하고 이렇게 도출된 것이 아래 식(5-2)의 p_w 이다.

$$P_w = 4P_w^* = [2 - 4L(0.5) - 2G] \frac{\mu}{m} \text{ ----- 식 (5-2)}$$

P_w^* 이 1에 가까울수록 중산층으로부터 벗어난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많은 인구가 중산층 부근에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96~’05까지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소비지출의 울프슨지수 변화추이는 다음 절의 에스테반-레이 지수와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제2절 에스테반-레이(Esteban and Ray)의 양극화 지수

1. 개요

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and Ray 1994, Duclos, Esteban and Ray 2004)는 극화(polarization)를 ‘사회집단이 일정한 특성(소득, 자산 등)에 의해 몇 개의 집단으로 군집화(cluster)되어, 한 집단 내부의 동질성은 강화되는(격차는 줄어드는) 한편 집단 간의 이질성도 강화되는(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양극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다음에 에스테반-레이의 양극화지수(이하 ER지수로 표기)이다.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내적 갈등의 수준을 나타내며, 그 지수 값이 높은 사회 내에서는 집단간 충돌의 가능성이 크고 그 값이 낮을 때에는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다시 말해 집단간 갈등의 가능성은 (1) 집단 내의 동질성이 강할수록 (2) 집단 간의 이질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3) 상당한 규모를 갖춘 그룹의 수가 적을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ER 지수는 지니계수나 엡킨슨 지수와 같은 불평등 지수 달리 사회 갈등 내지 사회 불안정성을 시사한다.

전체의 소득분포를 n 개의 구간으로 나눌 경우, ER지수는 다음의 식(5-3)과 같이 표현된다.

$$ER(\alpha, \rho) = \sum_i^n \sum_j^n \pi_i^{1+\alpha} \pi_j | \mu_i - \mu_j | \quad \text{----- 식 (5-3)}$$

이때 π_i 는 특정한 소득값 y 를 가진 사람이 i 번째 구간에 속할 확률로, i 번째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혹은 가구)의 비중을 의미한다. μ_i 는 i 번째 집단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α 는 양극화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구간내의 군집화 경향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 α 의 값이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를 차별화시켜준다. $\alpha=0$ 일 경우, 사회는 군집화 경향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ER지수는 지니계수와 같아진다. 에스테반과 레이는 양극화지수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공리를 제시한 후, 이 공리체계를 만족시키는 α 의 값은 $0 \leq \alpha \leq 1.6$ 임을 보였다.

한편 전체 소득분포를 n 개가 아닌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집단간 구분선은 평균이 되며, 이때 ER지수는 식 (5-4)와 같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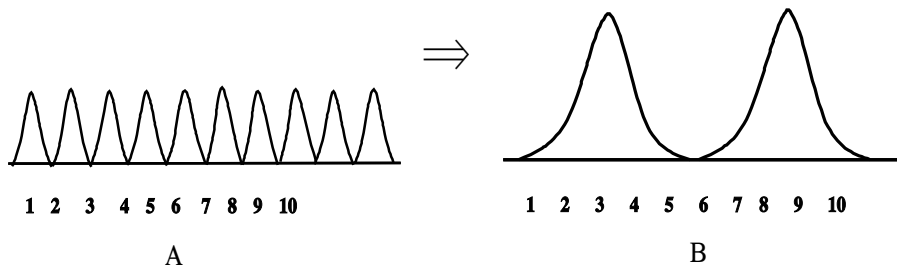
$$ER = [\pi^\alpha + (1 - \pi)^\alpha][\pi - L(\pi)] \quad \text{-----식(5-4)}$$

π : 전체인구에서 평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

$L(\pi)$: π 에서 로렌스곡선의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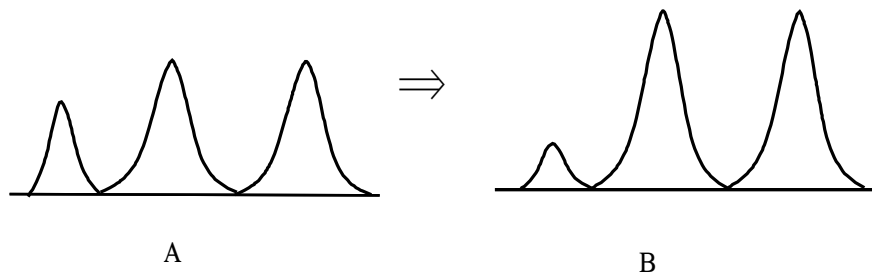
$0 \leq \alpha \leq 1.6$ 의 값을 갖는 패러미터.

그런데, 위와 같은 ER지수의 정의에 따를 경우, 양극화는 빈곤, 불평등과 무관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있다. 지니계수와 ER지수, 빈곤율과 ER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래 <그림 5-2>와 <그림 5-3>이다.



<그림 5-2-1> 불평등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위의 그림에서 소득분포 상태가 A에서 B로 바뀔 때 불평등은 감소하였으나(하위소득층과 상위 소득층이 중간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두개의 이질적 집단으로 균집화되면서 양극화 경향은 강화된다. 이 경우 지니계수는 감소하면서 양극화지수는 증가하게 된다.



<그림 5-2-2> 빈곤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그림 5-3>은 저소득계층의 상향이동으로 중간층과 고소득층이 모두 증가한 상황을 보여준다. A의 상태에 비해 B의 경우는 빈곤층의 규모가 훨씬 줄어들었으나, 다른 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두 집단간의 양극화 경향은 강화된다. 즉 빈곤율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양극화는 빈곤을 감소와도 구분되는 현상이다.

한편 에스테반, 그래딘과 레이(Esteban, Gradian & Ray 1999)는 이 양극화지수가 양집단의 극화를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개선된

양극화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체 소득의 불평등을 몇 개의 집단 사이의 불평등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즉 전체 소득구간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는 과정에서 집단 내부의 이질성(불평등)이 과소평가되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단간의 이질성(불평등)은 과대평가되므로, 결과적으로 양극화지수 자체가 실제의 양극화 경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보정한 개선된 ER지수(extended ER)를 EGR이라고 하면, EGR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EGR(f, \alpha, \beta) = ER(\alpha, \rho) - \beta(G(f) - G(\rho^*)) \text{ -----식 (5-5)}$$

이때 ρ^* 는 전체 가구를 몇 개의 집단으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집단내 불평등의 과소평가경향)를 최소화하는 소득구간 구분방법을 말하며, $G(\rho^*)$ 는 그러한 소득구간 구분에 따른 지니계수이다. β 는 이 오차에 대해 부여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패러미터 값이다. ρ^* 에서의 소득구간의 구분값(y_i)은 Aghevli and Mehran(1981), Davies and Shorrocks(1989)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y_i = \frac{\pi_i \mu_i + \pi_{i+1} \mu_{i+1}}{\pi_i + \pi_{i+1}} \text{ -----식(5-6)}$$

π_i : i 번째 소득구간에 소득구간에 포함되는 가구의 비율

μ_i : i 번째 소득구간의 평균

즉 소득구간을 구분하는 각 점은 인접 소득구간 평균의 (인구비율로 가중한) 가중평균이다. 전체 소득구간을 두 구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최적의 구분점은 전체 소득의 평균값이 되며, 이 경우 EGR은 식 (5-7)과 같이 표현된다.

$$EGR = [\pi^\alpha + (1 - \pi)^\alpha][\pi - L(\pi)] - \beta[G - (\pi - L(\pi))] \text{ -----식 (5-7)}$$

이하에서는 ER과 ER의 변화를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이때, α 는 전병유외(2005)의 방식에 따라 1, 1.3, 1.6 세 값을 부여하고 $\beta=1$ 로 간주하기로 한다.

2. 양극화지수의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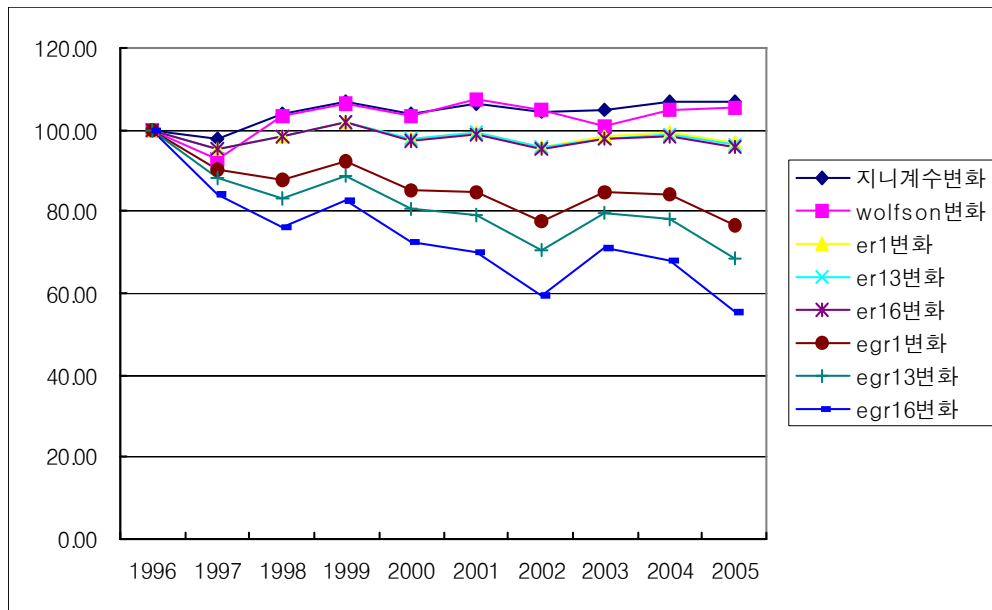
<표 5-2-1 > 시장소득 양극화지수(도시근로자)

시장소득	Wolfson	ER			EGR		
		$\alpha=1$	$\alpha=1.3$	$\alpha=1.6$	$\alpha=1$	$\alpha=1.3$	$\alpha=1.6$
96	0.24339	0.21290	0.17445	0.14350	0.14126	0.102810	0.071859
97	0.22542	0.20321	0.16623	0.13641	0.12743	0.090459	0.060641
98	0.25157	0.20977	0.17156	0.14073	0.12364	0.085428	0.054605
99	0.25856	0.21709	0.17771	0.14598	0.13037	0.090997	0.059268
00	0.25120	0.20829	0.17043	0.13990	0.12062	0.082759	0.052236
01	0.26088	0.21134	0.17300	0.14210	0.11970	0.081358	0.050458
02	0.25576	0.20374	0.16669	0.13681	0.10978	0.072732	0.042858
03	0.24560	0.20893	0.17091	0.14024	0.11986	0.081830	0.051164
04	0.25528	0.21120	0.17259	0.14142	0.11885	0.080240	0.049070
05	0.25599	0.20627	0.16838	0.13775	0.10839	0.070501	0.039878

<표 5-2-2> 시장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도시근로자)

	L(0.5)	L(p1)	지니계수	p1	p2
96	0.30363	0.39309	0.28455	0.60600	0.39400
97	0.31038	0.39220	0.27898	0.59540	0.40460
98	0.29634	0.38394	0.29590	0.59371	0.40629
99	0.29159	0.38300	0.30380	0.60009	0.39991
00	0.29691	0.38872	0.29596	0.59701	0.40299
01	0.29196	0.38834	0.30298	0.59968	0.40032
02	0.29546	0.39256	0.29769	0.59630	0.40370
03	0.29654	0.38616	0.29801	0.59509	0.40491
04	0.29176	0.37687	0.30355	0.58807	0.41193
05	0.29082	0.37358	0.30414	0.57985	0.42015

<그림 5-2-3> 시장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도시가계기준, 1996=100)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도시가구 근로자의 시장소득의 울프슨지수와 ER지수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악화된 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은 1996년의 값을 100으로 보았을 때, 시장소득 양극화 관련 지수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울프슨 지수와 ER지수는 지니계수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에 이르러 ER지수가 울프슨 지수 및 지니계수와 상반된 변화방향을 보이고 있다. '03년의 경우 울프슨지수는 하락한 반면 ER지수는 상승해꼬, 반대로 '05년의 경우 울프슨 지수는 상승했으나 ER지수는 하락했다. EGR지수의 경우 1996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가 관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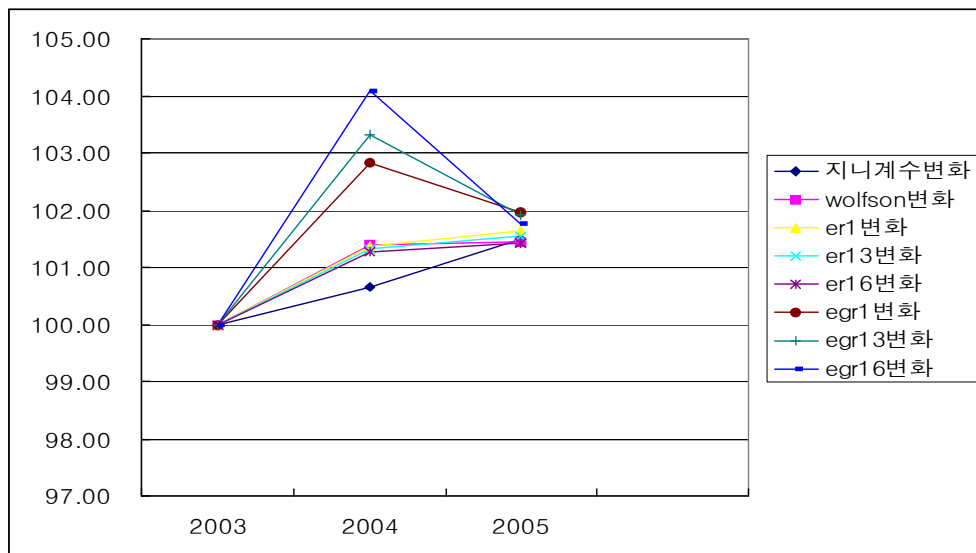
<표 5-2-3> 시장소득 양극화지수(전체가구)

	Wolfson	ER			EGR		
		$\alpha=1$	$\alpha=1.3$	$\alpha=1.6$	$\alpha=1$	$\alpha=1.3$	$\alpha=1.6$
03	0.27845	0.25109	0.20544	0.16864	0.16587	0.120220	0.083424
04	0.28231	0.25451	0.20816	0.17077	0.17056	0.124210	0.086825
05	0.28250	0.25523	0.20863	0.17102	0.16911	0.122510	0.084902

<표 5-2-4> 시장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전체가구)

	L(0.5)	L(π)	지니계수	π	1- π
03	0.26967	0.34571	0.33630	0.59679	0.40321
04	0.26762	0.33960	0.33846	0.59411	0.40589
05	0.26590	0.33498	0.34135	0.59021	0.40979

<그림 5-2-4> 시장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전체가계기준, 1996=100)



‘03-’05년간 전체가구의 시장소득 양극화지수는 상승하였다. 단 EGR지수의 경우 ‘03-’04년 간에는 상승, 그 이후 기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ER과 울프슨 지수의 경우는 - ‘03-’04년의 상승세가 ‘04-’05년간에는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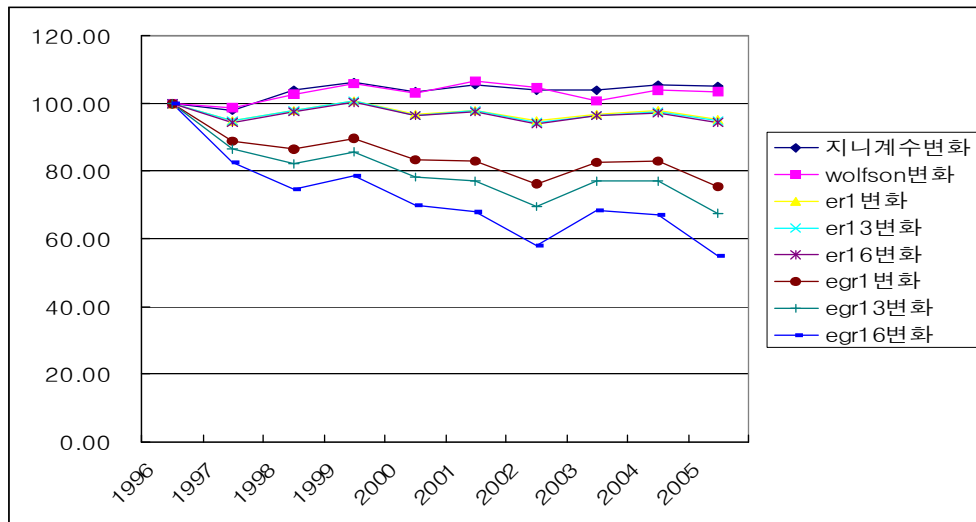
<표 5-2-5> 경상소득 양극화지수(도시근로자)

	Wolfson	ER			EGR		
		$\alpha=1$	$\alpha=1.3$	$\alpha=1.6$	$\alpha=1$	$\alpha=1.3$	$\alpha=1.6$
96	0.24315	0.21329	0.17483	0.14388	0.14219	0.103730	0.072780
97	0.23959	0.20235	0.16553	0.13584	0.12649	0.089674	0.059983
98	0.24999	0.20916	0.17107	0.14034	0.12320	0.085102	0.054374
99	0.25702	0.21485	0.17584	0.14441	0.12767	0.088661	0.057225
00	0.25005	0.20607	0.16862	0.13843	0.11852	0.081071	0.050880
01	0.25874	0.20895	0.17107	0.14055	0.11773	0.079849	0.049329
02	0.25471	0.20176	0.16505	0.13544	0.10858	0.071862	0.042255
03	0.24476	0.20615	0.16868	0.13847	0.11730	0.079833	0.049627
04	0.25285	0.20866	0.17054	0.13978	0.11786	0.079741	0.048976
05	0.25133	0.20290	0.16568	0.13560	0.10719	0.069970	0.039897

<표 5-2-6>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도시근로자)

	L(0.5)	L(π)	지니계수	π	1- π
96	0.30377	0.39471	0.28439	0.60799	0.39201
97	0.30771	0.39308	0.27821	0.59543	0.40457
98	0.29694	0.38481	0.29513	0.59397	0.40603
99	0.29277	0.38393	0.30203	0.59878	0.40122
00	0.29839	0.39122	0.29362	0.59729	0.40271
01	0.29385	0.39187	0.30018	0.60082	0.39918
02	0.29716	0.39358	0.29494	0.59534	0.40466
03	0.29838	0.39099	0.29499	0.59714	0.40286
04	0.29432	0.38072	0.29946	0.58938	0.41062
05	0.29477	0.37933	0.29860	0.58223	0.41777

<그림 5-2-5>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도시가계기준, 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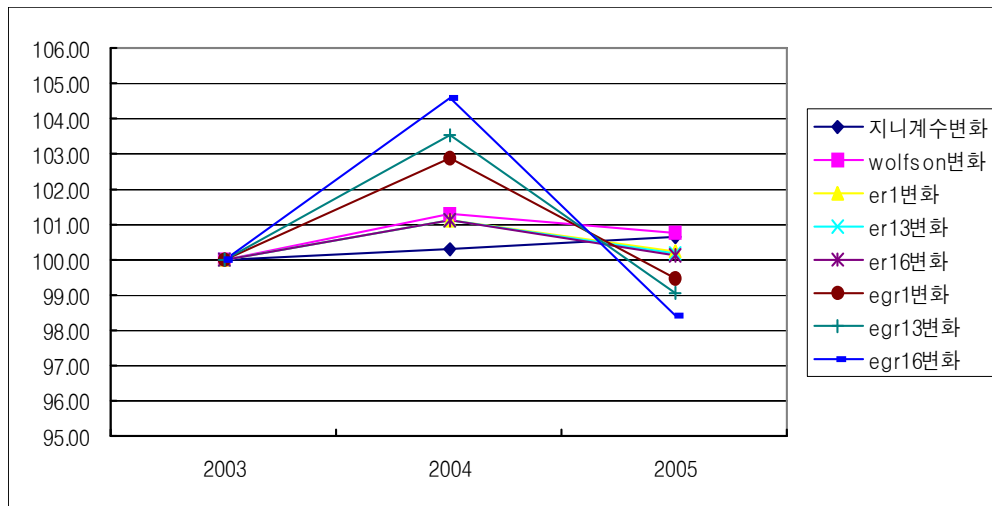
<표 5-2-7> 경상소득 양극화지수(전체가구)

	Wolfson	ER			EGR		
		$\alpha=1$	$\alpha=1.3$	$\alpha=1.6$	$\alpha=1$	$\alpha=1.3$	$\alpha=1.6$
03	0.27026	0.24149	0.19767	0.16236	0.15813	0.114310	0.079000
04	0.27373	0.24426	0.19991	0.16417	0.16272	0.118370	0.082628
05	0.27229	0.24210	0.19806	0.16255	0.15728	0.113240	0.077733

<표 5-2-8>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전체가구)

	L(0.5)	L(π)	지니계수	π	1- π
03	0.27748	0.35803	0.32485	0.59952	0.40048
04	0.27623	0.35438	0.32580	0.59864	0.40136
05	0.27554	0.35377	0.32692	0.59587	0.40413

<그림 5-2-6> 경상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전체가구기준, 1996=100)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의 양극화지수는 경제위기시 상승한 이후 미약한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는 유사한 변화방향양상을 보이나, '03년의 경우 지니계수는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울프슨지수는 하락하였다. 도시근로자가계와 전가계 모두 '03-'04년간에는 양극화지수가 상승하고, '04-'05년간에는 하락하고 있는데, '04-'05년간의 하락세는 시장소득의 추세와 다른 점이다. '96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EGR 지수는 전반적 하락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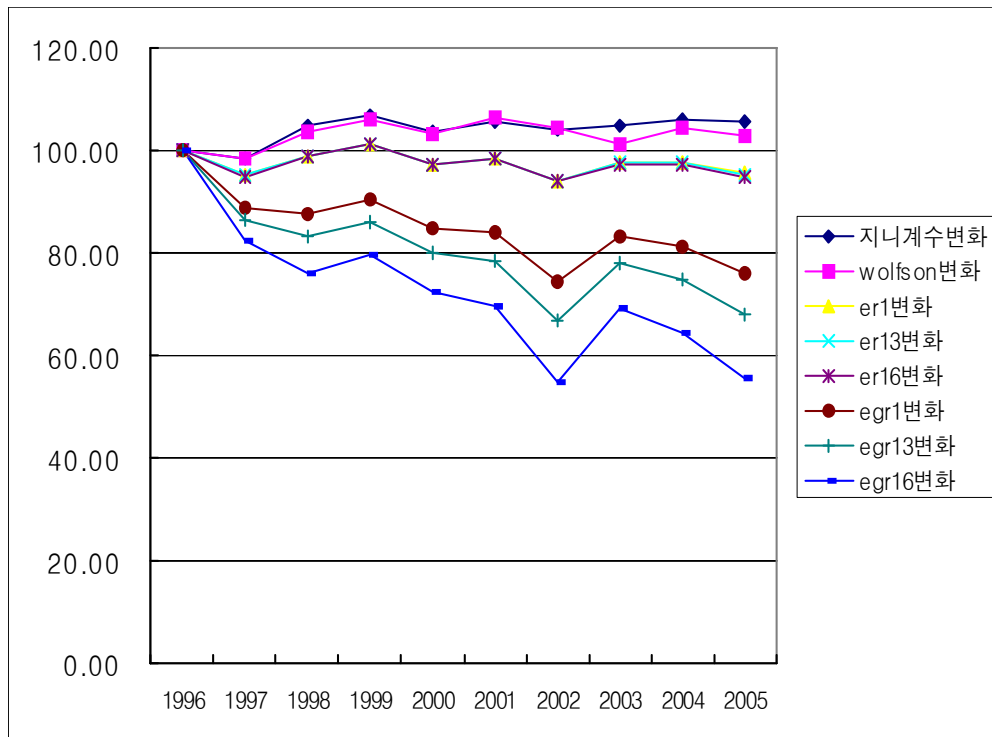
<표 5-2-9>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도시근로자)

	Wolfson	ER			EGR		
		$\alpha=1$	$\alpha=1.3$	$\alpha=1.6$	$\alpha=1$	$\alpha=1.3$	$\alpha=1.6$
96	0.23684	0.20856	0.17069	0.14016	0.13934	0.101460	0.070936
97	0.23336	0.19838	0.16217	0.13295	0.12391	0.087698	0.058476
98	0.24581	0.20638	0.16866	0.13820	0.12205	0.084321	0.053865
99	0.25119	0.21127	0.17281	0.14180	0.12588	0.087427	0.056412
00	0.24481	0.20303	0.16599	0.13611	0.11818	0.081147	0.051263
01	0.25247	0.20530	0.16791	0.13776	0.11683	0.079447	0.049294
02	0.24766	0.19645	0.16054	0.13156	0.10382	0.067918	0.038937
03	0.23970	0.20355	0.16642	0.13646	0.11617	0.079035	0.049075
04	0.24741	0.20385	0.16651	0.13634	0.11330	0.075950	0.045782
05	0.24370	0.19945	0.16277	0.13312	0.10577	0.069089	0.039433

<표 5-2-10>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도시근로자)

	L(0.5)	L(π)	지니계수	π	1- π
96	0.30789	0.38982	0.27779	0.59839	0.40161
97	0.31101	0.39219	0.27285	0.59057	0.40943
98	0.29973	0.38183	0.29072	0.58822	0.41178
99	0.29621	0.38359	0.29665	0.59485	0.40515
00	0.30193	0.38855	0.28788	0.59158	0.40842
01	0.29769	0.38897	0.29377	0.59427	0.40573
02	0.30113	0.39216	0.28907	0.58861	0.41139
03	0.30113	0.38802	0.29093	0.59157	0.40843
04	0.29761	0.38058	0.29441	0.58443	0.41557
05	0.29858	0.37818	0.29314	0.57763	0.42237

<그림 5-2-7>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도시가계기준, 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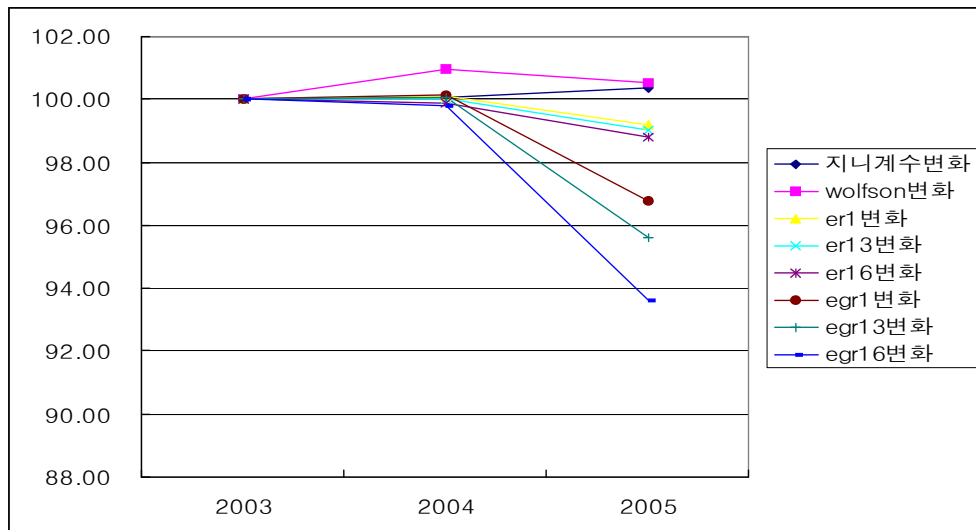
<표 5-2-11>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전체가구)

	Wolfson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03	0.26751	0.24217	0.19823	0.16281	0.16023	0.116280	0.080868
04	0.27005	0.24239	0.19823	0.16261	0.16049	0.116330	0.080711
05	0.26897	0.24019	0.19628	0.16083	0.15506	0.111150	0.075702

<표 5-2-12>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전체가구)

	L(0.5)	L(π)	지니계수	π	1- π
03	0.27798	0.35721	0.32411	0.59938	0.40062
04	0.27722	0.35111	0.32428	0.59350	0.40650
05	0.27670	0.34785	0.32531	0.58804	0.41196

<그림 5-2-8> 가처분소득 양극화지수 변화추이(전체가계기준, 1996=100)



가처분소득의 양극화지수 역시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양극화지수와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인다. 즉 경제위기 이후 악화 → 다소 개선 → '03, '04년 악화 → '05년 개선의 추세이다. 1996년 수준과 '05년을 비교하면 울프슨 지수만 상승했을 뿐, 다른 지수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비교할 경우, EGR지수를 제외하고는 이후 기간동안 양극화가 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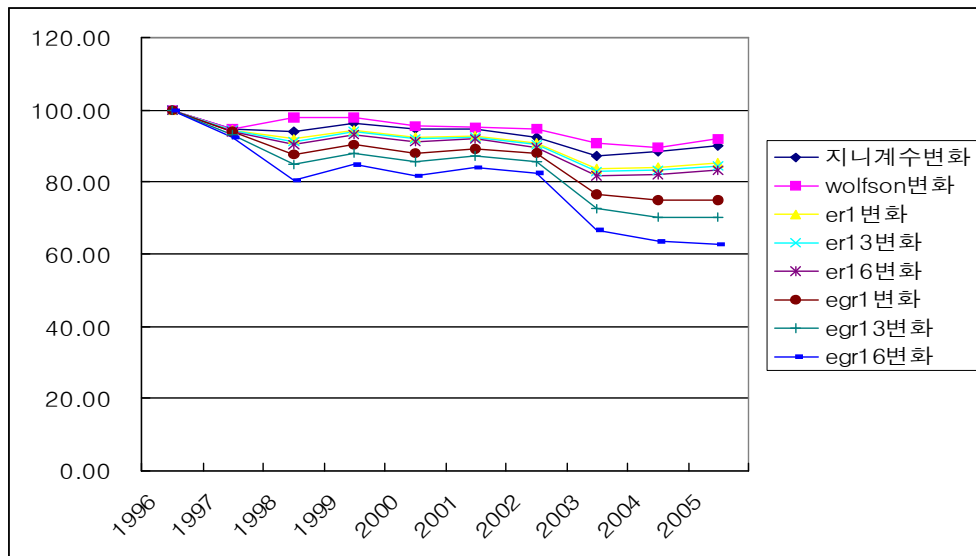
<표 5-2-13> 소비지출 양극화지수(도시근로자)

	Wolfson	ER			EGR		
		$\alpha=1$	$\alpha=1.3$	$\alpha=1.6$	$\alpha=1$	$\alpha=1.3$	$\alpha=1.6$
96	0.23821	0.23817	0.19831	0.16677	0.15601	0.116150	0.084607
97	0.22590	0.22485	0.18674	0.15650	0.14650	0.108380	0.078142
98	0.23291	0.21882	0.18080	0.15047	0.13642	0.098409	0.068075
99	0.23363	0.22445	0.18601	0.15544	0.14085	0.102420	0.071849
00	0.22771	0.22006	0.18230	0.15227	0.13703	0.099280	0.069243
01	0.22651	0.22114	0.18329	0.15319	0.13913	0.101280	0.071175
02	0.22557	0.21670	0.17933	0.14957	0.13704	0.099677	0.069913
03	0.21644	0.19956	0.16434	0.13614	0.11973	0.084511	0.056306
04	0.21371	0.20032	0.16526	0.13723	0.11677	0.081702	0.053677
05	0.21879	0.20278	0.16719	0.13873	0.11699	0.081403	0.052941

<표 5-2-14>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도시근로자)

	L(0.5)	L(π)	지니계수	π	1- π
96	0.29127	0.43995	0.32034	0.67813	0.32187
97	0.30126	0.44386	0.30321	0.66871	0.33129
98	0.30003	0.42925	0.30121	0.64807	0.35193
99	0.29749	0.43608	0.30804	0.66053	0.33947
00	0.30086	0.43896	0.30308	0.65902	0.34098
01	0.30120	0.43975	0.30316	0.66090	0.33910
02	0.30431	0.43801	0.29635	0.65471	0.34529
03	0.31337	0.43327	0.27939	0.63283	0.36717
04	0.31230	0.44076	0.28388	0.64108	0.35892
05	0.30874	0.43571	0.28857	0.63849	0.36151

<그림 5-2-9>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변화추이(도시가계기준, 19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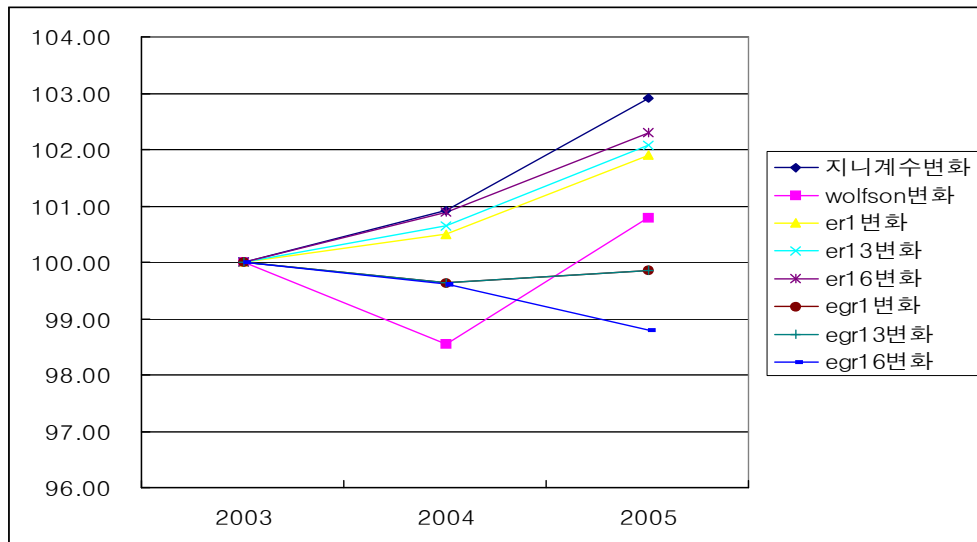
<표 5-2-15> 소비지출 양극화지수(도시근로자)

	Wolfson	ER			EGR		
		$\alpha=1$	$\alpha=1.3$	$\alpha=1.6$	$\alpha=1$	$\alpha=1.3$	$\alpha=1.6$
03	0.23161	0.22239	0.18359	0.15261	0.14656	0.107760	0.076777
04	0.22826	0.22348	0.18479	0.15396	0.14600	0.107320	0.076477
05	0.23346	0.22662	0.18739	0.15611	0.14636	0.107120	0.075845

<표 5-2-16>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관련 통계량(전체가구)

	L(0.5)	L(π)	지니계수	π	1- π
03	0.30128	0.42188	0.29822	0.64427	0.35573
04	0.30087	0.42793	0.30096	0.65140	0.34860
05	0.29703	0.42463	0.30689	0.65125	0.34875

<그림 5-2-10> 소비지출 양극화지수 변화추이(전체가구, 1996=100)



소비지출의 양극화지수는 소득변수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97년 소비지출의 양극화지수 악화 이후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03년에 이르러 다소 악화경향을 보인다. 반면 EGR의 경우 지속적 하락세가 관측된다.

제6장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수의 분해

제1절 SEN 분해

1. 변화요인 분석 방법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변화요인은 빈곤율 효과(proportion of poor effect), 빈곤층의 평균소득효과(average poor income effect), 빈곤층 사이의 분배효과(distribution among the poor effect) 등 세 가지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효과에 따라 나타나는 빈곤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예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빈곤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던 가구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면 1999년에 빈곤가구로 전락하였으며, 이 가구로 말미암아 사회의 빈곤 상태가 증가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구의 소득 원천은 임금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 가구의 소득으로 말미암아 모든 빈곤층의 평균소득 수준은 줄어들 것이고, 사회 전체의 빈곤 상태는 악화될 것이다.

두 번째 예는 1996년에 이미 빈곤 상태에 있던 가구의 예로써, 이 가구의 소득은 1996년에 비해 1999년에 증가하지만, 두 기간 사이의 빈곤선의 증가 속도보다 이 빈곤가구의 소득 증가가 느린 경우이다. 이 가구의 빈곤의 정도는 1996년과 비교하여 1999년에 악화되었을 것이며, 이 가구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의 빈곤은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 예는 빈곤 가구의 소득분배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전체 10가구 가운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계속해서 빈곤한 두 가구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빈곤율은 20%

로 두 기간 사이에 차이가 없다. 1996년에 이들 두 가구의 소득은 빈곤선에서 일정한 비율로 부족하다고 하자. 예를 들면 1996년에 두 가구(갑과 을)의 소득이 빈곤선의 50% 수준으로 동일하다고 하자. 이 경우의 소득갭 비율은 50%이다. 1999년에 빈곤선은 1996년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고 하자. 1999년에 한 빈곤가구(갑)의 소득은 빈곤선의 증가보다 높은 소득 상승으로 빈곤선의 2/3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다른 빈곤가구(을)의 소득 상승은 빈곤선 증가보다 느려서 을의 소득이 빈곤선의 1/3 수준이라고 한다면 두 가구 사이의 소득에는 격차가 있다. 그러나 두 가구의 평균소득은 1996년과 마찬가지로 1999년에도 빈곤선의 50% 수준이므로 소득갭 비율은 1996년과 마찬가지로 1999년에 50%이다.¹¹⁾ 그러나 이 경우에 소득이 많이 상승한 가구의 소득은 1999년에도 빈곤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므로 계속해서 빈곤가구이고, 소득 상승이 적은 가구의 소득은 빈곤선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면 1999년의 빈곤 상태와 1996년의 빈곤 상태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예에 대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상이할 것이다. 첫 번째 상황은 일자리를 잃어버림으로써 빈곤이 증가한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내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빈곤선의 상승 폭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부의 사회보장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 번째 상황은 가장 불이익을 받은 가구, 즉 소득증가속도가 가장 느린 가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en 지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빈곤율 효과(두 기간 사이의 빈곤율의 % 차이)

둘째, 빈곤층의 평균소득효과(두 기간 사이의 소득갭의 % 차이에서 두 기간 사이의 빈곤율의 % 차이를 감해준 결과)

셋째,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효과(두 기간 사이의 Sen 지수의 % 차이에서 두 기간 사이의 소득갭의 % 차이를 감해준 결과)

11) 예를 들어 1996년의 빈곤선을 3이라고 가정하면, 두 가구(갑과 을)의 소득은 1.5로 동일하다. 1999년에 빈곤선은 6이 되고, 소득이 많이 상승한 갑의 소득은 빈곤선의 2/3 수준인 4가 되고, 소득 상승이 느린 을의 소득은 1/3 수준인 2가 된다. 1996년과 1999년의 소득갭 비율은 50%로 동일하다.

Sen 지수는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는데 우측의 첫 항은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효과로써 Sen 지수의 변화에서 소득갭 비율의 변화를 제거한 순수한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효과만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항은 빈곤율의 평균소득효과로써 소득갭 비율의 변화 가운데 빈곤율 변화를 제거한 것으로써 새롭게 진입한 빈곤층을 제외한 기존의 빈곤층의 순수한 평균소득효과를 나타낸다. 세 번째 항은 두 기간 사이의 빈곤율 변화를 표시한 빈곤율 효과이다.

$$\% \Delta P_S = (\% \Delta P_S - \% \Delta P_G) + (\% \Delta P_G - \% \Delta P_H) + (\% \Delta P_H) \quad (1)$$

여기서, $\% \Delta P_S$ 는 두 기간 사이의 Sen 지수의 평균값에 대한 Sen 지수의 % 변화로써 표시되며 다음과 같다.

$$\% \Delta P_S = \frac{100 * (P_{S2} - P_{S1})}{0.5 * (P_{S2} + P_{S1})} \quad 12)$$

P_{S1} 은 시작년도의 Sen 지수이며, P_{S2} 는 비교년도의 Sen 지수이다. 그리고 $\% \Delta P_G$ 는 두 기간 사이의 소득갭 비율의 평균값에 대한 소득갭 비율의 % 변화로써 표시되며 다음과 같다.

$$\% \Delta P_G = \frac{100 * (P_{G2} - P_{G1})}{0.5 * (P_{G2} + P_{G1})}$$

P_{G1} 과 P_{G2} 는 각기 시작년도와 비교년도의 소득갭 비율이다. 그리고 $\% \Delta P_H$ 는 두 기간 사이의 빈곤율의 평균값에 대한 빈곤율의 % 변화로써 표시할 수 있다.

$$\% \Delta P_H = \frac{100 * (P_{H2} - P_{H1})}{0.5 * (P_{H2} + P_{H1})}$$

P_{H1} 은 시작년도의 빈곤율이며, P_{H2} 는 비교년도의 빈곤율이다.

12) 본고에서는 근로자가구의 경우, 1996년, 1999년, 2002년 및 2005년의 산술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전가구의 경우, 2003년과 2005년의 산술평균값을 이용하여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중간값(mid-point) 정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시작년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와 비교년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빈곤효과를 분해하여 분석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진욱(2004)을 참조.

2. 변화요인 분석

빈곤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선을 설정해야 한다. 빈곤선은 상대빈곤선으로써 각 년도의 대상가구(근로자 가구 혹은 전가구)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빈곤율은 빈곤인구율과 빈곤가구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변화요인 분석에는 빈곤인구율을 사용하였다. 대상연도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으로 3개년마다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개년으로 분류한 이유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보다 1999년의 빈곤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1996년과 1999년을 선택하였고, 이후 3년마다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02년과 2005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전가구에 대한 통계는 2003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으므로 2003년과 최근 자료인 2005년의 전가구에 대한 빈곤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의 근로자 가구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빈곤선을 설정하여 빈곤인구율, 소득갭비율, SEN지수를 계산하여 수록한 것이 <표 1>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가구는 1996년보다 1999년에 빈곤인구율이 확대되었고, 2002년에는 소폭 개선되었다가 2005년에 다시 악화된다. 소득갭 비율은 1996년보다 1999년에 악화되었으며, 2002년에는 개선되다가 2005년에는 크게 악화되어 1999년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SEN지수는 2005년에 최고 악화된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96년에는 30대 가구주의 빈곤인구율이 가장 낮고, 40대, 20대, 50대, 60대 순으로 빈곤인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인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전년도 추세와 20대, 3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인구율은 7.2~7.4%였으며, 40대와 6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인구율은 10.7%였으나, 50대 가구주의 빈곤인구율이 가장 높은 11.8%였다. 2005년에는 1996년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 30대 가구주의 빈곤인구율이 가장 낮았고, 2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빈곤인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갭 비율은 연령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연도별로 약간 상이하다. 1996년에는 4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갭이 가장 낮았으며, 1999년에는 60대이상 가구주 가구, 2002년과 2005년에는 2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EN 지수는 1996년에 30대 가구주 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9년에는 연령이 들수록 SEN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2년에는 60대 이상의 가구주 가구보다 50대 가구주 가구의 SEN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가장 빈곤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1999년과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이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인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996년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인구율보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인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모든 계층에서 빈곤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인구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보다 빈곤이 나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2년에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구의 빈곤인구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가장 낮은 빈곤인구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도 계속된다. 그러나 2005년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빈곤상태가 가장 크게 악화되어 다른 계층보다 빈곤인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갭 비율은 1996년과 2002년의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의 빈곤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9년과 2005년의 소득갭 비율은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EN 지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가 가장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05년에는 대학을 졸업한 가구주가 가장 빈곤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표 2>에 의하면 2003년보다 2005년에 빈곤인구율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소득갭 비율은 커다란 변화없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이 두 지수를 동시에 고려한 SEN 지수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3년에는 30대 가구주의 빈곤인구율이 가장

낮게 도출됨으로써 빈곤 상태가 좋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40대, 20대, 50대, 60대 순으로 빈곤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에는 30대 가구주의 빈곤인구율이 약간 증가하고, 20대 가구주의 빈곤인구율이 대폭 개선되어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인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소득갭 비율은 2003년이나 2005년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6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SEN지수도 거의 흡사하여 2003년에는 30대 가구주의 빈곤상태가 가장 좋았으나 2005년에 약간 악화되어 연령과 빈곤상태가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 학력별로는 분석해 보면 2003년에 전문대학 졸업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상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한 가구주 순으로 빈곤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빈곤인구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3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 학력별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계층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 가구와 중학교를 졸업한 가구주 가구였다. 소득갭 비율은 초등학교 졸업한 가구주 가구와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 가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가구, 2005년에는 대학 이상 졸업한 가구의 빈곤 상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SEN 지수는 2003년에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가장 우수하였고, 2005년에는 학력이 높아지면 빈곤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6-1-1> 근로자가구 특성별 빈곤실태 (상대빈곤인구)

가구구분		1996			1999			2002			2005		
		빈곤율	소득갭	Sen	빈곤율	소득갭	Sen	빈곤율	소득갭	Sen	빈곤율	소득갭	Sen
근로자가구		9.1289	27.5251	3.6924	10.4758	31.5971	4.8548	9.3272	27.2609	3.7613	11.2447	33.9289	5.5904
연령	20대	10.08	29.7205	4.4736	6.7605	31.6233	3.1960	7.4186	21.8635	2.4848	10.2199	30.7309	4.6648
	30대	6.9069	30.6351	3.1158	8.9021	35.8432	4.6242	7.1918	28.8116	3.2055	8.9865	36.6508	4.7421
	40대	9.5613	25.3401	3.4412	11.2035	29.5465	4.8720	10.6625	25.9552	3.9920	11.2382	31.8255	5.2618
	50대	11.1465	26.7088	4.3225	12.4496	32.7034	5.7681	11.8315	30.2225	5.1115	13.5408	34.0272	6.7277
	60대	14.1256	28.2447	5.8162	17.1182	28.2291	6.8665	10.6829	32.0134	4.8682	16.5369	37.4627	8.9930
학력	초등학교	13.3009	26.1312	4.8873	14.1033	31.4773	6.4884	12.001	34.1185	6.0367	13.851	38.5432	7.8734
	중학교	8.526	32.3937	4.0904	12.8119	33.6632	6.2199	10.0641	27.4854	3.9840	16.0331	35.0486	8.2652
	고등학교	7.7078	28.5719	3.2709	8.7763	32.4164	4.2340	8.2456	24.3571	2.9957	9.8221	35.692	5.1447
	전문대학	6.7474	20.6604	2.1240	7.1085	27.565	2.9769	8.2952	23.4064	2.9088	8.5063	29.1502	3.5403
	대학교	6.8906	24.7202	2.5492	8.9971	26.3406	3.5627	7.4025	27.3548	3.0774	8.0531	28.5224	3.4286

<표 6-1-2> 전가구 특성별 빈곤실태 (상대빈곤인구)

가구구분		2003			2005		
		빈곤율	소득갭	Sen	빈곤율	소득갭	Sen
전가구		14.6277	45.0747	9.4535	15.1738	44.8529	9.7451
연령	20대	12.9454	40.6149	7.6802	11.8037	40.3208	6.9539
	30대	11.8113	43.5309	7.5999	11.8296	42.8937	7.3048
	40대	12.8469	43.3656	8.1639	13.0308	42.9488	8.1941
	50대	15.9411	41.2714	9.4295	16.2171	42.0625	9.8993
	60대	23.9913	48.8587	16.2735	23.8056	48.4932	16.4376
학력	초등학교	22.3548	47.0532	14.9219	21.9119	48.2593	14.9684
	중학교	15.7749	44.5695	9.9908	17.8954	42.5245	10.9492
	고등학교	12.7348	46.3448	8.5609	13.0785	45.3565	8.6286
	전문대학	9.8781	36.2407	5.3258	11.9671	44.5049	7.8719
	대학교	10.6425	41.6181	6.5221	10.8327	37.7983	6.0661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구에 대한 SEN 지수를 세 가지 요인(빈곤율효과, 빈곤층의 평균소득효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효과)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대상 연도가 4개이므로 분석할 수 있는 구간은 1996년-1999년, 1999년-2002년, 2002년-2005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구간인 1996년-1999년 사이에는 근로자가구의 빈곤율 효과,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 및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 효과가 전부 공통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빈곤율 효과와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효과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5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세 효과가 전부 10%내외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만 악화되었고, 나머지 두 효과는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30대, 40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는 빈곤율 효과와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 효과가 크게 악화되고,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만 개선되었다.

가구주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 가구주 가구의 빈곤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 상승이 빈곤선 상승보다 낮았으며,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졸업한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인구가 증가하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었지만,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는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6년과 비교하여 1999년에 전반적으로 빈곤상태가 악화되었는데, 빈곤인구가 증가하였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가구주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 가구와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상태는 세 효과가 공통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 구간인 1999년-2002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빈곤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빈곤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가구주 가구부터 50대 가구주 가구까지 빈곤인구도 줄어들고, 빈곤층의 평균소득 향상 속도가 빈곤선 상승 속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인구가 증가하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나, 평균소득은 빈곤선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인구도 줄고, 이들 사이의 소득분배 상태도 개선되었으나, 평균소득이 빈곤선 상승 속도보다 크게 적었다.

학력별 분석에서는 가구주 학력에 따라 약간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세 효과가 전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중학

교,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인구가 감소하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층의 평균소득은 빈곤선 상승 속도보다 느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 가구는 빈곤인구가 줄어들고, 빈곤층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으나, 평균소득이 큰 폭으로 악화되어 다른 계층과는 달리 빈곤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2002년에 빈곤 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50대 가구주 가구와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 상태의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구간인 2002년과 2005년 사이에는 근로자가구의 빈곤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빈곤인구가 증가하였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빈곤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가구주 이하의 가구의 빈곤 상태는 유사한 형태를 보여, 빈곤인구가 늘어났고, 평균소득 상승이 빈곤선 상승보다 적어서 평균소득효과가 악화되었으며,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었다. 50대 이상의 가구주의 빈곤인구는 증가하였고, 빈곤층의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었으나, 빈곤층의 평균소득은 빈곤선 상승 속도보다 높아져서 평균소득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 학력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빈곤상태의 경우 빈곤인구가 증가하였고, 평균소득이 빈곤선보다 늦게 상승하여 평균소득효과가 줄어들었으며,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와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가구주의 빈곤 상태 변화는 동일한 형태를 보였는데, 빈곤인구는 증가하였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층의 평균소득은 빈곤선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평균소득효과가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가구주 가구는 빈곤인구가 증가하였고, 평균소득효과가 개선되었지만,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 빈곤상태는 악화되었는데, 40대 이하의 가구주

가구와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인구도 증가하고, 평균 소득이 빈곤선 상승에 못 미치며,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머지 계층은 주로 빈곤 인구는 증가하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는 악화되지만, 평균소득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의 빈곤의 변화 상태를 분석한 <표 4>에 의하면 2003년에 비해 2005년의 빈곤인구는 증가하였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소득효과는 개선된 것으로 계측되었다.

가구주 연령별 결과에 의하면 30대 이하의 가구주 가구는 전반적으로 빈곤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가구주의 경우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악화되었지만, 빈곤층의 빈곤인구가 줄어들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30대의 경우에는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상승하여 평균소득효과가 개선되었으며,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40대의 경우에는 빈곤인구가 증가하였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나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상승하였다. 전자의 악화된 요인이 후자의 개선된 정도를 초과하여 SEN 지수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인구도 증가하고, 평균소득도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도 악화됨으로써 세 가지 효과가 전부 악화되어 큰 폭으로 빈곤 상태가 악화된다. 2002년에 비해 2005년에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는 빈곤인구는 줄었지만, 평균소득의 상대적인 하락으로 빈곤 상태가 악화되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도 큰 폭으로 악화되어 2005년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 상태는 악화된다.

학력별로 보아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인구는 줄어들었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는 개선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SEN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 상태는 빈곤인구가 늘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평균소득효과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자의 두 효과가 평균소득 상승효과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2005년의 빈곤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계측되었다.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의 가구는 세 효과가 공통적으로 악화되어 다른 계층과는 상이하게 큰 폭으로 SEN 지수가 악화된다. 마지막으로 대학교 학력 이상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는 빈곤인구가 늘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나,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빈곤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전가구에 대한 2002년과 2005년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5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상태와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의 빈곤 상태가 다른 계층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근로자가구 빈곤지수 분해결과 (상대빈곤인구)

가구구분		1996-1999				1999-2002				2002-2005			
		빈곤율 효과	빈곤층 의 평균소 득 효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 배효과	합계	빈곤율 효과	빈곤층 의 평균소 득 효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 배효과	합계	빈곤율 효과	빈곤층 의 평균소 득 효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 배효과	합계
근로자가구		13.74	0.03	13.42	27.20	-11.60	-3.13	-10.65	-25.38	18.64	3.15	17.33	39.12
연령	20대	-39.42	45.63	-39.52	-33.32	9.28	-45.78	11.46	-25.34	31.76	1.96	27.26	60.98
	30대	25.24	-9.57	23.31	38.96	-21.25	-0.50	-14.49	-36.24	22.19	1.76	14.72	38.67
	40대	15.82	-0.49	19.09	34.42	-4.95	-8.00	-6.91	-19.85	5.26	15.06	7.12	27.44
	50대	11.05	9.13	8.47	28.65	-5.09	-2.79	-4.19	-12.07	13.47	-1.63	15.46	27.30
	60대	19.16	-19.21	16.62	16.56	-46.30	58.86	-46.62	-34.06	43.01	-27.33	43.83	59.52
학력	초등 학교	5.86	12.70	9.59	28.15	-16.11	24.16	-15.26	-7.21	14.31	-2.13	14.23	26.41
	중학 교	40.17	-36.33	37.46	41.31	-24.02	3.82	-23.62	-43.82	45.74	21.56	45.71	69.90
	고등 학교	12.96	-0.36	13.06	25.67	-6.24	-22.16	-5.86	-34.26	17.45	20.30	15.05	52.80
	전문 대학	5.21	23.42	4.81	33.44	15.41	-31.73	14.00	-2.32	2.51	19.34	-2.27	19.59
	대학 교	26.52	-20.17	26.82	33.16	-19.45	23.22	-18.39	-14.62	8.42	-4.24	6.62	10.79

<표 6-1-4> 전가구 빈곤지수 분해결과 (상대빈곤인구)

가구구분		2003-2005			
		빈곤율 효과	빈곤층의 평균소득효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효과	합계
전가구		3.66	-4.16	3.53	3.04
연령	20대	-9.23	8.50	-9.20	-9.93
	30대	0.15	-1.63	-2.49	-3.96
	40대	1.42	-2.39	1.33	0.37
	50대	1.72	0.18	2.96	4.86
	60대	-0.78	0.03	1.75	1.00
학력	초등학교	-2.00	4.53	-2.22	0.31
	중학교	12.60	-17.29	13.85	9.15
	고등학교	2.66	-4.82	2.94	0.79
	전문대학	19.13	1.34	18.11	38.58
	대학교	1.77	-11.39	2.38	-7.24

제 2절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1. 개요

소득원천별로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분해 방법이 사용된다. 러만과 이차키의 도출식에 따라, 소득원천별 소득과 총지니계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G = \frac{2 \sum_{k=1}^K cov(x_k, F)}{m}$$

여기에서, $cov(x_k, F)$ 는 총소득 X 의 상호적 분포와 관련하여 소득원천 k 의 소득 집중 지수(concentration index)를 나타낸다. 위 방정식에서 각 소득원천 k 에 $cov(x_k, F_k)$ 을 곱하고 m_k 로 나누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분해된 소득원천별 요인들의 합계를 산출할 수 있다.

$$G = \sum_{k=1}^K \left[\frac{cov(x_k, F)}{cov(x_k, F_k)} \cdot \frac{2cov(x_k, F_k)}{m_k} \cdot \frac{m_k}{m} \right] = \sum_{k=1}^K R_k G_k S_k$$

여기에서, R_k 는 소득원천 k 의 순위와 총소득의 순위 간의 지니상관계수로 규정되고, G_k 는 소득원천 k 의 상대 지니(요인 k 에 대한 집중지수)이며, S_k 는 소득원천 k 의 총소득에 대한 비중이다(Lerman & Yitzhaki, 1994). 예컨대 근로소득이 총소득의 불평등(지니계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C_f 라고 할 때 C_f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_f = R_f \times G_f \times S_f$$

여기에서, R_f 는 총소득과 근로소득과의 순위상관관계(지니상관계수)를 나타내며, G_f 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그리고 S_f 는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즉

근로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C_f)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G_f)에 근로소득과 총소득 간의 지니상관계수(R_f), 그리고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S_f)을 곱한 값이다. 이와 같이 각 소득원천을 f, h, w, e라 하면 이러한 소득원천이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소득원천별 소득의 기여도를 모두 합하면 총소득의 지니계수와 동일한 값이 된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ext{총소득 지니계수} = C_f + C_h + C_w + C_e$$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가구만 분석할 경우 근로소득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므로 소득원천별 분해의 의미가 상실된다. 따라서, 2003~2005년 가계조사 원자료만을 사용하여 지니분해를 시도하였다. 위의 지니분해 방식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지니분해를 한 결과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2. 지니분해 결과

<표>에 의하면, 2003~2005년 기간 동안 불평등도(지니계수)는 각각 0.32411, 0.32428, 0.32531로 매우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각 소득요소의 집중지수, 각 소득요소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소득과 각 소득요소 간의 상관계수 모두 해당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각 소득요소가 총지니계수에 미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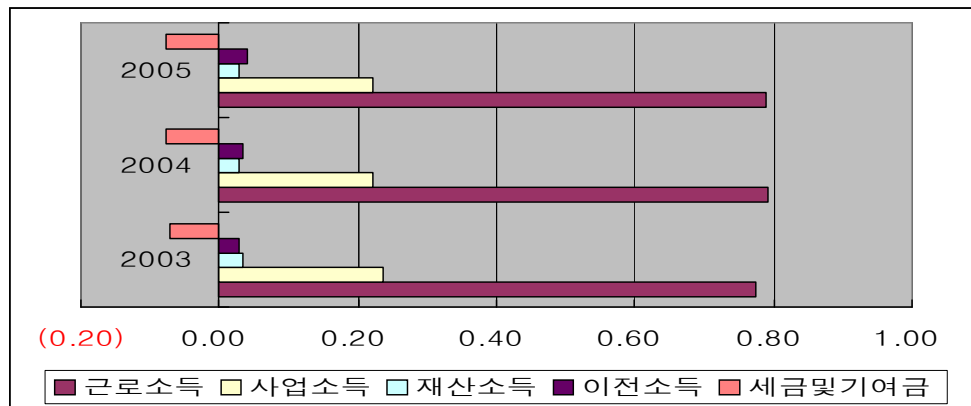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총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상대적 기여도, B)이 78~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계효과(B/A) 역시 1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재산소득 다음으로 한계효과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전소득이 총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2~4%로 매우 미미하다.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0.17%~0.29%로 소득재분배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총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7.2%~7.8%로 미미하지만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선진 복지국가의 그것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¹³⁾.

<표 6-2-1>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결과(가처분소득 기준)

	항목	집중지수	비중(A)	상관계수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B)	B/A	B-A
2003	근로소득	0.52166	0.71419	0.67448	0.25129	0.77531	1.08558	0.06112
	사업소득	0.76969	0.27653	0.35925	0.07646	0.23592	0.85313	-0.04061
	재산소득	0.96003	0.02470	0.44693	0.01060	0.03270	1.32383	0.00800
	이전소득	0.92121	0.06117	0.15903	0.00896	0.02765	0.45200	-0.03352
	공적이전	0.96162	0.02094	0.04015	0.00081	0.00249	0.11911	-0.01845
	사적이전	0.95202	0.04023	0.21288	0.00815	0.02515	0.62531	-0.01507
	세금및기여금	0.54532	-0.07659	0.55544	-0.02320	-0.07157	0.93454	-0.00501
	가처분소득	0.32411	1.00000		0.32411	1.00000	1.00000	0.00000
2004	근로소득	0.52042	0.71767	0.68723	0.25668	0.79151	1.10289	0.07384
	사업소득	0.77173	0.26698	0.34901	0.07191	0.22175	0.83057	-0.04523
	재산소득	0.95673	0.02399	0.40458	0.00928	0.02863	1.19361	0.00464
	이전소득	0.90191	0.07148	0.17414	0.01123	0.03462	0.48432	-0.03686
	공적이전	0.95134	0.02304	0.02511	0.00055	0.00170	0.07368	-0.02134
	사적이전	0.93893	0.04844	0.23473	0.01068	0.03292	0.67963	-0.01552
	세금및기여금	0.55327	-0.08012	0.55974	-0.02481	-0.07651	0.95499	-0.00361
	가처분소득	0.32428	1.00000		0.32428	1.00000	1.00000	0.00000
2005	근로소득	0.52089	0.71521	0.68999	0.25705	0.79018	1.10482	0.07497
	사업소득	0.77442	0.26122	0.35474	0.07176	0.22059	0.84448	-0.04063
	재산소득	0.95701	0.02372	0.38875	0.00882	0.02712	1.14364	0.00341
	이전소득	0.88267	0.08041	0.18382	0.01305	0.04010	0.49875	-0.04031
	공적이전	0.93373	0.02810	0.03636	0.00095	0.00293	0.10436	-0.02517
	사적이전	0.93100	0.05231	0.24832	0.01209	0.03717	0.71066	-0.01513
	세금및기여금	0.55780	-0.08056	0.56468	-0.02537	-0.07800	0.96824	-0.00256
	가처분소득	0.32531	1.00000		0.32531	1.00000	1.00000	0.00000

- 13) 스웨덴의 경우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최대 65% 정도 지니계수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며,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도 지니계수를 45%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 자세한 것은 외국의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장을 참조하시오.

<그림 6-2-1> 각 소득요소가 총지니계수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제3절 엔트로피 분해

1. 엔트로피 지수

엔트로피지수란 아래와 같은 형태의 불평등지수를 의미한다.

$$GE(\alpha) = \frac{1}{\alpha^2 - \alpha} \left[\frac{1}{n} \sum_i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여기서 GE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 이다. 최소값 0은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한 상태를 의미하며, 동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GE값은 α 값이 작을수록 저소득계층의 분포에 α 값이 클수록 고소득계층의 분포에 민감하다. α 값은 일반적으로 0, 1, 2를 사용한다(김성용·이계임, 2002). $\alpha=0$, $\alpha=1$ 은 l'hospital의 정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E(0) = \frac{1}{n} \sum_i \ln\left(\frac{\mu}{y_i}\right) \equiv MLD$$

$$GE(1) = \frac{1}{n} \sum_i \left(\frac{y_i}{\mu} \right) \ln \left(\frac{y_i}{\mu} \right) \equiv \text{Theil Index}$$

$\alpha=2$ 이면 $GE(2)$ 는 변이계수자승(SCV)의 $1/2$ 이 도출된다.

$$\begin{aligned} GE(2) &= \frac{1}{2} \left[\frac{1}{n} \sum_i \left(\frac{y_i}{\mu} \right)^2 - 1 \right] \\ &= \frac{1}{2} \frac{1}{n\mu^2} \sum_i (y_i - \mu)^2 \equiv \frac{1}{2} SCV \end{aligned}$$

여기서 $\alpha=0$ 이면, 소득(혹은 소비지출)이 낮은 계층의 소득(혹은 소비지출) 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alpha=1$ 이면, 모든 소득(혹은 소비지출)분포에 고르게 비중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alpha=2$ 이면, 소득(혹은 소비지출)이 높은 계층의 소득(혹은 소비지출) 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는 것이 된다. GE 계열의 지표들은 소득불평등도를 집단간 및 집단내 불평등도 지표로 쉽게 요인분해 할 수 있다.

$$I_{total} = I_{within} + I_{between} \Leftrightarrow I_t = I_w + I_b$$

2. 구성집단별 요인분해

엔트로피지수를 통해 정태적 요인분해가 가능하며, 전체 불평등도는 아래와 같이 집단간 불평등도와 집단내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다.

$$GE(0) = \sum_k v_k GE(0)_k + \sum_k v_k \log \left(\frac{1}{\lambda_k} \right)$$

단, $GE(0)_k$: k집단의 소득불평등도,

v_k : k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equiv n_k/n$)

λ_k : k집단 평균소득의 모집단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equiv \mu_k/\mu$)

위와 같은 엔트로피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연도간의 분해를 하고자 하며, 추정소득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구성집단간 분해는 연령 및 학력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원수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가구균등화지수는 앞에서 설명한 OECD기준의 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도시근로자의 경우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의 3년간격을 두고 분해하였다. 반면에 전가구의 경우에는 2003년과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가처분소득이 음수이거나, 0인 경우 그 값을 “1”로 치환하였다.

3. 엔트로피 분해결과

GE(0)값은 제곱변이계수값을 의미하며, 동지수는 측정단위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소득분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소득분배지수이다. 동 지수는 분배가 완전평등하면 0, 완전불평등하면 최대치가 $n-1$ 이 된다. 따라서 변이계수자승의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하다 할 수 있다. 지수적 특성을 통해 전체 지수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직후는 1999년의 지수값이 0.20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구에 대한 학력별 집단간 및 집단내 불평등을 살펴보면, 집단내 불평등이 집단간 불평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는 전체 불평등도에서 집단간 불평등도가 전체불평등의 94.5%를 차지하는 반면에 집단간 불평등도는 5.5%에 불과하다. 2005년의 경우에는 집단내 불평등도가 92.3%를 차지하고 집단간 불평등도는 전체불평등의 7.7%에 불과하다. 집단내 불평등 수준은 학력에서는 중졸이하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02년에는 초졸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3-1〉 우리나라의 학력별 엔트로피분해 결과(근로자가구)

구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월평균 가처분소득 (원)
				GE(0)k	$\log(1/\lambda k)$	
1996	초졸 이하	0.1680	0.1035	0.1595	0.1730	842,008
	중졸 이하		0.1391	0.1971	0.1513	860,449
	고졸 이하		0.4222	0.1603	0.0598	942,955
	전문대졸 이하		0.0674	0.1284	-0.0324	1,033,993
	대학 이상		0.2678	0.1434	-0.1968	1,218,823
	전체		1.0000	0.1587	0.0093	1,001,044
1999	초졸 이하	0.2076	0.0789	0.2075	0.2444	804,731
	중졸 이하		0.1195	0.2345	0.2207	824,047
	고졸 이하		0.4346	0.1980	0.0766	951,801
	전문대졸 이하		0.0788	0.1569	0.0584	969,276
	대학 이상		0.2882	0.1725	-0.2376	1,303,054
	전체		1.0000	0.1925	0.0151	1,027,527
2002	초졸 이하	0.1708	0.0708	0.2160	0.1653	1,111,081
	중졸 이하		0.1168	0.1601	0.1719	1,103,785
	고졸 이하		0.4280	0.1575	0.0991	1,187,087
	전문대졸 이하		0.0928	0.1585	-0.0038	1,315,709
	대학 이상		0.2916	0.1475	-0.2131	1,622,049
	전체		1.0000	0.1591	0.0117	1,310,754
2005	초졸 이하	0.2039	0.0777	0.2349	0.3056	1,138,020
	중졸 이하		0.1038	0.2659	0.2098	1,252,391
	고졸 이하		0.4004	0.2002	0.1018	1,395,337
	전문대졸 이하		0.0901	0.1689	-0.0011	1,546,510
	대학 이상		0.3279	0.1435	-0.2152	1,915,764
	전체		0.9999	0.1883	0.0156	1,544,791

반면에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집단내 불평등도의 경우 초졸 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에는 0.6068, 2005년에는 0.5350으로 당해연도 불평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3-2〉 우리나라의 학력별 엔트로피분해 결과(전가구)

구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월평균 가처분소득 (원)
				GE(0)k	$\log(1/\lambda_k)$	
2003	초졸 이하		0.0989	0.6068	0.3557	895,266
	중졸 이하		0.1235	0.4271	0.1691	1,078,953
	고졸 이하		0.4304	0.4636	0.0589	1,204,660
	전문대졸 이하		0.0675	0.2502	-0.0438	1,334,957
	대학 이상		0.2798	0.3213	-0.2243	1,599,014
	전체	0.4347	1.0000	0.4190	0.0156	1,277,688
2005	초졸 이하		0.1029	0.5350	0.3842	967,914
	중졸 이하		0.1231	0.4018	0.1704	1,198,711
	고졸 이하		0.4249	0.3945	0.0654	1,331,353
	전문대졸 이하		0.0807	0.3876	-0.0440	1,485,356
	대학 이상		0.2683	0.2699	-0.2476	1,820,714
	전체	0.3942	1.0000	0.3759	0.0183	1,421,353

근로자가구에 대한 연령별 집단간 및 집단내 불평등의 경우 학력과 비슷하게 집단내 불평등이 집단간 불평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는 전체 불평등도에서 집단간 불평등도가 97.8%를 차지하는 반면에 집단간 불평등도는 2.2%에 불과하다. 2005년의 경우에는 집단내 불평등도가 98.6%를 차지하고 집단간 불평등도는 전체불평등의 1.4%에 불과하다. 학력에 비해 연령의 경우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내 불평등 수준은 60세 이상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집단내 불평등도가 전체불평등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2003년 98.7%, 2005년 98.6%)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의 집단내 불평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3-3〉 우리나라의 연령별 엔트로피분해 결과

구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월평균 가처분소득 (원)
				GE(0)k	$\log(1/\lambda_k)$	
1996	29세 이하	0.1680	0.1221	0.2169	0.1034	902,725
	30~39세		0.4149	0.1729	0.0555	947,009
	40~49세		0.2665	0.1301	-0.0134	1,014,519
	50~59세		0.1559	0.1366	-0.1670	1,182,987
	60세 이상		0.0406	0.2493	-0.0589	1,061,823
	전체		1.0000	0.1643	0.0037	1,001,044
1999	29세 이하	0.2076	0.1029	0.1856	0.1334	899,168
	30~39세		0.4176	0.2110	0.0697	958,331
	40~49세		0.2894	0.1880	-0.0599	1,090,941
	50~59세		0.1472	0.2089	-0.1407	1,182,764
	60세 이상		0.0429	0.2637	-0.0203	1,048,569
	전체		1.0000	0.2037	0.0039	1,027,527
2002	29세 이하	0.1708	0.0901	0.1644	0.0858	1,202,932
	30~39세		0.3693	0.1678	0.0732	1,218,281
	40~49세		0.3352	0.1604	-0.0479	1,375,052
	50~59세		0.1481	0.1740	-0.1469	1,518,117
	60세 이상		0.0573	0.1881	0.1185	1,164,326
	전체		1.0000	0.1671	0.0037	1,310,754
2005	29세 이하	0.2039	0.0501	0.1944	0.0786	1,428,061
	30~39세		0.3459	0.1991	0.0773	1,429,942
	40~49세		0.3698	0.2077	-0.0434	1,613,234
	50~59세		0.1711	0.1762	-0.1029	1,712,206
	60세 이상		0.0631	0.2483	0.0899	1,411,953
	전체		1.0000	0.2012	0.0027	1,544,791

〈표 6-3-4〉 우리나라의 학력별 엔트로피분해 결과(전가구)

구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월평균 가처분소득 (원)
				GE(0)k	$\log(1/\lambda_k)$	
2003	29세 이하		0.0465	0.3797	0.0728	1,187,951
	30~39세		0.3177	0.3967	0.0355	1,233,071
	40~49세		0.3751	0.4167	-0.0369	1,325,722
	50~59세		0.1604	0.3902	-0.1362	1,464,058
	60세 이상		0.1002	0.6659	0.2625	982,702
	전체	0.4347	1.0000	0.4293	0.0053	1,277,688
2005	29세 이하		0.0374	0.2811	0.0640	1,333,242
	30~39세		0.2872	0.3415	0.0391	1,366,817
	40~49세		0.3759	0.3979	-0.0565	1,503,950
	50~59세		0.1816	0.3563	-0.0968	1,565,773
	60세 이상		0.1180	0.5588	0.2593	1,096,702
	전체	0.3942	1.0000	0.3888	0.0054	1,421,353

제 7장 주요 OECD 국가의 빈곤과 불평등 동향

제1절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해외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이다. LIS는 OECD를 중심으로 총 29개국¹⁴⁾의 가구 및 개인별 소득과 지출에 관한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비영리기구이다. 2005년 2월 현재 각 국가별로 최소 1개부터 최대 10개까지의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 1980년 이전의 historical database를 포함하여 Wave I(1980년)부터 5년 간격으로 현재 Wave V(2000년 전후)까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시점과 동향분석에 유의미한 시점 수 등을 고려하여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분석과 요인분해에는 Wave III(1990년 전후), Wave IV(1995년 전후), Wave V(2000년 전후) 데이터를 사용한다.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 state regime)분류에 따르고 있다. 그가 분류한 복지국가 레짐별 기본적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7-1-1> 에스핑-앤더슨(1990) 복지국가 레짐의 주요특징 및 포함된 국가

레짐	주요 특징	포함된 국가
자유주의	낮은 수준의 탈상품화 시장차별적 복지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조합주의 (보수주의)	중간정도의 탈상품화 사회적 급여는 주로 이전의 기여 및 지위와 관련이 있음.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사민주의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 보편적 급여와 높은 수준의 급여평등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 OECD 회원국이 23개국, 비회원국이 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LIS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복지국가 레짐을 참고로 해서 LIS 자료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민주주의유형 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조합주의유형 3개국(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자유주의유형 3개국(영국, 미국, 캐나다)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 국가와 분석시점은 아래 표와 같다.

<표7-1-2> 분석대상 국가 및 시점(LIS)

		Wave III	Wave IV	Wave V
사민주의	네덜란드	1991	1994	1999
	노르웨이	1991	1995	2000
	스웨덴	1992	1995	2000
조합주의	독일	1989	1995	2000
	이탈리아	1989	1994	2000
	스페인	1990	1995	2000
자유주의	캐나다	1991	1995	1999
	영국	1991	1994	2000
	미국	1991	1994	2000

자료: LIS(<http://www.lisproject.org/keyfigures/ineqtable.htm>)

제2절 주요 OECD 국가의 빈곤 동향

국가간 비교를 위해 활용한 빈곤율 등 다양한 빈곤지표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 빈곤의 관점에서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1. 빈곤율

빈곤의 양적 규모를 보여주는 빈곤율을 기준으로 각국의 빈곤 동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살펴본 빈곤 동향의 전반적인 특징은 사민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유럽대륙 조합주의 국가모형인 독일이 가장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합주의 국가 중 남부유럽 국가모형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해당하는 3개국 중 미국이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가이며, 영국과 캐나다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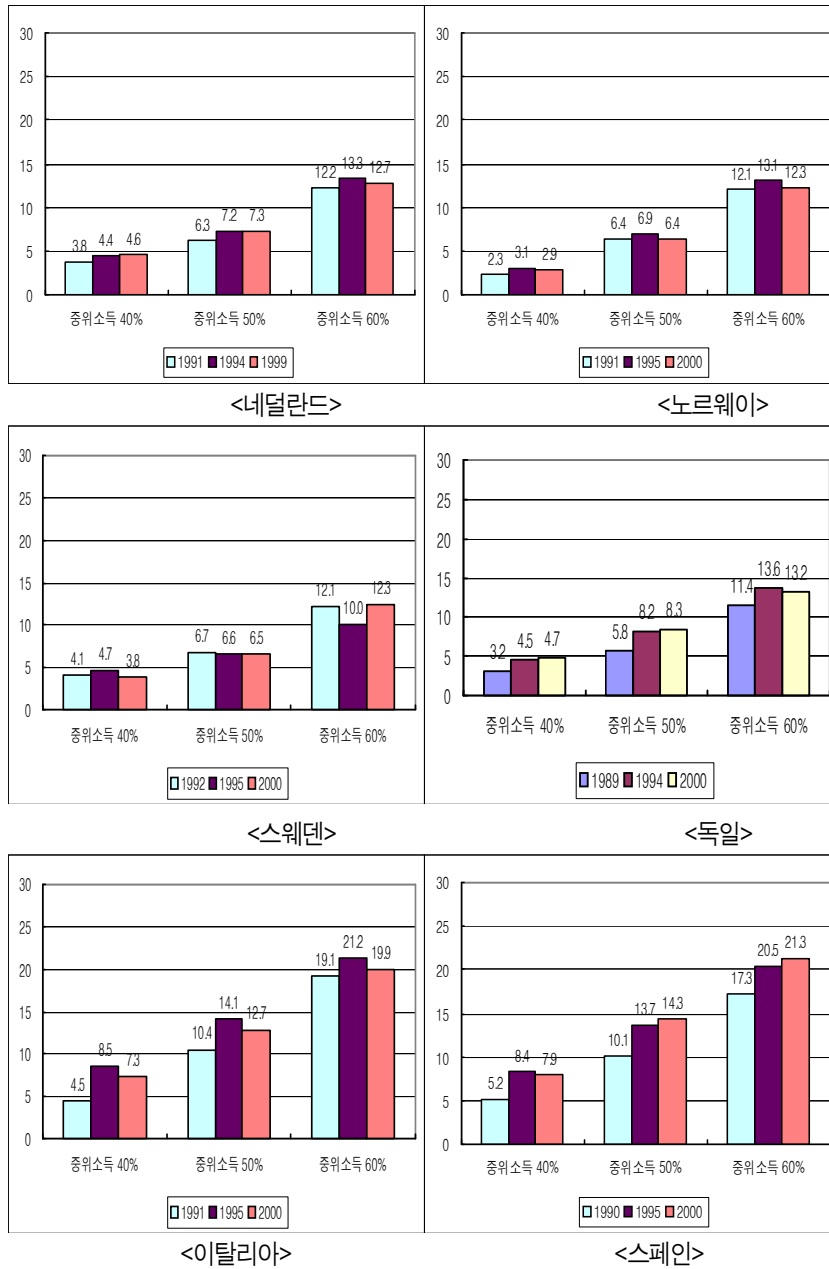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각국의 빈곤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992년 4.1%에서 1995년 4.7%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0년 3.8%로 다시 낮아졌으며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약 6.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1995년 10.0%에 비해 다소 높아져 2000년에는 12.3%까지 증가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2000년 2.9%로 스웨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비슷한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까지 빈곤수준이 다소 높아졌으나 2000년에는 다시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와 50%를 기준으로 90년대 초부터 빈곤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60% 기준으로는 90년대 후반 들어 다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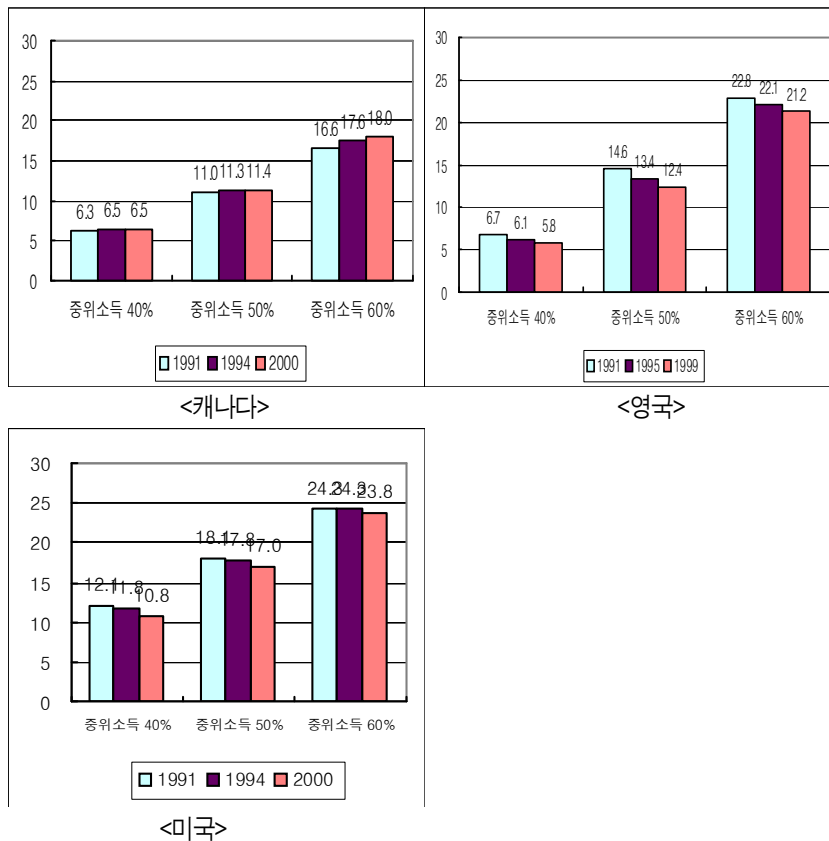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인 1989년에 비해 1990년대 초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후 증가경향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3.2%에서 2000년 4.7%로 상승하였으며,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지난 10여 년간 5.8%에서 8.3%로 빈곤율이 상승하였다.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94년 13.6%에서 2000년에는 13.2%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역시 전반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에는 빈곤수준이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4.5%에서 8.5%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7.3%까지 감소하였으며,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각각 10.4%→14.1%→12.7%, 19.1%→21.2%→19.9%로 비슷한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스페인은 90년대 후반에도 계속해서 빈곤율이 상승하여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4%p의 빈곤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인 영국과 미국은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이전 빈곤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던 것과 달리 199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해당할 정도로 영국보다 빈곤수준이 월등히 높지만 1990년대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위소득의 40%를 기

준으로 12.1%→10.8%,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18.1%→17.0%, 24.3%→23.8%로 낮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각각 6.7%→5.8%, 14.6%→12.4%, 22.8%→21.2%로 약간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과 비교할 경우 절대빈곤 수준에 가까운 중위소득의 40% 기준의 빈곤율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중위소득의 60%에서는 1999년에 21.2%로 미국과 2.6%p에 불과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빈곤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 다소 높아졌지만 뚜렷한 변화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7-2-1] 국가별 상대빈곤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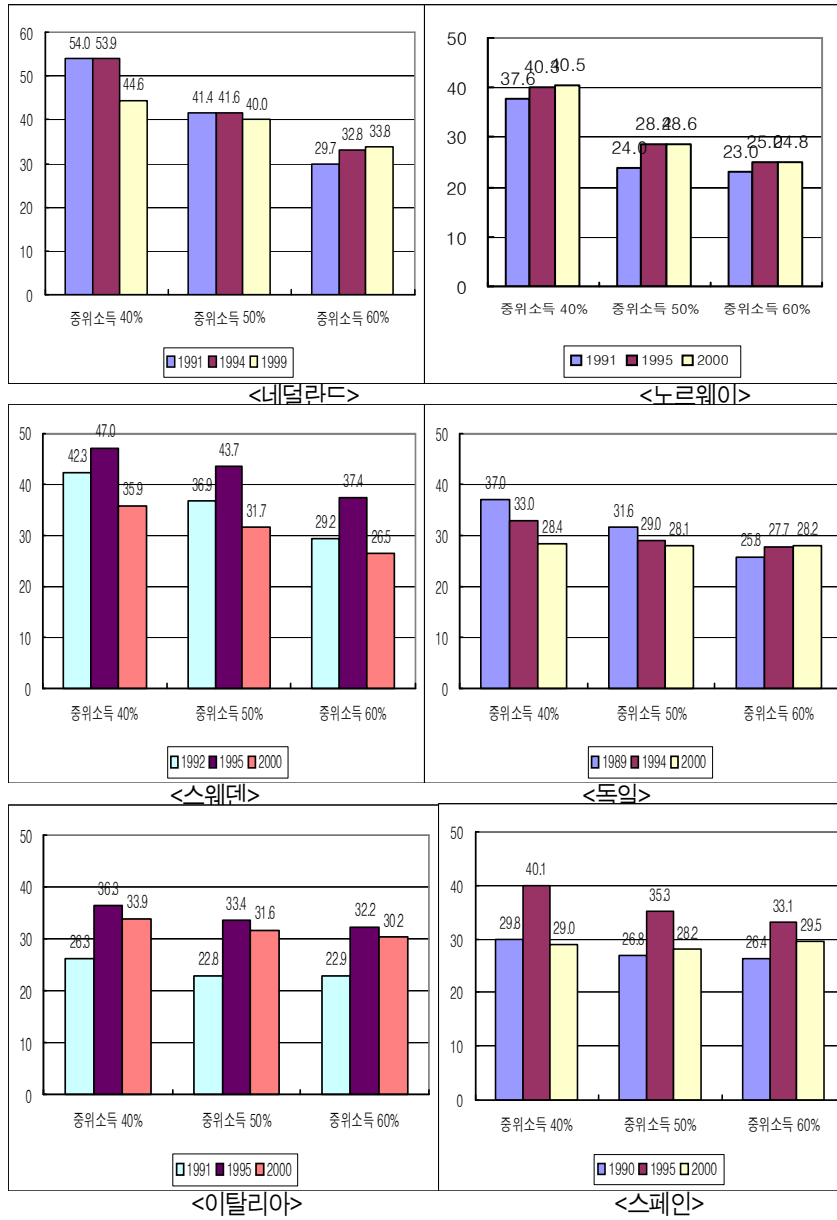
2. 기타 빈곤지수: 소득갭 비율 & 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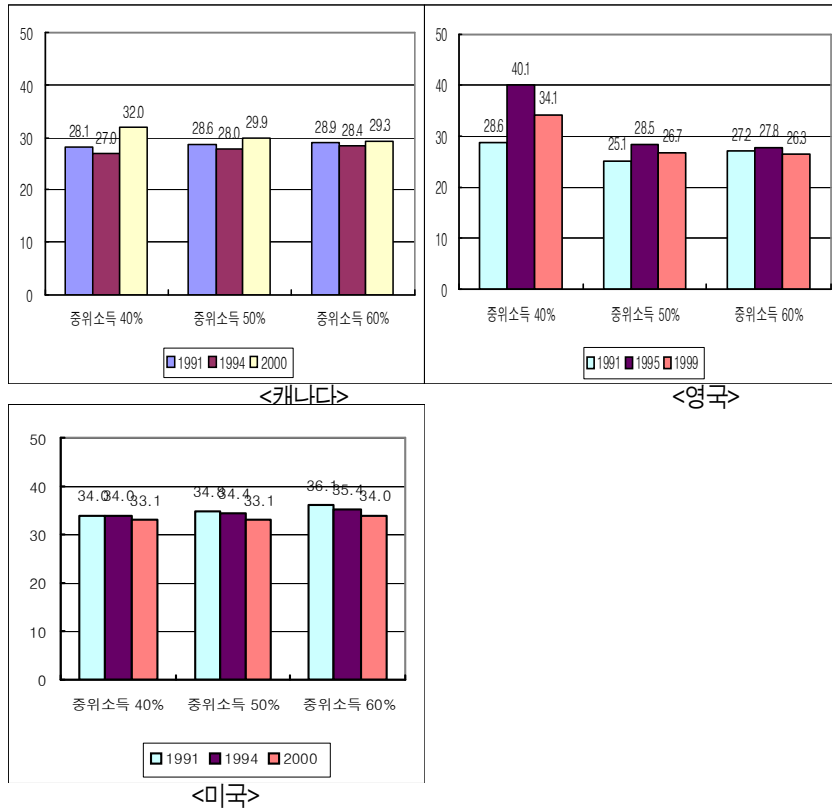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빈곤의 질적 측면에서 심도를 나타내는 소득갭 비율을 기준으로 각국의 빈곤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스웨덴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노르웨이는 다소 증가한 반면, 네덜란드, 독일, 미국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 약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각 국가별 빈곤의 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992년 42.3%에서 1995년 47.0%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는 35.9%로 오히려 더 낮아졌으며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36.9%→43.7%→31.7%, 29.2%→37.4%→26.5%로 변화되었다. 네덜란드의 소득갭 비율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약 10%p 정도 크게 감소하였으나,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오히려 약 4%p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갭 비율은 오히려 약간씩 낮아져 빈곤의 심도 측면에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위소득의 40%와 50%를 기준으로 각각 37.0%에서 28.4%, 31.6%에서 28.1%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89년 25.8%에서 2000년 28.2%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탈리아의 소득갭 비율은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전반부에 크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에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스페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까지의 증가폭이 이탈리아와 비슷하지만 소득갭 비율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인 영국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빈곤율은 계속해서 약간씩 감소하였으나 소득갭 비율은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각각 28.6%→40.1%→34.1%, 25.1%→28.5%→26.7%, 27.2%→27.8%→26.3%로 1990년대 중반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990년대 초 34.3%에서 2000년 33.1%,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34.8%→33.1%, 36.1%→34.0%로 변화되어 이 기간동안 나타난 빈곤율 감소경향과 함께 소득갭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아주 작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측정된 소득갭 비율은 약 4%p 정도 증가하여 32%에 이르렀다. 이처럼 주요국가의 빈곤 동향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보다는 개별국가별로 다양한 변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2-2] 국가별 소득갭 비율 변화 추이





다음으로, 빈곤의 양적 측면과 심도 측면, 그리고 빈곤층의 분배상태까지 반영하고 있는 센지수를 기준으로 각국의 빈곤동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살펴본 센지수 변화 동향의 전반적인 특징은 앞서 살펴본 빈곤율과 소득갭 비율의 변화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이 센지수가 낮은 국가군에 해당하며 이탈리아와 영국이 중간 그룹, 미국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국가별 센지수의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 후반부에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의 증가경향을 가져온 것은 독일의 경우가 주로 빈곤의 양적 규모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었던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빈곤의 질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빈곤율과 소득갭 비율 모두 다소 감소하여 센지수 역시 약간 낮아지고 있으나 변화폭은 매우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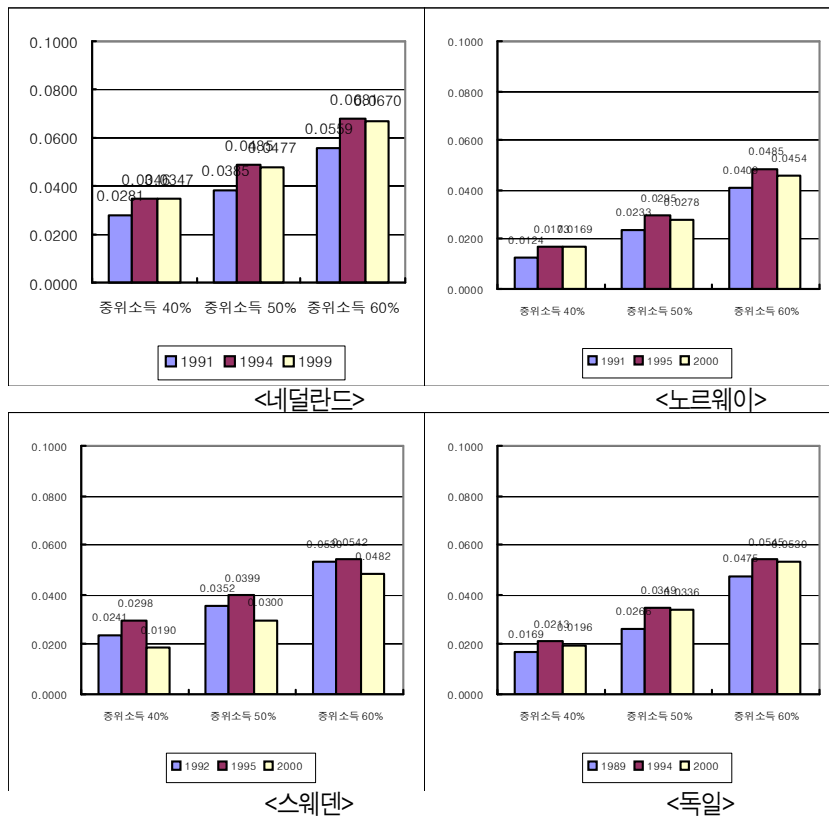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국가별 빈곤상태의 종합적인 변화를 센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992년 0.0241에서 1995년 0.0298로 90년대 전반부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는 0.0190으로 이전보다 더 낮아졌으며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역시 스웨덴과 유사한 변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스웨덴과 달리 감소폭이 작아 90년대 초반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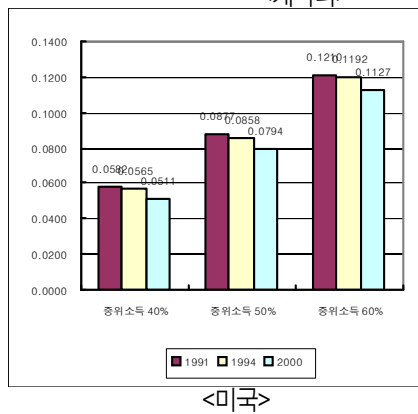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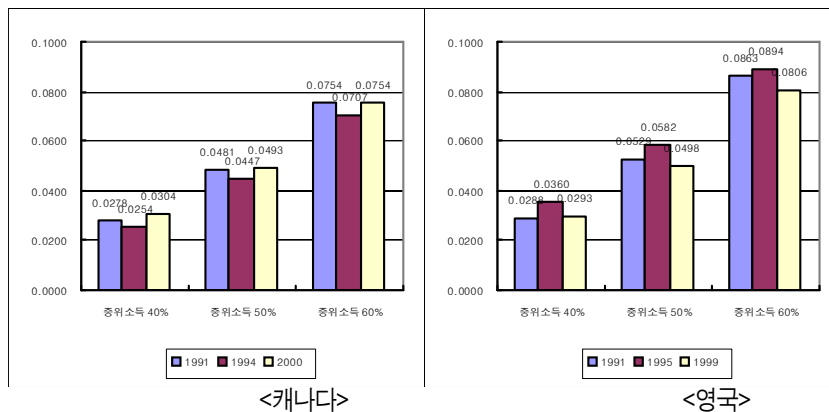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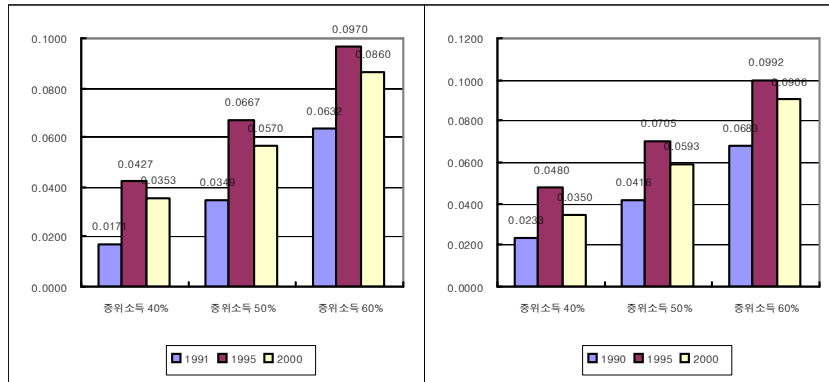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반 센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 후반부에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0.0169→0.0213→0.0196, 0.0266→0.0349→0.0336, 0.0475→0.0545→0.0530으로 변화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산출된 센지수는 0.0171→0.0427→0.0353, 0.0349→0.0667→0.0570, 0.0632→0.0970→0.0860으로 변화되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영국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2000년대 들어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0.0288→0.0360→0.0293, 0.0529→0.0582→0.0498, 0.0863→0.0894→0.0806으로 변화되었다. 반면에, 캐나다는 90년대 중반까지 센지수가 감소하였으나 그 후 증가하여 2000년에는 9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에는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0.0582→0.0565→0.0511, 0.0877→0.0858→0.0794, 0.1210→0.1192→0.1127로 변화되어 모두 약간씩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2-3] 국가별 센지수 변화 추이





제 3절 센지수 분해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여 센지수를 분해한 결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Wave III에서 Wave IV 기간, 즉 1990~1995년 기간 동안의 센지수 분해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합주의 국가들(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악화, 사민주의 국가들(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고투,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들(캐나다, 영국, 미국)의 선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빈곤층 사이의 분배가 35.4%, 빈곤율이 34.4% 악화되었으며, 평균소득만이 43.0% 정도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센지수가 26.8%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실업의 급증 뿐만 아니라 통일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던 독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중해식 조합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는 센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빈곤율, 평균소득, 분배)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해 협소한 사회복지의 결과를 반영해 주고 있다.

사민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들 역시 조합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그 정도는 약하지만, 전반적으로 빈곤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빈곤계층의 평균소득은 23.5% 향상되었지만, 빈곤율이 24.2% 높아졌고 빈곤층 내에서의 분배 역시 22.4% 악화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빈곤율은 미미한 개선(1.4%)을 보였지만, 빈곤층의 평균소득은 18.3% 악화되어 빈곤층의 생활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이 시기 동안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유형의 국가들 특히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빈곤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빈곤율이 5.4%, 빈곤층 사이의 분배가 5.2% 개선되고 평균소득만 3.2%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센지수는 7.5% 개선되었다. 미국 또한 빈곤율이 1.5%, 빈곤층 사이의 분배가 1.1% 개선되고 평균소득이 0.4% 악화되어 센지수가 2.3% 개선되었다. 다만, 영국의 경우 빈곤율이 6.9%, 빈곤층 사이의 분배효과가 3.4% 개선되었으나,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19.8% 악화되어 전체적인 센지수는 9.5%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유주의 국가들

의 공통적인 특징은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빈곤층의 삶의 질도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국가가 유럽대륙 국가들보다 좀더 일찍 경제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점과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으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 국가들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절대적인 빈곤율이 유럽대륙 국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7-3-1> 국가별 센지수 분해 결과(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

국가	연도	센지수 변화	빈곤율 효과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	빈곤층 사이 분배효과
네덜란드	1991-1994	23.1	24.2	-23.5	22.4
	1994-1999	-1.7	3.4	-7.4	2.3
노르웨이	1991-1995	23.2	7.3	9.5	6.3
	1995-2000	-5.9	-7.5	8.1	-6.6
스웨덴	1992-1995	12.3	-1.4	18.3	-4.6
	1995-2000	-28.2	-0.8	-31.0	3.6
독일	1989-1994	26.8	34.4	-43.0	35.4
	1994-2000	-3.6	2.1	-5.4	-0.3
이탈리아	1991-1995	62.6	29.7	7.9	25.0
	1995-2000	-15.7	-10.4	4.9	-10.2
스페인	1990-1995	51.6	25.4	1.9	24.3
	1995-2000	-17.3	5.6	-28.1	5.1
캐나다	1991-1994	-7.5	-5.4	3.2	-5.2
	1994-2000	9.8	1.1	5.4	3.2
영국	1991-1995	9.5	-6.9	19.8	-3.4
	1995-1999	-15.6	-7.7	1.0	-8.9
미국	1991-1994	-2.3	-1.5	0.4	-1.1
	1994-2000	-7.8	-4.5	0.7	-3.9

자료: LIS 원자료, 각년도.

다음으로, Wave IV(1990년대 중반)에서 Wave V(2000년경) 사이의 센지수 분해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전시기에 비해 빈곤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전 시기에 악화되었던 나라들 중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의 개선이 두드러지는 반면, 이전 시기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던 캐나다 등은 악화되었으며, 미국은 이전 시기에 이어 개선을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 시기에 전반적으로 빈곤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조합주의 복지국가들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이 시기 동안 공히 개선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전 시기에 악화의 폭이 컸던 국가일수록 반등으로 인한 개선의 폭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경우 이 시기에도 빈곤율과 빈곤층 간의 분배효과는 각각 5.6%와 5.1% 악화되었지만, 빈곤층의 평균소득이 28.1% 상승하여 전체적인 센지수가 17.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의 경향으로 개선된 이탈리아의 경우, 빈곤층의 생활수준은 4.9% 떨어졌으나 빈곤율이 10.4%, 빈곤층 사이의 분배가 10.2%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15.7%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사민주의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진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평균소득이 31.0%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센지수는 28.2%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국가 중 미국은 빈곤층의 평균소득은 정체된 가운데 빈곤율이 4.5%, 빈곤층 간의 분배가 2.9% 개선되어 전체 센지수는 7.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센지수가 개선된 유일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이 시기 동안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구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이전의 빈곤율이 매우 높았던 데 대한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높은 노동유연성과 근로유인형 복지제도(workfare)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지적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표 7-3-2> 국가 간 센지수 분해 결과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센지수변화	빈곤율효과	빈곤층의 평균소득효과	빈곤층사이의분 배효과	국가
(+)	(+)	(+)	(+)	노르웨이 I, 이탈리아 I, 스페인 I, 캐나다II
	(+)	(-)	(+)	네덜란드 I, 독일 I
	(-)	(+)	(-)	스웨덴 I, 영국 I
(-)	(+)	(-)	(+)	네덜란드II, 스페인II
	(+)	(-)	(-)	독일II,
	(-)	(+)	(-)	노르웨이II, 이탈리아II, 미국 I,미국II, 캐나다 I,영국II
	(-)	(-)	(+)	스웨덴II
	(-)	(-)	(-)	-

주: 1) I: WaveIII~WaveIV, II: WaveIV~Wave V

요컨대, 주요 국가들의 센분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빈곤상향도 경기와 마찬가지로 부침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차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상황, 실업률 등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민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 즉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빈곤상황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들어 개선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 국가들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두 기간 동안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유럽에 비해 미국의 빈곤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4절 주요 OECD 국가의 불평등 동향

1. 불평등 변화추이

전체적인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볼 경우, 지난 70~80년대와 90년대 후반을 비교해 보면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의 지니계수가 높아지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70~80년대의 복지국가모형에서 90년대 들어 세계화를 통한 노동시장유연화,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출의 축소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표의 국가별 불평등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경우 1995년 0.238이던 지니계수가 2000년에는 0.251로 악화되었으며, 스웨덴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지니계수가 0.221에서 0.252로 악화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상위 10분위 대비 하위 10분위의 비율이 1995년 2.61배에서 2000년 2.96배로 증가하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니계수나 10분위배율은 여전히 OECD 국가들,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조합주의 유형의 국가로 분류되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의 불평등도 악화가 두드러진다. 독일의 경우 1989년 0.257이던 지니계수가 1994년 0.272로 악화되었으나 2000년에는 다시 0.264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1991년 0.290이던 지니계수가 1995년에는 0.338로 크게 악화되었다가 2000년에는 0.333으로 약간 낮아졌다. 스페인 역시 1990년 0.303이던 지니계수가 1995년 0.353으로 크게 높아졌다가 2000년 0.340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비율이 1990년 3.96에서 1995년 5.10으로 크게 높아져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겠으나, 주요하게는 1990년대 정점에 달했던 유럽대륙 국가들의 고실업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원인과 함께 독일 통일의 후유증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4-1> 국가별 불평등 변화 추이

구분	연도	지니계수	엡킨슨지수 ($\epsilon=0.5$)	엡킨슨지수 ($\epsilon=1.0$)	P90/10	P90/50
네덜란드	1991	0.266	0.065	0.141	3.02	1.73
	1994	0.253	0.057	0.126	3.07	1.71
	1999	0.248	0.055	0.120	2.98	1.67
노르웨이	1991	0.231	0.047	0.095	2.79	1.58
	1995	0.238	0.052	0.104	2.83	1.57
	2000	0.251	0.059	0.117	2.80	1.59
스웨덴	1992	0.229	0.047	0.102	2.78	1.59
	1995	0.221	0.047	0.104	2.61	1.56
	2000	0.252	0.056	0.112	2.96	1.68
독일	1989	0.257	0.058	0.118	2.99	1.73
	1994	0.272	0.064	0.128	3.39	1.82
	2000	0.264	0.059	0.119	3.29	1.77
이탈리아	1991	0.290	0.069	0.135	3.76	1.85
	1995	0.338	0.097	0.195	4.65	2.00
	2000	0.333	0.093	0.183	4.48	1.99
스페인	1990	0.303	0.076	0.149	3.96	1.97
	1995	0.353	0.106	0.217	5.10	2.23
	2000	0.340	0.096	0.189	4.78	2.09
캐나다	1991	0.281	0.066	0.134	3.78	1.82
	1994	0.284	0.067	0.136	3.87	1.85
	2000	0.302	0.078	0.158	3.95	1.88
영국	1991	0.336	0.094	0.186	4.67	2.06
	1995	0.344	0.100	0.204	4.57	2.10
	1999	0.345	0.100	0.197	4.59	2.15
미국	1991	0.338	0.096	0.201	5.65	2.04
	1994	0.355	0.105	0.214	5.85	2.15
	2000	0.368	0.115	0.224	5.45	2.10

자료: LIS(<http://www.lisproject.org/keyfigures/ineqtable.htm>)

다음으로,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사민주의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합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제3장에서 이 기간 동안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빈곤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불평등은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1년 0.338이던 지니계수가 1994년에는 0.355로, 다시 2000년에는 0.368로 지속적인 큰 폭의 악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영국과 캐나다 역시 이 시기 동안 빈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비율로 볼 때, 미국은 이 시기 동안 5.65배→5.85배→5.45배로 나타나 소득의 분화가 중하위계층보다는 상위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불평등의 절대적 수준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자유주의 국가가 가장 높았으며,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1990년 이래 불평등도가 악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소득원천별 지니분해

아래 표는 주요 OECD 국가별로 지니분해 결과, 각 소득원천이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에 미친 절대적 및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스웨덴(0.25), 네덜란드(0.25), 노르웨이(0.26), 독일(0.26) 등 유럽대륙 복지국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캐나다(0.30)가 중간 정도 수준이며, 미국(0.35)과 영국(0.36)은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주요 OECD 국가들에서는 근로소득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기여도)을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10%)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65%)이 전체 지니계수를 낮추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네덜란드(각각 -7%와 -56%), 노르웨이(-19%와 -52%), 독일(-7%와 -61%)도 공적이전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니계수를 낮추는데 매우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캐나다(각각 -8%와 -49%), 영국(-14%와 -33%)도 공적이전과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니계수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2%)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는데 비해 세금 및 기여금(-45%)의 지니계수 감소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요컨대, 사민주의와 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국가들은 일차적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이 높게 나타나지만, 공적 이전과 조세를 통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의 경우 매우 평등하게 나타났다. 캐나다, 미국,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 역시 정도는 덜하지만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7-4-2> 각 소득원천의 총불평등도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여도(2000년전후)

절 대 적 기 여 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세금및 기여금	가처분 소득
	네덜란드	0.33	0.03	0.01	0.02	-0.02	0.04	-0.14	0.25
	노르웨이	0.32	0.05	0.07	-0.04	-0.05	0.00	-0.14	0.26
	스웨덴	0.39	0.01	0.04	-0.02	-0.03	0.01	-0.16	0.25
	독일	0.30	0.09	0.03	0.00	-0.02	0.01	-0.16	0.26
	캐나다	0.38	0.04	0.02	0.01	-0.02	0.03	-0.14	0.30
	영국	0.40	0.07	0.02	-0.03	-0.05	0.02	-0.12	0.35
	미국	0.44	0.04	0.04	0.01	-0.01	0.02	-0.17	0.36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세금및 기여금	가처분 소득
상 대 적 기 여 도	네덜란드	1.29	0.14	0.05	0.08	-0.07	0.15	-0.56	1.00
	노르웨이	1.24	0.18	0.25	-0.16	-0.19	0.01	-0.52	1.00
	스웨덴	1.55	0.04	0.16	-0.10	-0.14	0.04	-0.65	1.00
	독일	1.16	0.35	0.11	-0.02	-0.07	0.06	-0.61	1.00
	캐나다	1.27	0.13	0.06	0.03	-0.08	0.10	-0.49	1.00
	영국	1.14	0.20	0.07	-0.07	-0.14	0.07	-0.33	1.00
	미국	1.20	0.11	0.12	0.03	-0.02	0.05	-0.45	1.00

3. 연령별 엔트로피분해

2000년 전후, 즉 Wave V를 기준으로 할 때, 각 나라의 연령별 GE분해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전체적인 엔트로피지수의 수준은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네덜

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각각 0.1382, 0.1201, 0.1177로써 다른 비교대상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으며, 연령별 집단내 불평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내 불평등이 공히 30~50대 사이의 왕성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연령층에 비교해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합주의 국가로 분류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의 경우 독일을 제외하고는 사민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GE(0)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집단내 불평등에 있어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집단내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된 영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미국이 0.2522로써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특성에 있어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집단내 불평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4-3> 국가별 연령별 엔트로피분해(2000년 전후)

구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GE(0) _k	log(1/ λ_k)
네덜란드 (1999)	29세 이하	0.1382	0.0875	0.1581	0.1048
	30~39세		0.2718	0.1537	0.0252
	40~49세		0.2710	0.1152	-0.0132
	50~59세		0.1769	0.1487	-0.1233
	60세 이상		0.1928	0.1180	0.0605
	전체		1.0000	0.1359	0.0023
노르웨이 (2000)	29세 이하	0.1201	0.1161	0.1479	0.2432
	30~39세		0.2481	0.0908	0.0362
	40~49세		0.2509	0.0950	-0.0974
	50~59세		0.1675	0.1280	-0.2002
	60세 이상		0.2173	0.1144	0.1428
	전체		1.0000	0.1098	0.0103
스웨덴 (2000)	29세 이하	0.1177	0.1084	0.1679	0.3074
	30~39세		0.2314	0.0867	0.0511
	40~49세		0.2369	0.0912	-0.0628
	50~59세		0.1874	0.1090	-0.2297
	60세 이상		0.2359	0.1075	0.1052
	전체		1.0000	0.1057	0.0120
독일 (2000)	29세 이하	0.1260	0.0710	0.1470	0.3707
	30~39세		0.2306	0.1060	0.0723
	40~49세		0.2400	0.1025	-0.0860
	50~59세		0.1742	0.1180	-0.1690
	60세 이상		0.2842	0.1303	0.0562
	전체		1.0000	0.1171	0.0089
이탈리아 (2000)	29세 이하	0.2008	0.0279	0.1932	0.0842
	30~39세		0.1772	0.1863	0.1133
	40~49세		0.2479	0.2032	0.0357
	50~59세		0.2354	0.2000	-0.1276
	60세 이상		0.3117	0.1976	0.0069
	전체		1.0000	0.1974	0.0034
스페인 (2000)	29세 이하	0.2073	0.0523	0.2049	0.1013
	30~39세		0.1949	0.1836	0.0427
	40~49세		0.2214	0.2188	-0.0427
	50~59세		0.1983	0.2003	-0.1783
	60세 이상		0.3330	0.2002	0.1117
	전체		1.0000	0.2013	0.0060

자료: LIS, 「LIS 원자료」. 각년도

(표 계속)

구분		전 체 불평등도	집단 k 비중 ν_k	집단내 불평등도	집단간 불평등도
				$GE(0)_k$	$\log(1/\lambda_k)$
캐나다 (2000)	29세 이하	0.1710	0.1096	0.1873	0.1860
	30~39세		0.2545	0.1575	0.0472
	40~49세		0.2876	0.1510	-0.0382
	50~59세		0.1765	0.1926	-0.1824
	60세 이상		0.1718	0.1558	0.0989
	전체		1.0000	0.1648	0.0062
영국 (1999)	29세 이하	0.2171	0.1079	0.2451	0.1313
	30~39세		0.2414	0.2084	0.0340
	40~49세		0.2307	0.1978	-0.1045
	50~59세		0.1843	0.2248	-0.2124
	60세 이상		0.2357	0.1733	0.2260
	전체		1.0000	0.2047	0.0124
미국 (2000)	29세 이하	0.2522	0.1296	0.2436	0.2696
	30~39세		0.2482	0.2285	0.0822
	40~49세		0.2699	0.2258	-0.0903
	50~59세		0.1616	0.2553	-0.2260
	60세 이상		0.1908	0.2636	0.0891
	전체		1.0000	0.2407	0.0115

자료: LIS, 「LIS 원자료」. 각년도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된 지표의 변화추이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등의 변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의 경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상소득 기준 8.19%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지만,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고, 2005년 현재 5.70%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위소득의 40, 50, 60%를 빈곤선으로 한 상대빈곤율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단 경상소득 상대빈곤율의 경우(중위 50% 기준) 11.7%로 절대빈곤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0.52%보다도 높았다.

한편 2002년 이후 빈곤율의 증가와 함께 빈곤격차비율과 소득격차비율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확대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화도 문제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니계수를 통해 본 불평등의 경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높아진 지니계수가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2년 이후 다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도시근로자의 경상소득 지니계수는 2005년 0.299로, 전체가구의 경우 0.327로 추계되었다. 한편 도시근로자 소비지출의 지니계수는 2003년 이후의 악화세가 두드러졌다. 앳킨슨지수나 타일지수를 통해본 경상소득의 불평등도 최근 악화되어 2005년의 경우 최근 10년간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1999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00년 다소 완화되었던 분위수배율과 10분위배율도 최근들어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의 경상소득 10분위 배율은 1996년 6.6배에서 2005년 8.0배로 확대되었는데, 상위분위의 점유율 증가보다 하위분위의 점유율 감소폭이 더 커 빈곤의 심화 경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위수배율과 10분위 배율의 차이를 통해 분위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분위 내 불평등(특히 하위 분위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프슨지수와 ER, EGR 지수를 통해 양극화지수를 계측하였다. 울프슨지수를 통해 본 경상소득 양극화의 경우,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7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상

태이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ER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고, EGR지수의 경우 오히려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감소추이를 보였다. 다만 2002-2004년간 모든 양극화지수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센지수의 분해를 통해 빈곤의 변화를 빈곤율 변화와 빈곤층 소득변화효과,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996-1999년 사이에는 근로자가구의 빈곤이 심화되면서 빈곤층의 평균소득효과도 악화되었고 빈곤층 내부의 분배도 악화되었다. 반면 1999-2002년 사이에는 빈곤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빈곤층 사이의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2005년 사이 근로자가구의 빈곤상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빈곤율이 증가하였고, 빈곤층 내부의 소득분배도 크게 악화되었다.

2003-2005년 동안의 불평등 변화를 지니분해를 통해 고찰한 결과, 이 시기동안 지니계수의 변화가 미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원천별 불평등과 각 원천의 구성,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78-79%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이전소득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다.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은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빈곤의 확대와 심화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공공부조가 빈곤율을 줄이고 빈곤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확대, 심화시키는 요인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기초보장의 수급조건 개선 등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대빈곤의 심화를 통해 볼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불평등의 경우 외환위기로 악화된 분배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소득 상위분위와 하위분위의 격차가 확대되고, 분위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아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지출의 불평등완화 효과는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지만, 그 절대적인 크기는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장 지출과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양극화의 경향은 다른 연구(전병유 외 2005)의 지적과는 달리 뚜렷하게 강화되는 모

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실제로 양극화의 경향이 크지 않다기보다 양극화지수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소득 10분위 배율이나 5분위 배율의 확대추세와 양극화 지수의 변화추세를 비교해 볼 때 이런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ER과 EGR지수로 표현되는 양극화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군집화경향보다는 소득분위별 불평등이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완만하지만 올프슨지수의 증가추이는 우리나라의 소득 중간계층이 점차 얇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산층의 소득 하방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데,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그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좀더 많은 소득계층의 소득획득기회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빈곤과 불평등의 추이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고,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료의 한 계상 취약계층의 다수를 구성하는 1인가구와 농어가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표를 통한 분석은 우리 사회의 전체 소득분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빈곤층 및 소득 각 계층의 구성변화, 빈곤과 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4~2008년 국가재정운영계획분석』, 2004.
- 김미곤 외,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김진욱, 「빈곤층의 변화요인 분석 -SEN 지수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제 11권, 2호, 2004.
- 나성린·현진권,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3.
-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박기백·김진·전병목,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순일·최현수·강성호,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의 동학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년도.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성명재·김종면,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여유진 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유경준·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윤진호,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전병유·김혜원·신동균,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

원, 2002.

최병호 · 김태완,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21권 3호, 2005. pp.205-231.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8권 2호, 2002, pp.1-20.

Atkinson, A.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2, 1970, pp.244-63.

Atkinson, A. & F. Bourguigno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Elsevier, 2002.

Cowell, F. A. *Measuring Inequality*, Prentice Hall, 1995.

Cowell, F. A. ed.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Inequality* vol.1-2, Edward Elgar, 2003.

Duclos, J-Y., J. Esteban & D. Ra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72, No.6, 2004. pp.1737-1772

Esteban, J., C. Gradin & D. Ray,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No.218, Syracuse University, 1999.

Esteban, J. & D. Ray,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62, no.4, 1994, pp.819-851.

Foster, J., J. Greer, & E. Thorbecke,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 *Econometrica*, vol.52, no.3, 1984, pp.761-6.

Grusky, D. B. & R. Kanbur, *Poverty and Inequality*, Stanford Univ. Press, 2006.

Johnson, D. T. , *Poverty, Inequality and Social welfare in Australia*, Physica-Verlag, Heidelberg, 1996.

Kakwani, N., "On a Class of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48. 1980. pp.437-446.

OECD,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Studies*, no.19, 1995.

Ravillion, M., "Measuring Social Welfare with and without Poverty Lin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4, No.2, 1994, pp.359-364.

Subramanian, S. ed. *Measurement of Inequality and Poverty*, Oxford Univ. Press, 2001.

Sen, A.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1976. in Cowell ed.(2003).

Theil, H. "The Measurement of Income Inequality," 1967, in Cowell ed.(2003).

- Wang, Y-Q & K-Y Tsui, "Polarization Orderings and New Classes of Polarization Indice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Vol.2, No.3, 2000, pp.349-363.
- Wolfson, M. "Conceptual Issues in Normative Measurement: When Inequality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4, No.2, 1994, pp.353-358.

부록

□ 센지수 추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니계수 추정결과

가. 도시근로자기준(인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0.1952	0.1699	0.1579	0.1690	0.1572	0.1572
1997	0.2262	0.1810	0.1621	0.2209	0.1793	0.1609
1998	0.2933	0.2404	0.2102	0.2843	0.2336	0.2049
1999	0.2488	0.2139	0.1942	0.2422	0.2062	0.1868
2000	0.2314	0.1966	0.1789	0.2156	0.1832	0.1688
2001	0.2131	0.1839	0.1702	0.2080	0.1758	0.1620
2002	0.1829	0.1642	0.1571	0.1777	0.1548	0.1481
2003	0.2610	0.2240	0.2061	0.2573	0.2167	0.1968
2004	0.2664	0.2300	0.2134	0.2589	0.2180	0.1999
2005	0.2387	0.2207	0.2079	0.2185	0.1988	0.1877

구분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0.2137	0.1783	0.1610	0.0820	0.0966	0.1079
1997	0.2342	0.1835	0.1623	0.0896	0.0982	0.1065
1998	0.3259	0.2529	0.2145	0.0972	0.1109	0.1203
1999	0.2624	0.2156	0.1911	0.0923	0.1038	0.1137
2000	0.2933	0.2180	0.1854	0.0873	0.0958	0.1057
2001	0.2409	0.1930	0.1717	0.0858	0.0920	0.0980
2002	0.2367	0.1796	0.1598	0.0926	0.0942	0.1034
2003	0.3193	0.2433	0.2433	0.1088	0.1098	0.1135
2004	0.3145	0.2482	0.2151	0.0971	0.1030	0.1101
2005	0.3018	0.2389	0.2075	0.0955	0.1004	0.1092

나. 전국가계조사기준(인구)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0.4528	0.3819	0.3386	0.3707	0.3153	0.2845
2004	0.4202	0.3632	0.3246	0.3470	0.3022	0.2725
2005	0.4146	0.3659	0.3292	0.3292	0.2943	0.2689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2003	0.4432	0.3560	0.3077	0.1345	0.1353	0.1374
2004	0.4347	0.3495	0.3019	0.1356	0.1341	0.1362
2005	0.4324	0.3513	0.3022	0.1331	0.1356	0.1382